

---

#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

2007. 12

연구책임자 : 황 정 미 (본원 연구위원)  
김 이 선 (본원 연구위원)  
이 명 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 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동 주 (고려대학교 사회학 석사)



## 【특별연구위원회】

| 구 분 | 성 명   | 소 속 및 직 위           |
|-----|-------|---------------------|
| 위원장 | 한 경 구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 위 원 | 이 혜 경 | 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 |
|     | 설 동 훈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 김 이 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 이 란 주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
|     | 이 진 영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1차 연도”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 협동연구총서<br>일련번호 | 연구보고서명  | 연구기관  |
|----------------|---|---|
| 2007-19-01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br>정책 패러다임 구축(I):<br>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2007-19-02     |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br>대한 조사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2007-19-03     |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br>일터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 2007-19-04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br>수용성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2007-19-05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br>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2007-19-06     |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br>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br>호주와 일본의 사례       | 한국문화인류학회·<br>울릉공대학<br>아시아-태평양<br>사회변화연구센터(호주) |
| 2007-19-07     |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br>국제이해교육원                        |

## 2. 참여연구진

|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진   |
|----------------|--|---|
| 주관<br>연구<br>기관 | 한국여성정책<br>연구원  | 김이선<br>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br><br>이진영<br>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 한국여성정책<br>연구원  | 황정미<br>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br><br>이명진<br>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br><br>최 현<br>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협력<br>연구<br>기관 | 한국노동<br>연구원  | 이정환<br>청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br><br>이규용<br>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                | 한국여성정책<br>연구원  | 이선주<br>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br><br>최훈식<br>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                | 한국청소년정책<br>연구원   | 이창호<br>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br><br>권순희<br>전주교육대학교 교수<br><br>서덕희<br>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br><br>이은하<br>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br>지역복지팀장                     |
|                | 한국<br>문화인류학회/<br>호주 울롱공대학<br>아시아-태평양<br>사회변화연구센터<br>(호주) | 이태주<br>한성대학교 교양과 교수<br><br>권숙인<br>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br><br>Julia Martinez<br>울롱공대학 교수(호주)<br><br>Yamamoto Kaori<br>아이치현립대학 문학부 교수(일본) |
|                | 유네스코<br>아시아태평양<br>국제이해교육원                                | 한건수<br>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br><br>설동훈<br>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  |   |

## 연구요약

### 1. 연구 목적

- 노동이주자, 국제결혼이주자 등의 급증으로 한국사회는 급속히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외국인 이주자는 전체 인구의 2%를 넘어 서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주의 증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기존 연구에서는 인종주의(racism), 외국인 혐오(xenophobia) 등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어 왔으나 타인종·타민족에 대한 편견은 역사적 배경이나 이주민의 비중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본 연구에서는 이주의 증대와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론적 개념으로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을 제시하고, 기존연구성과에 근거하여 4가지 차원으로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을 측정하였음. 네 가지 차원은 ①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②국민 정체성과 시민의식(citizenship), ③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대한 태도, ④종족적 배제주의(ethnic exclusionism) 임.
-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은 완결된 척도가 아니며, 기존연구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추출된 네 가지 하위 차원들로 구성된 탐색적 개념임. 사회적 거리, 종족적 배제주의는 미국 및 유럽의 자료와 비교하여 제시하였음.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3명을 대상으로 2007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음.

## 2.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사회적 거리 측정에서 널리 쓰이는 보가더스 척도(Borgadus scale)를 이용하여 한국과 교류가 빈번하거나 이주자의 출신국에 해당하는 외국인 집단(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남아시아인, 몽골인), 그리고 새터민, 조선족 등 8개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였음.
-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미국인을 가장 가깝게 여기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새터민, 조선족의 순서였음. 반면 가장 거리감을 멀게 느끼는 대상은 남아시아인과 몽골인이었음. 전반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었음. 응답자들은 외국인을 동료, 이웃, 친구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비교적 허용적이나 결혼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거리를 두고 있음. 결혼 상대자로 가장 찬성도가 높은 집단은 새터민과 조선족이었음. 미국의 사회적 거리감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미국인에 비해 멀게 느끼고 있음.
- 외국인에 대한 정서적 호감도를 알아보기 위해 위의 8개 집단에 대한 태도를 EPA 척도(호감도 emotion, 영향력 power, 능동성 activity)로 조사하였음. 분석 결과 호감도 차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대상은 미국인이며 그 다음은 조선족과 새터민이었음. 같은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호감도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됨. 반면 가장 호감도가 낮은 집단은 중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낮은 것은 남아시아인이었음. 이러한 평가는 영향력이나 능동성에 대한 응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한국인은 친구, 이웃, 동료로서 외국인을 수용하는 데에는 그다지 배타적 태도가 나타나지 않으나, 국민·가족·혈연이라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는 이러한 관대함이 급속도로 약해짐. 아울러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출신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냄.

### 3.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시티즌십

-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인’, 즉 국민 정체성(national identity)에 대한 응답을 민족적 요소와 시민적 요소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한국인들은 혈통 중심의 민족적 요소만을 중시하지 않고 시민적 요소(법적·제도적 요인)도 상당히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지주의에 의한 국적 취득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등 단일민족을 신봉하는 폐쇄적인 국민정체성은 점차 변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에 다수가 찬성하였으며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등 상반되는 경향도 엿보임.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 하나의 합의된 정의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세대별로는 20, 30대의 젊은 층이 국민정체성에 대해 자유주의적 성향과 개방적 태도를 보여주었음. 20대는 국민정체성에서 아버지가 한국인인가 여부 보다는 한국의 법과 정치제도를 존중하는 태도를 더 중시하여 다른 연령집단과 확연한 의견 차이를 나타냈음. 또한 이들은 극단적 소수집단의 집회도 허용해야 한다는 문항에 찬성비율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시민적 관용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주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노동법적 권리, 가족동반, 정책에 이주자의 의견수렴, 인권 보호, 이주자 자녀의 국적취득 등 많은 문항에서 지원을 찬성하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그러나 이주자의 투표권 허용이나 적극적 조치(대학입학시 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4. 문화다양성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지향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찬성 여부와, 다문화 사회의 한계에 대한 태도를 교차하여 응답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태도에서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음. 먼저, 다문화 사회에 찬성하면서 다문화 수용능력에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집단(개방적 지향집단)은 전반적으로 이주자의 증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주자를 위한 지원 정책에 찬성하는 응답율도 높았음. 또한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협적 집단이라는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음. 한편 다문화 사회에 찬성하면서도 다문화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제한적 지향집단)은 이주자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외국인의 권리 보장 정책에도 찬성하지만 다른 한편 외국인과의 갈등에 민감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음. 마지막으로 다문화 사회에 반대하며 다문화 수용능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집단(부정적 지향집단)은 일관되게 이주의 증대와 이주자 지원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나타냈음.
- 외국과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국가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높고 나이가 젊을수록 외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특히 젊은 연령층과 고학력층에서는 국가·지역별로 관심의 위계가 뚜렷하였는데, 미국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일본 - 중국 - 동남아의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자연과 관광명소, 언어, 역사와 문화유산, 음식, 대중문화, 공연 및 문화예술 등 영역별로 외국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자연과 관광명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언어, 역사와 문화유산의 순서였음. 공연예술이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 외국과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연령과 교차하여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50-60대는 관광과 자연풍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감각의 대상으로서의 외국에 편향되어 있음. 이에 비해 20대는 음식에 대

한 관심, 그리고 문화자본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미국과 일본의 언어 및 문화에 관심이 높았음. 외국과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20대로 갈수록 일본과 미국 지향적 태도가 강화되고 국가별, 영역별로 관심의 위계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자의 출신국인 아시아 지역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낮았고, 이러한 이들의 태도는 로컬 상호문화지향(local interculturalism)보다는 글로벌 상호문화지향(global interculturalism, Kymlicka 2003)에 가까운 특징을 갖고 있음.

## 5. 이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종족적 배제주의

- 유럽의 대표적 사회조사인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에 사용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족적 배제주의(ethnic exclusionism)’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조사하였음. 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과 이주자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완화되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학생층에서 배타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종족적 배제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젊을수록 외국인에 대해 보다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보다는 응답자의 가치관 변인이 종족적 배제주의 점수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성평등을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단일민족 의식이 약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에 찬성하고 경제적 진보성 문항에 동조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종·타민족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음. 그리고 정치적 진보 성향이 강하고, 외국인이 한국인이 위협을 가하는 존재라는데 동의하지 않을수록 개방적인 태도는 더 강화되었음.
- 한국의 조사결과를 유럽(EU 평균)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인은 외

국민과 이주자에 대해 관용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 그런데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 범주별로 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남. 즉 한국인들은 유럽인들에 비해 이주자의 시민권 허용, 다문화 사회에 대한 찬성, 문화적 다양성 인정 등에서 모두 이주자에게 더 관대한 응답을 하고 있지만, 유독 이주자 송환정책에 대해서는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즉, 고용계약이 끝난 근로자나 불법 체류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데 대한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남. 물론 유럽과 조사 문항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미래의 한국 시민이 아닌 일시 체류자로 보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를 지금까지 사실상 허용하지 않았던 한국의 정책 현실도 이러한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관용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액면 그대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유럽 국가에 비해 인종·민족간 갈등 경험률이 적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이주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보다 허용적인 것으로 분석됨.

## 6. 결론 및 정책 제언

- 네 가지 차원에서 한국인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을 조사, 분석해본 결과 한국인의 태도에서 나타난 흐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첫째, 한국인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고 법과 제도의 변화, 외국인 이주자 지원정책의 필요성 등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거리감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이들을 국민이나 가족이라는 내집단(ingroup) 안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주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변화에는 어느 정도 지체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둘째, 문화 다양성의 수용에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20대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대는 대체로 외국문화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이들의 관심은 이른바 선진국 문화에 치우쳐 있으며 세계화에 대한 균형감각이나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

의 출신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 셋째, 외국의 기존연구에서는 전문직·자유직 종사자나 화이트칼라층,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외국인과의 이주자에 대한 관용성이 높으며 생산직과 하층 서비스직에서 배타적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됨.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 한국에서는 외국과 달리 생산직 종사자가 매우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가구소득이 많은 최상층이 중산층에 비해 오히려 더 배타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 아직 계층별 태도는 형성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이주자가 한국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보는가 여부는 이러한 태도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사회정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도입을 제안함. 다문화 사회정책의 개념은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전제하고 있음. 첫째 외국인을 지원하는 정책의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다원 민주주의 또는 심의 다문화주의 차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둘째 문화적 체험을 확대하는 ‘참여적 다문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아동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체계적인 시민교육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네 가지를 제안함.

**첫째,** 사회교육에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확대 : 현재 일부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이해교육을 전반적인 다문화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강사양성 및 운영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집단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하며, 가령 다양한 문화에 덜 노출되어 있는 50대 이상의 장년층 및 노년층, 서구문화에만 일방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20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둘째,** 학교 교과과정에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다문화·다민족 시대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에게 균형 잡힌 국제감각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과과정 안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이 흡수되

어야 함. 일차적으로 학교장 재량 수업, 동아리 활동 등에 도입하고 점차 확대해야 하며, 담당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필요함. 일본 가와사키시의 사례처럼 외국인 이주자들이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셋째,** 지역사회 자원활동 확대 및 지자체의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사회에서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한국어 교육이나 사회적응 지원활동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지역의 여성 및 노년층들에게 보람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넷째,**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대한 의식조사의 지표화 및 연구 활성화 :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아직 일천함. 통계청의 사회의식조사 등 정례적 조사에 다민족·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해야 하며, 다양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국제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 목 차

|   |    |
|---|----|
| 요약문 .....                               | i  |
| <br>I. 서 장 .....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3  |
| 2. 연구 방법 .....                          | 7  |
| 1) 문헌연구 .....                           | 7  |
| 2) 설문지 조사 및 통계 분석 .....                 | 7  |
| 3) 국제비교분석 .....                         | 10 |
|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                  | 10 |
| <br>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 13 |
| 1.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배경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 ..... | 15 |
| 1) 탈-국가적 이주의 증가와 민족국가의 모순 .....         | 15 |
| 2) 반-이주(민) 움직임의 대두 .....                | 18 |
| 3) 대안의 모색과 논란 .....                     | 21 |
| 4) 한국사회의 근대경험과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    | 24 |
| 5)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 .....                 | 30 |
| 2.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검토 .....               | 31 |
| 1) 이론적 배경 및 개념 검토 .....                 | 31 |
| 2) 기존연구 검토 .....                        | 38 |
| 3.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의 개념 구성 .....             | 49 |

|  |     |
|--|-----|
| III.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 53  |
| 1. ‘사회적 거리’의 개념과 측정 .....                    | 55  |
| 1) 사회적 거리 .....                              | 56  |
| 2) 감성적 의미 이론 .....                           | 57  |
| 3) 사회적 거리감의 다차원성 .....                       | 60  |
| 2. 사회적 거리감 분석 .....                          | 62  |
| 1)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 62  |
|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거리감 .....                 | 65  |
| 3) 사회적 거리감 국제비교 .....                        | 69  |
| 3. 감성적 의미론 : 감성, 권력, 활동 .....                | 75  |
| 1) 각 차원별 평가 .....                            | 75  |
| 2) 다차원 비교 .....                              | 77  |
| 3) 사회경제적 배경과 각 차원별 평가 .....                  | 80  |
| 4. 소결 .....                                  | 83  |
| IV. 한국인의 국민 정체성과 다문화 시티즌십(citizenship) ..... | 87  |
| 1. 배경 : 시티즌십의 개념 .....                       | 89  |
| 2. 분석 : 한국인의 국민 정체성 .....                    | 93  |
| 1) 혈통-문화적 정체성과 정치-법적 정체성 .....               | 93  |
| 2) 외국인 귀화에 대한 태도 .....                       | 99  |
| 3) 세대간 인식차이 .....                            | 100 |
| 3. 이주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                      | 104 |
| 4. 소결 .....                                  | 108 |
| V. 문화 다양성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지향 .....                | 111 |
| 1.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                        | 113 |

|                                       |     |
|---------------------------------------|-----|
| 2. 다문화지향성에 따른 집단 비교 : 개방적 · 제한적 · 부정적 |     |
| 지향 집단 .....                           | 117 |
| 3. 외국 및 외국문화에 대한 태도 .....             | 125 |
| 1) 국가 · 지역별 관심의 분화 .....              | 125 |
| 2) 영역별 관심의 격차 .....                   | 131 |
| 4. 외국에 대한 관심 구조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호문화지향성 :  |     |
| 로컬 상호문화지향 vs. 글로벌 상호문화지향 .....        | 134 |
| 5. 소결 .....                           | 138 |

|   |     |
|---|-----|
| VI. 이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종족적 배제주의                  |     |
| (ethnic exclusionism) .....                   | 141 |
| 1. 배경 및 개념 검토 .....                           | 143 |
| 1) 종족적 배제주의(ethnic exclusionism)의 요인 구성 ..... | 143 |
| 2) 현실경쟁이론과 사회정체성 이론 .....                     | 146 |
| 2. 분석 : 한국인의 종족적 배제주의 .....                   | 148 |
| 1) 사회경제적 지위와 종족적 배제주의 .....                   | 150 |
| 2) 사회적 가치관과 종족적 배제주의 .....                    | 155 |
| 3) 경로분석 .....                                 | 157 |
| 3. 국제비교 : EU와의 비교 .....                       | 160 |
| 4. 소결 .....                                   | 165 |

|                                      |     |
|--------------------------------------|-----|
| VII. 결론 및 정책제언 .....                 | 169 |
| 1. 분석 결과 : 다민족 · 다문화 지향성의 다차원성 ..... | 171 |
| 1)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 제도적 변화의 수용,         |     |
| 정서적 변화의 지체 .....                     | 173 |
| 2) 세대별 차이 - 다문화 수용의 불균형성 .....       | 174 |
| 3) 이주에 대한 관용성과 계층적 차이 .....          | 176 |



|  |     |
|--|-----|
| 2. 정책 제언 .....                         | 178 |
| 1) 정책 방향 : 포괄적 ‘다문화 사회정책’ 개념의 도입 ..... | 178 |
| 2) 정책 제언 .....                         | 180 |
| 참고문헌 .....                             | 185 |
| 부록 : 설문지 .....                         | 193 |

## 표 목 차

|   |     |
|---|-----|
| <표 I-1> 응답자 특성 .....  | 9   |
| <표 III-1>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찬성 응답자수 .....                           | 63  |
| <표 III-2> 각 외국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br>(보가더스 척도 점수) .....                | 64  |
| <표 III-3> 성별 사회적 거리감(보가더스 척도 점수) .....                              | 65  |
| <표 III-4> 연령별 사회적 거리감(보가더스 척도 점수) .....                             | 66  |
| <표 III-5> 학력별 사회적 거리감(보가더스 척도 점수) .....                             | 67  |
| <표 III-6> 가구소득별 사회적 거리감(보가더스 척도) .....                              | 68  |
| <표 III-7> 미국인의 주요 인종/민족에 대한 보가더스 척도 점수 :<br>2001년 .....             | 70  |
| <표 III-8> 유럽국가별 인종간 거리 유지 찬성 비율 .....                               | 71  |
| <표 III-9> 자녀와의 결혼 반대 비율 .....                                       | 71  |
| <표 III-10> EPA(Emotion Power Activity) 척도의 각 차원별 평균 및<br>표준편차 ..... | 76  |
| <표 III-11> 호감도에 대한 연령별 평가 .....                                     | 81  |
| <표 III-12> 호감도에 대한 학력별 평가 .....                                     | 81  |
| <표 III-13> 영향력에 대한 연령별 평가 .....                                     | 82  |
| <표 III-14> 영향력에 대한 학력별 평가 .....                                     | 83  |
| <표 IV-1>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평균 및 표준편차 .....                          | 94  |
| <표 IV-2> 한국인의 요건 중 정치제도 · 법 존중과<br>부계혈통 평균 비교 .....                 | 100 |
| <표 IV-3> 연령별 극단주의자에 대한 개방성 점수 .....                                 | 102 |
| <표 V-1> 연령대별 · 교육수준별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비교 .....                          | 116 |
| <표 V-2> 다문화지향성에 따른 집단 구분 .....                                      | 117 |

|          |   |     |
|----------|---|-----|
| <표 V-3>  | 다문화 지향성 집단별 이주자 및 관련 정책에 대한<br>태도 비교 .....      | 120 |
| <표 V-4>  | 다문화 지향성 집단별 국가자긍심 및 단일민족의식 비교 ..                | 123 |
| <표 V-5>  |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관심의 편중성<br>(미국-동남아 관심도 격차) 비교 ..... | 129 |
| <표 V-6>  | 연령대별 문화교류에 대한 개방성 비교 .....                      | 130 |
| <표 V-7>  | 문화교류에 대한 개방성-문화간 상관관계 .....                     | 131 |
| <표 V-8>  | 연령대별 영역별 관심도 비교 .....                           | 132 |
| <표 V-9>  | 외국에 대한 관심 × 관심의 편중성 교차표 .....                   | 137 |
| <표 VI-1> | EUMC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요소 .....                       | 144 |
| <표 VI-2> | 수정된 종족적 배제주의의 차원 및 항목 .....                     | 145 |
| <표 VI-3> | 종족적 배제주의(전체) : 회귀 분석 결과 .....                   | 151 |
| <표 VI-4> |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 차원과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              | 152 |
| <표 VI-5> | ‘인지된 위협’이 미치는 영향 .....                          | 154 |
| <표 VI-6> | 사회적 가치관이 종족적 배제주의에 미치는 영향 .....                 | 155 |
| <표 VI-7> | 사회적 가치관이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요소에<br>미치는 영향 .....        | 156 |
| <표 VI-8> | 비교대상 설문문항 비교표 : EU - 한국(본 조사) .....             | 161 |
| <표 VI-9> | 한국과 EU - 조사결과 비교 .....                          | 163 |

## 그 립 목 차

|            |   |     |
|------------|---|-----|
| <그림 III-1> | 각 외국인 집단에 대한 보가더스 척도 평균 점수 .....                      | 65  |
| <그림 III-2> | 연령별 사회적 거리감 점수 .....                                  | 67  |
| <그림 III-3> | 평가항목 찬성여부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 : 벡터값 .....                     | 74  |
| <그림 III-4> | 각 차원별 평가점수 : 평균값 .....                                | 77  |
| <그림 III-5> | 호감도와 영향력 비교 .....                                     | 78  |
| <그림 III-6> | 호감도와 능동성 비교 .....                                     | 79  |
| <그림 III-7> | 영향력과 능동성 비교 .....                                     | 80  |
| <그림 IV-1>  | 한국인의 요건 항목에 대한 2003년과 2007년 조사 비교 .....               | 95  |
| <그림 IV-2>  |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요인분석 .....                         | 96  |
| <그림 IV-3>  | 국가별 국민정체성의 공화주의/혈통주의 경향 비교 .....                      | 98  |
| <그림 IV-4>  | 외국인의 출신지역에 따른 귀화인정 찬성비율 .....                         | 100 |
| <그림 IV-5>  | 연령별 정치제도-법 존중과 부계혈통 평균 차이 .....                       | 101 |
| <그림 IV-6>  | 연령별 극단주의자에 대한 개방성 점수 비교 .....                         | 103 |
| <그림 IV-7>  | 외국인을 한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연령별 응답 .....                    | 104 |
| <그림 IV-8>  | 외국인의 권리 인정 또는 지원 필요성에 관한 평균 점수 .....                  | 105 |
| <그림 IV-9>  | 연령별 북한 청소년 대학입학 우대조치에 대한 의견 .....                     | 106 |
| <그림 IV-10> | 외국인 이주자 국내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한<br>정책 시행 찬성 비율 .....        | 107 |
| <그림 IV-11> | 계약 종료 외국인 노동자들 귀국과 불법 외국인 노동자<br>본국 송환에 찬성하는 비율 ..... | 108 |
| <그림 V-1>   |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                                    | 114 |
| <그림 V-2>   | 연령대별 다문화 지향성 집단 분포 .....                              | 119 |
| <그림 V-3>   | 이주자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 집단별 비교 .....                        | 121 |
| <그림 V-4>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 - 집단별 비교 .....                         | 121 |

|   |     |
|---|-----|
| <그림 V-5> 다문화 지향성 집단별 외국인과의 갈등의<br>심각성 인식 비교 .....   | 123 |
| <그림 V-6> 연령대별 외국에 대한 관심도 .....                      | 126 |
| <그림 V-7> 교육수준별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                   | 126 |
| <그림 V-8> 연령대별 국가·지역별 관심도 .....                      | 127 |
| <그림 V-9> 교육수준별 국가·지역별 관심도 .....                     | 128 |
| <그림 V-10> 외국과의 문화교류에 대한 개방성 .....                   | 129 |
| <그림 V-11> 연령별 외국에 대한 관심 구조 : 대응분석 결과 .....          | 135 |
| <그림 V-12> 외국에 대한 관심 양상에 따른 다문화사회에 대한<br>태도 비교 ..... | 138 |
| <그림 VI-1> 교육수준별 인종적 배제주의 평균점수 비교 .....              | 149 |
| <그림 VI-2> 송환정책 선호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                 | 158 |
| <그림 VI-3> 한국-EU 비교(응답률 기준) .....                    | 164 |
| <그림 VI-4> 한국-EU 비교(평균값 기준) .....                    | 164 |



# 서 장

|                  |    |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 2. 연구 방법         | 7  |
|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 10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의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노동이주자, 국제결혼이주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출신지도 다양화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의 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유엔 국제이주기구(IOM)가 발표한 『2005 국제 이주자 보고서』는 한국에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합법·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단기체류 외국인을 포한 체류외국인이 100만 254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체류 외국인 규모는 전체 주민등록인구(4천 913만명)의 2%에 이르며, 특히 2006년 7월(86만5천889명)에 비교할 때 불과 1년여의 기간 동안 외국인 체류자가 15%나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추정 규모는 통계청과 법무부의 통계가 각기 다르지만, 결혼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까지 포함할 경우 약 11만~1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김혜순 2006; 이혜경 2007)<sup>1)</sup>. 한국사회는 이처럼 급속하게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다민족·다문화 사회란 한국인에게서는 매우 낯선 경험이며 낯선 개념이다. 단군 이래 반만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믿는 단일민족 의식은 한국인의 내면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일제 식민주의 하에서 저항의 구심점으로 부상한 민족주의는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도 민족중흥이라는 이름 하에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이르러서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경 없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민족국가 중심적인 가치관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과 민족을 동일시하고, 따라서 법률적인 국민의 범위를 혈통에 의한 민족의 범위와 구분하지 않았던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는 이주의 증대와 다문화·다민족 사회의 대두라는 변화 앞에서 새로운

1)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통계치의 특징을 살펴보면, 법무부의 통계는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국제결혼 후 이혼하게 되어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제외된 수치임. 통계청 자료는 모든 혼인신고자 수치이므로 결혼 후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와 가출, 이혼 등 가족해체가 고려되지 않고 있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혼 후의 국적변경이나 가출, 이혼 등의 상황에 대한 통계가 필요함(이혜경 2007).

성찰을 요구받고 있다.

사실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나 법적으로 이들의 국내 정주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인권침해나 차별,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이라는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 졌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자의 증대는 이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자는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국적을 획득하고 정주하게 될 것이며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은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통합 문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귀환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3.6%, 2006년 11.9% 수준이다.<sup>2)</sup> 그런데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혼인에서 주목할 점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2006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중 41.0%에 해당하는 3,525명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였으며, 경북지역의 경우 이러한 비율이 50.2%에 이른다.<sup>3)</sup>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노령화 및 저출산 문제를 고민해온 지방자치단체들은 국제결혼 가정과 그 자녀들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중앙정부에서도 최근 들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다수의 부처에서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상담, 한글 교육, 자녀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서둘러 도입하는 양상이다. 아직 도입단계에 있는 정책들은 이주자들을 취약한 정책대상 집단으로 간주하여 인권 보호·한국어 교육·국제결혼 가

2) 통계청 「2006년 혼인통계 결과」, www. nso.go.kr. 2007. 3

3) 통계청, 위의 자료, 경향신문 2007. 12. 2 보도(<http://news.khan.co.kr>). 그러나 국제결혼을 농촌지역의 문제인양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 특히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습은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며 한국말을 잘 못하는 농촌 며느리로 전형화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결혼이주여성 중 56.9%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재중 동포(조선족)를 포함한 중국 국적 보유자가 무려 66.2%에 이른다. 국제결혼 이주자는 국적, 거주지역, 계층 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므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족의 자녀양육 지원 등, 드러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대중적인 정책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책의 목표는 이주자들을 단시일 내에 한국 사회에 적응(동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단지 인구 구성이 인종·민족적으로 다양하게 바뀐다는 것 이상의 다차원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이주가 늘어나는 것은 일차적으로 노동력 수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지역경제의 부침과 관련이 있으며, 소수자의 인권 혹은 소수민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도 향후 크게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주의 증대는 단지 이주자들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들을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동질성에 기초한 평등 개념을 넘어서 다양성과 차이를 관용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가치와 사회통합의 원리를 한국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제기될 시대적 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가장 심층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 즉 다른 인종·민족과의 공존 또는 갈등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와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이른바 거시적 수준(macro level)의 분석, 즉 노동이주를 유발시키는 경제체제의 변화와 시기에 따른 이주 유형의 다양화, 민족국가(nation-state) 체제의 잠식과 새로운 사회통합 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Castle & Miller 2003)과 더불어, 최근에는 미시적 수준(micro level)에 대한 연구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즉 이주 과정에 개입하는 중개자나 다양한 행위자들의 영향, 이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체성 형성, 이주자-정주자 간의 상호인식 등을 분석하는 새로운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Edmunds 2006).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주의 증대, 다른 인종·민족과의 공존 또는 갈등에 대해 한국인들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주자들의 출입국 실태, 노동조건, 인권침해, 국제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 및 결혼 중개업 실태,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가족의 자녀양육 문제, 다민족 다문화 사

회에 대응하는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졌다(한국사회학회 2006; 설동훈 2006; 김현미 2006; 김이선 외 2006). 그러나 이주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새로운 변화를 한국인과 한국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또 다른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단일민족과 동질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한국인들이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늘어나는 이주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의 증대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를 다각도로 측정하고, 이를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으로 이름 붙이고자 한다.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은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용어이며,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객관적 개념으로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러한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서구의 연구들은 인종과 민족에 대한 태도를 인종주의(racism), 외국인 혐오(xenophobia) 등으로 개념화하여 측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다민족·다인종 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구인들의 감정과 태도를 다루는 개념들을 아직 본격적으로 다민족 사회를 경험한 적이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개념이나 측정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접근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은 하나의 완결된 개념이나 표준화된 척도가 아니라 한국인의 역동적인 의식변화를 추적하는 탐색적인 개념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다문화·다민족 지향성’의 내용은 뒤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이 개념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전제하는 것은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와 다문화주의는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엄한진 2006). 전자가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객관적 현실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후자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특정한 정치적 입

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이른바 동화주의와 대비되는 입장으로써 다양한 소수 인종/민족 집단의 차이와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러한 차이를 드러내고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다문화 담론’이 국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었고 다문화주의나 동화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으나 뚜렷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연구는 다문화주의 혹은 동화주의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다문화·다민족 지향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한국사회의 적합한 정책의 방향을 찾아가는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국제적인 이주의 증대,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의 정책 쟁점 등을 다루는 국내외 학술적 문헌, 한국에서의 정책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분석하는 정책연구 및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또한 본 연구의 성격이 조사 연구(survey research)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인종차별이나 인종·민족간 편견, 사회적 거리 등을 다루는 국내외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설문지 문항 작성이나 통계분석에 참조하였다.

### 2) 설문지 조사 및 통계 분석

#### 가. 설문지 조사 설계

국민의식조사는 전국의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하여 비례 할당하는 다단 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본 추출의 과정은 1단계로 2006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의 만19세 이상 인구를 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정리한 후, 2단계로 전국 16개 시도별로 인

구규모를 고려한 비례할당을 실시하였으며, 3단계로 최종조사지점에서 성×연령 할당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1:1 가구방문에 의한 개별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2007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면접이 실시되었다.

#### 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I-1>은 본 조사 응답자의 특성을 요약한 표이다.<sup>4)</sup> 전체 1,203명 중 남성이 606명(50.4%), 여성이 597명(49.6%)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이 49.2%, 영남지역 26.8%, 충청·강원의 중부권 13.0%, 호남·제주지역 11.1%로 구성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3%로 가장 많으며, 40대 24.1%, 20대 23.4%, 50대 16.3%, 60세 이상 10.9%의 순이다. 학력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 44.1%로 가장 많으며, 고졸은 42.6%, 중졸이하는 13.1%가 포함되었다. 직업별로는 전체 24.4%를 차지하는 자영업이 가장 많았고, 블루칼라 근로자 20.6%, 전업주부 20.0%, 화이트칼라 근로자 18.0%, 학생, 무직 및 기타로 응답한 사람이 14.6%, 농수축산업이 2.3% 순이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301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응답한 사람이 31.3%로 가장 많았고, 201만원~300만원이 28.8%,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전체 30.6%를 차지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종교는 전체 응답자 중 37.7%가 무교인 가운데, 불교 26.3%, 기독교 26.0%, 천주교 9.5%, 기타 종교 0.5%로 집계되었다. 외국방문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1.6%, 외국인 이웃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3.1%, 외국인 친구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4) 전국인구현황(2006년 1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자치부)을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 성, 연령별 구성비에 따라 표본을 배분하였다. 최종조사지점은 지역을 고려한 읍면동의 통반리로, 각 최종조사지점에서 성×연령 할당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응답자의 성, 연령 특성이 다른 변인(교육수준, 가구 소득수준, 직업 등)에 우선하여 고려된 관계로 지역, 성, 연령 외 다른 특성들은 모집단 구성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본 추출 및 실사는 한국갤럽이 담당하였다.

&lt;표 I -1&gt; 응답자 특성

| 구 분       |              | 사례수   | %     |
|-----------|--------------|-------|-------|
| 전 체       |              | 1,203 | 100.0 |
| 지 역 별     | 서울/인천/경기     | 592   | 49.2  |
|           | 강 원          | 36    | 3.0   |
|           | 대 전 / 충 청    | 120   | 10.0  |
|           | 대 구 / 경 북    | 127   | 10.6  |
|           | 광 주 / 전 라    | 120   | 10.0  |
|           | 부산/울산/경남     | 195   | 16.2  |
| 지 역 크 기 별 | 제 주          | 13    | 1.1   |
|           | 대 도 시        | 581   | 48.3  |
|           | 중 소 도 시      | 527   | 43.8  |
| 성 별       | 남 자          | 606   | 50.4  |
|           | 여 자          | 597   | 49.6  |
| 연 령 별     | 20 대         | 282   | 23.4  |
|           | 30 대         | 304   | 25.3  |
|           | 40 대         | 290   | 24.1  |
|           | 50 대         | 196   | 16.3  |
|           | 60 세 이 상     | 131   | 10.9  |
| 학 령 별     | 중 졸 이 하      | 158   | 13.1  |
|           | 고 졸          | 513   | 42.6  |
|           | 대졸(2년제 포함)   | 530   | 44.1  |
|           | 모 름 / 무응답    | 2     | 0.2   |
| 직 업 별     | 농/ 수/ 축 산 업  | 28    | 2.3   |
|           | 자 영 업        | 293   | 24.4  |
|           | 블 루 칼 라      | 248   | 20.6  |
|           | 화 이 트 칼 라    | 217   | 18.0  |
|           | 전 업 주 부      | 240   | 20.0  |
|           | 학생/무직/기타     | 176   | 14.6  |
| 가구 소득 수준  | 모 름/ 무응답     | 1     | 0.1   |
|           | 100 만원 이하    | 87    | 7.2   |
|           | 101 ~ 200 만원 | 281   | 23.4  |
|           | 201 ~ 300 만원 | 347   | 28.8  |
|           | 301 ~ 500 만원 | 376   | 31.3  |
|           | 501 ~ 1천 만원  | 97    | 8.1   |
| 종 교 유 무   | 1천 만원 초과     | 12    | 1.0   |
|           | 모 름/ 무응답     | 3     | 0.2   |
|           | 천 주 교        | 114   | 9.5   |
|           | 기 독 교        | 313   | 26.0  |
|           | 불 교          | 316   | 26.3  |
|           | 기 타          | 6     | 0.5   |
| 외국방문경험    | 무교(종교없음)     | 454   | 37.7  |
|           | 있 다          | 501   | 41.6  |
| 외국인 이웃유무  | 없 다          | 702   | 58.4  |
|           | 있 다          | 398   | 33.1  |
| 외국인 친구유무  | 없 다          | 805   | 66.9  |
|           | 있 다          | 271   | 22.5  |
|           |              | 932   | 77.5  |

### 3) 국제비교분석

외국인과 이주자를 대하는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시계열적 비교나 다른 나라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그 의미를 더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회의 국민의식조사라는 기본 성격을 띠고 있어 본격적인 비교 연구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연구 결과를 좀 더 풍부하게 해석하기 위해 본 연구의 틀 내에서 최대한 비교분석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의 설문지를 분석하고 공통된 문항을 본 연구에 포함시켜 미국, 유럽 등 외국의 기존연구에 나타난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조사의 시점이나 설문지 구성, 표본 수 등이 다르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연구나 국제비교분석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이주의 증대, 인종·민족이 다른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단지 학문적 연구 그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 정책적 의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기대 효과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이주민의 급증과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이라는 21세기의 상황에서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통합과 갈등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양성의 포용이라는 미래지향적 이상과, 실제 일상생활에서 행위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나 정서적 거부감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합의(consensus)를 형성해 가는 큰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준거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이자 약자인 이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도입의 시기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이민을 받아들일 때 국가나 지역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기존에 이주자들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생각과 평가는 반드시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세계화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는데 준거자료가 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세계화 담론은 이른바 ‘위로부터의 세계화’, 즉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세계자본주의에 적응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나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즉 우리 주변의 개발도상국이나 빈국과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역량과 잠재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것은 정부 정책 뿐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의 성숙 및 다양성을 포용하는 민주주의 의식의 확산을 필요로 한다. 한국인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는 한국인의 태도와 의식을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고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이나 이주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본격적으로 조사한 선행 연구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한국인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을 체계적인 지표로 구성하는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거친 지표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본격적인 국제비교 연구를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주의 증대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외국인에 대한 태도 분석은 국제비교를 통해 더 풍부한 함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이주 현황이 유럽이나 미주 국가들과 상이한 점이 많아 동일한 설문으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연구 설계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비교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II

##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    |
|--------------------------------------|----|
| 1.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배경과<br>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 | 15 |
| 2.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검토                  | 31 |
| 3.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의 개념 구성                | 49 |



## 1.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배경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

### 1) 탈-국가적 이주의 증가와 민족국가의 모순

특정한 사회 단위를 넘어선 이주는 인구 구성과 사회의 단위, 사회 성원들 간 관계 등에 걸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 가운데에서도 20세기 말부터 세계적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국경을 넘어선 이주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에 걸쳐 기존 체계에 일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특정한 영토 내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일정한 공통점, 보다 정확히는 공통점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기반으로 형성·발전해왔던 근대 민족국가의 존재 기반과 모순되는 움직임이 일상화됨으로써, 국가 단위를 전제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족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의 역사적, 정치적 산물로서 정치 공동체이자 문화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정치적인 공동체란 동등한 시민의 자격을 갖춘 이들이 일정한 의무와 권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국가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구성원인 국민<sup>5)</sup>(political nation)은 내부의 다양성을 초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는 시민으로서 동등한 지위와 권리 그리고 의무를 부여받는다(마이네케 1970; 콘 1967; 김광익 2005: 54 재인용). 이에 비해, 동일한 혈통·언어·역사·문화·고향을 가진 - 그렇게 믿는 - 사람들로 이루어진 문화 공동체로서의 민족(cultural nation)은 외부와 구분되는 자신들의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소통, 공유함으로써 자신들의 ‘공통의 세계’ - 현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 를 불가변의 ‘자연스러운’ 질서로 ‘상상’(앤더슨 1991)함으로써 형성된다.

국민과 민족은 개념적으로 분리되고 현실적으로도 일치하지 않지만, 민족 국가는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과 정치공동체로서의 국민이 일치된다는 믿음

5) ‘국민’과 ‘민족’이 혼용되기도 하나, 이 글에서는 국가라는 특정한 정체에 의해 적절한 성원 자격을 갖춘 이들로 법·제도적으로 규정되는 범위를 ‘국민’으로, 자신들 간의 공통점, 특히 혈통적·문화적·역사적 공통점에 대한 상상 내지 믿음에 기초한 단위의 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를 ‘민족’으로 규정한다.

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유지되어 왔다. 정치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를 일치시키려는 국가의 의지(마르티니엘로 2002) 덕분에 특정 국가의 국민 전체는 일정한 영토 내에 함께 거주할 뿐 아니라 문화를 공유한 ‘하나의 민족’이라는 상상을 공유하게 된다.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민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화의 힘을 토대로 하여 혈통과 문화의 공유야말로 정치공동체의 일원인 국민이 지녀야 할 자질, 즉 ‘국민됨(nationhood)’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당연시된다. 즉, 한 민족이 기반하고 있는 요소를 공유한 자만이 정치공동체 국민으로서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공통의 문화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을 ‘국민’으로 인정하고 ‘국민’으로서의 행동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공동체는 공식교육·언어정책·문화유산·역사정책 등을 통해 민족이 공유하는 것으로 상상되는 그 특정한 요소를 공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민족의 존재 자체를 공식화하고 문화공동체로서 민족의 생명을 지속시키며 그 위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민족국가의 틀 속에 존재하는 성원은 문화적 요소를 공유한 민족의 성원이자 이를 기초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국민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자격을 지닌 이들이 국가가 통치하는 일정한 영토 안에 거주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의 민족국가 성원으로서는 활약하면서 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은 간과하는 동시에 외부와의 구별은 극화시켜 자신들의 공동체성을 실현하게 된다.

그런데, ‘거주자-민족-국민의 삼위일체’에 기반한 민족국가의 질서와 민족국가의 동질성과 절대성에 대한 신념은 탈-국가적 이주가 늘어남에 따라 혼란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문화를 공유하던 것으로 믿어왔던 ‘민족’이 지역성을 초월해 흩어져 변해가는 모습을 직면하면서 동질성과 공유의 절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사회의 ‘조선족’이나 일본사회의 ‘닛케진’<sup>6)</sup>의 경우는 다른 외부인들과는 달리 동질성을 공유할 가능

6) 1868년-1973년 사이에 해외로 이민 간 일본인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로 특히 브라질과 페루 국적의 일본인 후손과 그 배우자를 지칭한다. 이들은 1990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조건 없는 정주 자격이 제공되면서 대거 일본에 입국하여 ‘합법적인 외국인 단순노동자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권숙인 2005: 268-269).

성이 높은 집단으로 자연스럽게 기대되지만, 외모로 대변되는 혈통적 ‘같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비롯한 문화적 차이에 직면하면서 ‘혼란’과 ‘당황’ ‘놀라움’ ‘실망’ ‘배신감’ 등의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권숙인 2005: 271-272).

그리고 무엇보다 탈-국가적 이주의 상시화·일반화로 인해 민족적 공유와 동질성형성을 기대하기 힘든 집단이 국가 영토 내에 항시 존재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특정 집단의 수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면서 심지어 절대 시되어왔던 공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경향도 등장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 내부의 다양성을 극복의 대상으로 설정해왔던 민족국가 내에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다양성을 다룰 수 있는 제도적·이념적 기제가 발달하지 못했으며, 민족과 일치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민의 자격 조건과 ‘국민됨’의 요소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분명한 듯 보이던 ‘국민’과 ‘국민이 아닌 자’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국가의 틀 속에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국민’의 범위도 불분명해졌다.

국민의 자격이나 시민권의 내용을 재규정하는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본국에서의 권한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거주지에서도 그곳 국민들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는 이중시민권 혹은 다중시민권에 대한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국가의 틀 속에서 이들은 ‘시민권의 위기(crisis of citizenship)’(Leca 1992: 314; Stolcke 1995: 8)를 초래하는 존재일 뿐이기에 그 존재로부터 민족국가의 시민권 틀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주민들 가운데 민족적 동질성의 가능성, 실제적 기여의 정도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들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거나 지극히 제한된 수준의 권한과 의무만을 부여하는 식으로 토착적 시민권(autochthonous citizenship)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이류 시민권(second-class citizenship)을 제도화해 나가고 있다.<sup>7)</sup> 또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면서 시민권을 인정해왔던 프랑스, 영국 등의 국

7)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재외동포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완전한 ‘국민’도, 완전한 ‘비국민(非國民)’도 아닌 ‘반국민(半國民)’으로서 출입국과 경제활동에 있어 제한되나 일정한 권리를 규정(김현선 2006: 83)한 것은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에서도 이주민의 급증에 따라 이들의 권한과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민을 제한하고 숙지주의적 국적 및 시민권 부여 원칙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 역시 이러한 흐름의 일부이다.

## 2) 반-이주(민) 움직임의 대두

‘진짜 국민/시민’과 ‘가짜 국민’ 내지 ‘이류/삼류 시민’을 구분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국민의 동등성 대신 이중 잣대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내부적 위계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 내부의 인종 집단, 민족 집단을 구분하고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념적·정서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어 한시적인 거주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거주자로 자리 잡았다. 이와 관련된 각종 문제 가운데서도 이들에 대한 인종차별주의(racism)와 외국인 혐오(xenophobia)<sup>8)</sup>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유럽 통합 이후에는 역외 제3세계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럽연합 산하의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 감시센터(EUMC)의 2005년 발표에서도 “유럽 각국에서 주거와 취업,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명백한 인종차별이 만연해있다”는 점이 공인된 바 있다(세계일보 2005. 12. 19).

인종차별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정부와 국제기구의 조치 등으로 공식적이고 노골적인 인종차별이나 편견은 감소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만, 이주민들의 존재와 생활태도에 대한 불만과 생활 곳곳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민의 역사적 과정과 이민을 수용하고 사회에 통합하는

8)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는 흔히 혼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종차별주의는 위계를 전제로 거리를 두는 태도를 가리키는데 비해 외국인 혐오는 타자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방식을 의미한다(Banton 1996:8).

방식에 따라 인종차별내지 혐오의 구체적 양상은 동화 지향적 경향을 띠기도 하고 분리 지향적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은 이주민들과 같은 거주지에 살거나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물건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자녀가 이주민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외국 출신자들의 특이한 행태에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며, 이주민과 그 후손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도 상당히 인색하다. 심지어 범죄와 같은 부정적 요소와 동일시하는 경향도 나타나며, 경찰관을 비롯해 공적 서비스 제공 차원에 있어서도 무의식적인 편견, 경멸, 무관심, 고정관념 등이 내포되어 있어 ‘제도화된 인종주의’의 존재도 제기되고 있다(김수행 2006: 83). 사회적, 경제적인 위기상황이 되면 이주민을 배척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된다.

이주민에 대해 명백히 차별적이고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를 토대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가는 정치세력의 등장으로 이주민의 존재가 정치 무대의 전면에 부각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어간다. 1980~90년대 유럽에서는 신민족주의, 인종주의를 지향하는 이탈리아의 보시(Bossi)동맹, 벨기에의 블람스 블록(Vlaams Blok), 프랑스의 민족 전선(프롱 나쇼날, Front National) 등을 위시하여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화, 특히 이주민에 의한 다양성의 증가는 경계하면서 문화적 동질성, 인종적 순수성 내지 우월성을 확보한 ‘진정한 국가’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팽창하였다(마르티니엘로 2001: 34-35)<sup>9)</sup>. 이러한 세력은 경제구조의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병폐를 부풀리는 동시에 그 탓을 이주민과 궁극적으로는 ‘인구폭발과 가난으로 이들을 해외로 내모는 제3세계’에게 돌리는 경향<sup>10)</sup>이 농후하다. 또한 이들은 생물학적 능력의 차이를 강조했던 과거의 인종차별주의와 달리 문화적 정체성·전

9) 1985년 유럽의회 산하 유럽내 파시즘 및 인종차별주의 발흥에 관한 조사 위원회(Committee of Inquiry into the Rise of Fascism and Racism in Europe)는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이라는 새로운 유령이 유럽 정치에 출몰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Stolcke 1995: 5).

10) 1980년대 민족전선의 슬로건은 “200만의 이민=200만의 실업”이었다.

통·유산 등을 본질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차이의 공존과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정치 담론을 구사하여(Stolcke 1995; Banton 1996: 8) ‘우리의 완결성’을 침해하는 ‘위협적인 그들’이라는 식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유포하고 ‘문화적으로 다른 이주민’의 ‘올바른’ 자리를 국가 외부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시키려 한다. 3D업종의 노동력 수요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활기의 문제 등 이주노동자를 요구하는 구조적 현실은 철저히 간과하고 민족성·문화·유산·전통·차이 등의 용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배제 담론, 즉 ‘인종 없는 인종차별주의(racism without race)’, ‘차이 중심적 인종차별주의’(Stolcke 1995:4)를 대중들에게 설파하여 민족주의적 정서를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종종 폭력적 사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인종차별적인 성향의 백인들이 이주민, 특히 유럽 외부 출신의 유색인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공격하는 한편, 사회·경제적으로 주변화되고 구조적이고 제도화된 인종차별에 시달리는 이주민들이 백인을 공격하거나 양측이 조직화되어 서로 대치하고 공격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58년 노팅엄과 노팅힐에서 조직화된 인종주의자들이 백인 비행 청년들을 부추겨 유색인종을 공격함으로써 촉발된 인종 갈등을 위시해 1976년, 1977년, 1979년에는 민족전선과 이주민 집단 및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백인들 사이에 큰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1980년에는 인종 갈등이 더욱 대규모로 자주 일어났다.<sup>11)</sup> 90년대 들어서는 1992년 7월 번리, 코벤트리, 블랙번, 1995년 6월과 12월엔 브래드퍼드와 브릭스톤에서 경찰과 아시아계 청년, 흑인 집단 사이에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2001년 4월-7월에는 브래드퍼드, 올덤, 번리에서 아시아계 청년들이 영국민족당 등 극우 인종주의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주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11) 1980년 4월 브리스틀의 세인트 폴 지역, 1981년 4월 런던의 브릭스톤, 1981년 7월 리버풀의 톡스테드, 런던의 사우스홀과 브릭스톤, 1985년에는 버밍엄의 한즈워스, 런던의 토텐엄과 브릭스톤, 리버풀에서 대규모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김수형 2006: 60-61).

이슬람에 대한 테러가 이어지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통일 이후 스킨헤드족을 위시한 극우파들이 이주민 및 외국인을 공격하는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다<sup>12)</sup>(임종현 2006:211-215).

이처럼 인종차별주의가 만연하고 이로 인한 갈등과 폭력이 빈발하자, 외부인에 대한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편적·본능적인 정서로 보는 견해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문화를 일종의 본질로, 문화적 차이를 변화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 그로 인한 갈등 역시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시각 역시 학계와 정계, 그리고 대중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Stolcke 1995: 6). 그러나, 실상 외국인 혐오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마다 그 정도나 양상이 다양하며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일례로 총 186개 사회의 비교 분석을 통해 Cashdan(2001)은 외국인 혐오는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 집단 내부의 전반적인 폭력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예를 든 유럽 국가들 역시 이주의 역사와 이주민과 관련된 제도, 경제적 상황, 사회통합의 레짐(regime)과 유형, 정치구조 등에 따라 외국인 혐오의 심각성이 서로 상이하<sup>13)</sup> 개별 국가 내에서도 사회·정치적 환경이나 특정 사건 등에 따라 전개 양상이 변화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 3) 대안의 모색과 논란

민족국가의 동질성과 통일성의 신화 아래에서 실제 사회에 존재하는 차이와 다양성은 무시되어 왔으며 이를 다룰만한 사회적·정치적·문화적 기제는 발달하지 못해왔다. 탈-국가적 이주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패러다임은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논란

12) 독일 극우파의 폭력행위는 1982년 80건에서, 1990년에는 309건, 2000년에는 99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임종현 2006: 215).

13) 유럽 전역에서 인종주의에 기초한 증오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독일과 영국이 가장 심하고 그에 따른 보복 공격도 뒤따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세계일보 2005. 12. 19).

과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국가 내의 다양성과 차이는 단지 이주로 인해 문제시되는 것만은 아니며, 영토를 기초로 한 민족국가의 형성과 식민주의 등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내에 다양한 유형의 소수자 집단<sup>14)</sup>이 형성되어 주류집단과 차이와 다양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을 벌여왔다. 탈-국가적 이주의 일반화와 함께 출신국가와의 관계, 출신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주류사회와 사회·경제·문화·정치적으로 구분된 집단으로 형성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족국가의 틀 속에서는 부정적으로 치부되었던 다양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양성을 극복하기 보다는 그 속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현대 국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적만을 기준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거주자로서의 권리가 논의되기도 하고, 이주민을 위시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구조적·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 각 방면에서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역동적인 사회 통합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펼쳐지고 있다. 학계나 시민사회, 국제사회나 각국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흔히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통칭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양성의 인정 범위나 사회통합에 있어서의 의미와 정치적 대안 등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하나의 범주로 묶기 어려울 정도로 상이한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으로 사적 생활영역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학교나 공공시설, 직장 등 공적 영역에서는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는 입장이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의 동화를 기초로 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화주의 모델이 그

14) Kymlicka(2002)는 민족적 기준에 따른 소수자를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같은 인종 카스트 그룹(racial caste groups), 고립주의적 종교 종족 집단(isolationist ethnoreligious group), 토착 원주민(indigenous people), 국가지향 소수민족 또는 하위 국가 민족(national minority, substate nation), 이민자, 이주타국인(metics)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이중언어, 삼중언어 모델 하에서의 단일언어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박병섭 2006: 102-110).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접근은 사실상 다양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공적 영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는 개인의 이국 취향 이상의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온건’ 다문화주의(soft multiculturalism), ‘가벼운’ 다문화주의(light multiculturalism)(마르티니엘로 2002: 89-93), 또는 ‘식탁위의’ 다문화주의로서의 한계 때문에 사회 각계에서 많은 공격에 노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에 대한 본질주의적(essentialistic) 전제에 기초한 신-민족주의적 경향이 대두되면서, 다양성을 기초로 한 정체성의 인정이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을 경계하고 보편적 공적 가치에 기초한 시민권을 통해 통합을 모색하는 공화주의적 모델로의 회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부상하고 있다(Stolcke 1995: 10).

이와 함께 공적 영역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증진시키려는 경향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소수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만큼, 소수민족의 정치 참여나 공공부문 대표성, 교육, 취업, 거주, 문화 향유와 재생산 등에 있어서 별도의 특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인 평등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호주와 캐나다를 위시해 이민을 기초로 국가가 형성된 경우에는 다양성을 더 이상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 질서로 받아들이고 이를 국가 경쟁력의 주요 동력으로 삼으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다문화주의를 천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일면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심화되어 가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이상적인 접근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문화주의의 기본 지향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는 측면도 있다. 한편으로 민족적 단일성과 동질성의 신념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는 다문화주의가 역설적으로 국경을 넘어 민족적 단일성과 동질성을 고수하는 ‘원격지 민족주의자’를 양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구건서 2006: 50). 그리고 국가 내부에서도 문화적 차이와 민족간 분리가 극복되고 역동적인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기 보다는 다문화주의로 인해 차이와 분리가 공적으로 인정되면서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주민과 이외의 집단간, 계층간<sup>15)</sup> 골이 깊어지고 갈등이 격화될 위험도 크다.

#### 4) 한국사회의 근대경험과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다양한 인종·민족 출신의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경험은 각 사회의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다. 다문화 사회는 이러한 조건과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이며, 따라서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은 한국사회의 경험을 고려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북미나 유럽에서는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필요성이나 역사적인 조건으로 인해 이민자의 대량 유입을 경험하였고, 이주자 문제 및 인종·민족적 갈등을 억누르거나 해소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법률을 제도화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 사회의 근대 경험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한국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의 개념 구성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인들을 주목하고자 한다.

##### 가. 한국의 근대 경험과 단일민족 신화

한국은 동아시아 동단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인해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다른 인종·종족의 유입이나 갈등 경험이 비교적 적었으며, 교류한 국가도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 미국과 서구의 몇몇 국가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엄한진 2006). 외국의 연구 논문에서도 한국은 실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mono-national) 예외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Kymlicka 2003: 149).<sup>16)</sup>

15) 다문화주의의 추진에 따라 복수 언어를 구사하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지식인들은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그로 인한 이익도 증가하지만, 자국 언어만을 구사하는 계급은 그러한 이익으로부터 배제될 뿐 아니라 경쟁의 증가로 인한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유럽 통합과정에도 반영되었으며, 다문화주의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신-민족주의, 인종주의를 지향하는 극우파 정당의 기반 역시 하류계급이라는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6) “민족국가가 자연적인 것은(natural)은 전혀 아니다. 전 세계에 단일 민족으로 구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의 ‘이민 문제’나 ‘인종 문제’는 아직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형성되거나 인식된 적이 없으며 최근 들어 나타나는 시민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최초의 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의 인종·민족관은 19세기의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장태한(2001)의 지적을 주목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인은 20세기의 다인종·민족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채 지구촌 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해외로 이주한 해외동포들 역시 폐쇄적 민족주의 성향을 그대로 답습한 탓에 다인종·다민족 사회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있지 못했고, 이로 인해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었다(1992년 로스앤젤레스 인종폭동에서 한인 상가의 피해).

외국인과 내국인을 통합하는 정책 레짐(체제)은 차별배제 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의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Castle and Miller 2003; 전광희 2006). 한국은 차별배제 모형에 해당하며, 외국인에게 국적은 물론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단기간 취업한 후에 계약이 종료되면 모국으로 돌아갈 노동자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이주 노동자를 단기간 취업시킨 후 귀국시키고 다시 새로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식의 교체순환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이민자의 정주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도 일정하게 내국인과 구분되고 분리된 특정 업종에 국한시키게 된다.<sup>17)</sup> 그러나 경제적 동기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쉽게 한국을 떠나지 못하며 까다로운 법규정으로 인해 쉽게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생활고나 인권유린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한국사회는 최종 이민지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진 못했으나 한국의 이민사가 이미 10년을 넘어서면서 자연적으로 영주화의 조건이 생겨났으며 1990년대 이후 전국의 공단 지역과 서울 도심, 그리고 서울 외곽에 불법체류자들의 게토가 만들어졌다

성된 국가는 거의 없다. 아이슬랜드, 포르투갈, 한국은 자주 언급되는 단일민족 국가의 사례들이다.”(Kymlicka 2003: 149)

17)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재한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은 외국인 정책을 체계화하려는 시도인데, 이 법의 제정이 외국인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엄한진 2006; 설동훈 2005).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배제 모델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렵다. “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적부여 원칙과 차별배제 모형에 입각한 외국인 관련 공공정책으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는 21세기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전광희 2006: 110).

최근에는 이른바 반만년 단일민족 신화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지적이 많은데, 고대로부터 한국역사에는 수많은 민족 간 교류가 있었고 귀화 성씨도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근대 경험에서 ‘이민자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물론 이민자 문제가 아예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대표적 소수민족인 화교는 무관심과 차별의 대상이었고(박경태 2004, 2006) 대다수 한국인들은 화교가 ‘소수민족’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들은 20세기적인 민족국가 형성의 단계가 아니라, 세계화로 인한 탈-민족국가의 흐름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이르러 한국인들은 이민자 문제를 비로소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 나. 한국적 특수성 - 분단과 이산

20세기 한국사회에서는 이주자의 유입이 아니라 식민지배 및 전쟁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민족의 이산(Korea Diaspora)이 나타났다. 2001년을 기준으로 한국인은 남북한에 약 7천만 명, 기타 세계 151개국에 560여 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해외 거주자의 규모는 그 절대 수에 있어서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며 모국인구 대비 비율에 있어서는 약 8%에 가까운 수치로서 상당히 높다. 물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들이 외국으로 가게 된 시기, 특히 이산의 계기나 거주국에서의 생존조건은 매우 다르다. 현재 이 한인들은 거주국 사회 안에서는 ‘소수민족’의 위치에 있다. 해외 한인의 경우 한인이면서도 비한인인 위치, 거주국 사회의 일원이면서도 이방인이라는 모순적이고 다중적인 정체성을 소유하게 된다. 최근의 연구들은 해외 한인들을 ‘디아스포

라'18)라는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는데, 한민족이라는 동질성 중심의 시각이나 소수종족이라는 개별적 특수성 중심의 논의를 넘어서서 이질성과 동질성을 통합적으로 해명하려는 새로운 연구경향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인의 해외이주 현상은 9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유입현상이나 다문화주의와 연관지어 사고할 필요가 있다(박명규 2004). 즉, 디아스포라적 사고는 단일문화, 단일민족론 등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고 다문화주의, 다원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또한 냉전의 와중에서 분단국가체제가 성립된 후 분단으로 인한 긴장과 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인에게 근대적인 민족국가 형성은 아직 완수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결손국가론'으로 개념화하는 시도도 있다.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근대 경험은 다문화·다민족 사회의 맥락을 훨씬 복합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 한국으로 유입하는 외국 국적자 중 최다다수는 중국 국적을 지닌 한인, 즉 조선족들이며,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새터민)들 역시 난민 혹은 생존을 위해 고향을 떠난 이주자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전망은 외국인 이주자의 문제와 더불어 한인들의 이주 문제, 즉 해외 한인의 모국 귀환 동기나 북한 주민의 이주라는 또 다른 차원과 중첩되는 것이다.

장태한(2001)은 통일문제를 단지 '같은 민족'이라는 당위성만으로는 풀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남북한 문제를 '인종 민족' 이론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북한인과의 동질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을 것이며, 따라서 남북한의 '이질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본다. 통일의 목적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역설적으로 같은 민족 안에 존재하는 차이와 이질성

18)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개념은 어원적으로 그리스어 전치사 dia(~를 넘어)와 동사 spero(씨 뿌리다)에서 유래되었다. 역사적으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유랑을 의미하는 말로 많이 쓰였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디아스포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유대인의 경험 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윤인진 2003: 5).

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통일 이후 독일에서 나타난 사회통합의 난관에서 보듯이 차이와 이질성을 지닌 다양한 집단들이 어떻게 조화와 공존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사회적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준비는 결국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장태한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을 폭넓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해외 한인과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도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으나, 아직 관련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다면 분석의 초점이 흐려질 우려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외국인의 국내 이주 현상을 주로 다루되, 분단과 이산이라는 한국의 근대 경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새터민(탈북자)에 대한 문항을 일부 포함시켰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최대다수는 중국 국적의 한인, 즉 조선족 집단이므로 이들을 일반적인 중국 국적자와 구분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 다. 이주의 여성화와 한국의 가부장제

최근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와 그 자녀의 문제이다. 아직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단위 이주나 영주 개념이 정착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포착된 것이 바로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었던 것이다. 풍습과 가치관이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여성들을 ‘한국인 며느리’로 동화시키고 이들 가정의 혼혈자녀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처럼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차가운 시선으로 대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엄한진 2006). 그러나 급속한 정책의 러시가 과연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적절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김혜순(2006)은 “역설적이지만 부계혈통주의와 단일민족주의의 강고한 결합이라는 한국의 사회문

화적 특성이 정부가 이민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데 활용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공고한 한국사회에서 배우자를 구하기 힘든 남성들을 위한 지원정책(예를 들면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은 쉽게 명분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부계혈통중심 가족주의와 단일민족주의의 강고한 결합이라는 한국사회의 이념적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는 전지구화가 수반하는 거대한 경제 질서의 변화와 이주의 증대라는 큰 틀 안에 있지만 노동이주와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최근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글로벌 이주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현미 2006; 이해경 2005). ‘이주의 여성화’는 남성중심적 결혼제도를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하며, 국제결혼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대규모의 이익집단과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으나 조사문항의 구성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설문을 구분하였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출신국의 가족문화와 상이한 한국의 남성중심적 가족규범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김이선 외 2006). 가부장적 가치관이나 부계중심의 가족규범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태도는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와 양립하기 어렵다. 최근의 정책 프로그램들은 외국인 배우자들을 한국에 적응·동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데, 차이와 다양성을 억누르는 것이 과연 적절한 사회통합의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문화주의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이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여성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슬람 여성들이 서구의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머리수건(히잡)을 착용하는 문제가 서구 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 이를 옹호하는 이슬람 여성들은 자신이 소수민족 문화를 상징하는 히잡의 착용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표출하고자 한다는 해석도 있다. 다른 한편 서구 안의 소수민족 문화가 대부분 남성중심적이

고 가부장적인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수자 문화의 보존을 지지하는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 내의 여성억압을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Okin 1999). 이 연구가 다문화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단위의 이주가 거의 허용되지 않는 한국에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논쟁이 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 5)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 국가적 이주의 증가와 함께 국적과 시민권, 문화적 다양성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그리고 흔히 대안으로 제시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역시 완성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고 있는 ‘다문화’ 논의는 그 진전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예견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이주의 증가세와 이주민의 사회적 가시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도 그 요인이 있겠지만, 이주나 이주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 그 대안에 대한 각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상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진단되고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있다. 미디어 등을 통해 전달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상적이고 단일한, 생명력 없는 불구의 담론(엄한진 2006: 73), ‘다문화사회’의 구체적인 비전은 보여주지 못한 채 피상적인 모토 수준으로 제기되는 ‘열린 다문화사회’라는 정책 목표는 한국사회의 논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민과 관련된 각종 사회문제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비이민 전통 국가에서 외국인 혐오가 보다 심각하고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박병섭 2006: 108), 이러한 점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표적인 비이민 전통국가이자 혈통주의와 ‘단일민족’에 대한 강한 신념을



유지해오면서 제도적으로도 혈통과 민족적 단일성을 근거로 ‘국민인 자’와 ‘국민 아닌 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패러다임에 고착되어 있는(김현선 2006)<sup>19)</sup> 한국사회가 민족적, 문화적으로 상이한 이주민을 완전한 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는 길을 찾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험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그들의 존재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진전에 대한 태도, 그 대안으로서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관심과 입장 등을 점검하고 주요한 난관의 지점을 예견하며 변화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의 진전속도와는 대조적일 정도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이주의 증가나 그와 관련된 갈등 양상에 대한 연구(김세균 외 2006)가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검토

### 1) 이론적 배경 및 개념 검토

다민족·다문화 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는 연구의 범위는 매우 넓다. 여기에서는 20세기의 연구경향을 대표하는 개념인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개념을 고찰하고, 21세기적인 새로운 논의로서 킴리카의 ‘다문화 시민’에 대한 주장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19) 1990년대 후반부터 이주민 가운데 해외동포 및 그 자녀에 대해서 제한적이거나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자격을 규정하는데 있어 혈통주의적 접근을 한층 강화한 바 있다.

### 가.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racism)나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미국, 유럽 학계에서 폭넓게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인종간 갈등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경험한 사회일수록 인종차별 개념에 관한 연구와 논쟁의 역사도 길다. 미국의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분석의 개념이나 도구도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색인종을 일상생활에서 분리하고 차별하던 노골적 인종주의는 1970년대부터 흑인 민권운동과 차별해소 입법이 진전됨에 따라 보다 근대화된 형태 혹은 상징적 인종주의(symbolic racism)로 변화하였다.

상징적 인종차별주의는 미국 국민(백인)들이 평등,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수 인종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반대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흑인에 대한 적나라한 차별, 흑인은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할 필요도 없다는 인종차별적 태도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의해 점차 퇴색하지만, 여전히 상징적 인종주의는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징적 인종주의는 소수인종집단이 실제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집단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소수인종의 속성이나 성향에 대한 가정에 입각하여 만들어진다(Hjerm 2005).

인종주의나 제노포비아가 나타나는 역사적 배경이나 차별적 편견의 내용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를 몇 가지로 유형화해서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Wimmer(1997)에 따르면 인종차별주의나 외국인 혐오의 배후에는 서로 다른 네 가지 논리가 나타난다.

첫번째는 인종차별이 이주민 집단과 원주민 집단 간의 경쟁과 현실적인 이익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인종차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합리적 선택 이론). 이주민의 증대는 실제로 원주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주민을 내보내거나 그들의 이익을 축소시켜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 시장분리로 인해 원주민과 이주민이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실제로 이러한 이익의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도 별로 없다. 결국 인종 간 갈등의 강도는 현실적인 취업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인종간의 평등과 차이, 경쟁의 정당성을 어떻게 인지(perception)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외국인 혐오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외국인 노동자와의 취업 경쟁 또는 이익갈등보다는 사회적 지위나 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더 많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이주자나 소수자는 본질적으로 원주민과는 다른 이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있다(기능주의). 이주자들은 문화적 이질성, 혹은 문화적 후진성(봉건적 관념, 씨족 관념 등)으로 인해 ‘근대화·민주화된’ 내국인들의 사회질서에 섞이기 어렵고, 나아가 전체적인 사회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식의 설명은 인종적 민족적 차이를 본질화하는 사회생물학적 주장과 쉽게 결합된다. 이주자 집단을 민족적인 ‘우리’에 소속된 사람들로, 그리하여 국가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적 문화적 거리’와 ‘인종적 특수성(차이, distinctiveness)’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소수인종에 대한 적응교육 및 인적자본의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민자에 대한 문화적 거리와 사회구조적 거리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통합과 분리의 기제도 교육 수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주자의 ‘이질성’은 이들을 배제하기 위한 구실로 과장되기 쉬우며, 기존의 원주민이나 내국인들이 아니라 이주자들이 변해야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도 한다.

셋째, 이주민 정책은 공식적 또는 준 공식적 지배집단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이주에 대한 담론(discourse)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담론들은 다수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인종차별주의를 형성한다는 주장이 있다(담론 이론). 이러한 입장의 연구자들은 동화주의 뿐 아니

라 다문화주의 사회정책도 엘리트들의 권력을 위해 고안되는 것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다수 시민이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엘리트가 제공하는 담론과는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약점이 있다.

네 번째 입장은 인종차별주의의 근거를 이주자나 소수인종의 특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집단의 특성으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외국인 혐오나 인종차별주의는 민족적 자아와 그 경계를 재정의하는 방식이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한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낸다고 본다. 특히 인종차별주의는 모든 기득권 집단, 다수 인종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따라 매우 불균등하게 확산되어 있으며, 특히 위기를 느끼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집단들은 소수인종에 대해 더 차별적인 태도를 취한다.

Wimmer는 인종주의나 외국인 혐오의 원인은 사실 이주의 증대나 외국인의 존재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사회가 바탕하고 있는 민족-국가적 연대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타인종을 배척함으로써 이전의 민족적 연대를 확인하고 강조하려는 태도로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면 결국 인종차별주의나 외국인 혐오는 ‘정체성 정치’와 ‘이익의 정치’가 어떻게 연관되는가와 관련이 있다.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 과정을 보면 19세기 후반 무렵 베네딕트 앤더슨(Anderson 1983) 말했던 ‘상상적 공동체’로서의 민족이 나타난다. 20세기에 이르면 상상적 공동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이익의 공동체가 되는데, 시민권이 제도화됨으로써 국적을 가진 시민에게는 일정한 권리, 특히 국가에 의한 안전보장, 복지권 등이 제공됨으로써 시민권 자체가 하나의 집합재가 되었다(Marshall 1992). 시민권의 획득 자체가 한 묶음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셈이 되었고 그러한 이익의 경계선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가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민족국가의 이익을 실현하는 같은 민족으로 구성된 관료제(national bureaucracy)의 등장하였고, 한 민족이 한 국가를 소유한다는 의미가 생겨났다. 즉 이익을 공유하는 단위를 ‘민족 정체성’의 경계로 설정함으로써 소수 인종과 소수 민족을 배제하는 관념이 나타난 것이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를 경험한 적이 없는 한국인들에게 인

종주의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느껴질 것이다. 엄한진(2006: 50)에 따르면 외국인혐오증과 인종주의를 구분하는 하나의 용법으로써, 외국인 혐오증은 다른 민족과의 접촉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원초적인 차원의 거부감 내지 두려움으로, 인종주의는 다른 민족과의 공존 경험이 충분히 길고 이 공존이 일시적인 것에서 영구적인 것이 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거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의 태도는 인종주의라기 보다는 접촉경험의 절대적 부족에서 오는 외국인 혐오증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인혐오증과는 다른 인종주의가 외국인과의 일상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이들을 경쟁상대로 여기는 계층을 중심으로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다문화 시민(intercultural citizen)

킴리카(Kymlicka 2003)는 다문화주의의 지지자로서 다문화 국가(multicultural state)의 성격과 이러한 국가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시민(intercultural citizen)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sup>20)</sup> 우선 국가 수준의 다문화주의는 헌법, 제도, 법률이 다문화적으로 운용되어 한다는 의미이며, 개별 시민 수준의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적 시민이 지녀야 할 지식, 신념, 미덕, 습관, 성향, 또한 이른바 다문화적 스킬(multi-cultural skill)도 포함한다. 이상적으로는 다문화 국가와 다문화 시민이 함께 작동해야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자간의 모순이나 갈등이 나타난다고 킴리카는 지적한다.

킴리카가 말하는 다문화 국가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민족 집단이 국가를 소유한다는 과거의 관념을 배척하며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속한다고 본다. 둘째, 소수집단이나 비(非)지배집단 구성원들을 동화시키거나 배제하려는 국민형성 정책(nation-building policy)을 배척(거부)한다. 셋째, 다문화 국가는 소수-비지배 집단에게 행해진 역사적

20) 'multicultural'은 흔히 '다문화'로 번역되며, 'intercultural'은 '상호문화지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마땅한 번역어가 없어 여기에서는 일단 '다문화'로 표기하였다.

불의를 인식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표출한다.

다문화 시민은 일차적으로 다문화국가의 이러한 세 가지 특성과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국가수준의 다문화적 개혁이 개인 수준의 다문화적 스킬이나 지식에의 욕구 및 인센티브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 국가가 인종 민족적 소수자에게 자신들의 언어나 제도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각 소수자 집단이 별도의 ‘병렬적 사회’(parallel societies)를 만들어 같은 국가에 거주하는 다른 인종·민족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어권 캐나다인들은 불어권 캐나다인들의 생각이나 태도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불어로 발행되는 매체나 방송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교류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다중 언어를 인정하는 스위스나 벨기에에서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민들간의 상호작용이나 교류가 거의 없으며, 이들은 같은 나라 국민이지만 ‘서로 등을 댄 채’ 밖을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한편으로 이들 국가의 다문화주의는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루면서 소수집단의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다른 한편 소수집단과 다수집단간의 교류와 상호작용의 수준은 더욱 저하되는 실망스런 결과가 나타났다. 가장 좋은 경우 대다수 시민들은 타집단의 생활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며, 최악의 경우 다른 집단에 대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표출된다. 다문화 국가의 정책이 ‘다문화적인 시민’이 아니라 배타적인 시민을 만들어내는 역설적 결과를 낳은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시민’은 단지 다문화 국가를 지지할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지향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킴리카는 ‘다양성을 지향하는 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즉, 다문화적 스킬은 단지 전지구화 시대에 잘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전지구화의 시대에 어떤 집단도 자족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수용은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를 지지하는가 여부, 또한 어떤 유형의 다문화주의를 지지하는가 여부를 떠나서, 킴리카가 말하는 다양성에 개방적인 태도 및 그것을 적극

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는 이 연구에서 다루는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문화적 스킬과 지식을 확장해야 한다고 할 때, 다양한 문화 중에서도 어떤 문화, 어떤 민족과 인종의 문화를 수용할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한다. 만약 다문화 스킬을 개발하는 일차적 목적이 개인적인 자아발전, 그리고 세계화된 경제와 초국적 정치제도 안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것이라면, 이웃 문화보다는 멀리 있는 거대 문화를 배우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킴리카는 ‘로컬 다문화주의’와 ‘글로벌 다문화주의’(또는 코스모폴리탄 다문화주의)’를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보다는 후자가 특권화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인들은 세계화를 대세로 수용하고 있으며 외국어 교육이나 외국 유학, 국제적인 교류 확대를 대체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순응성,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이 반드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미국문화나 영어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다른 지역, 다른 국가에 대한 관심이 왜소화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킴리카는 글로벌 다문화주의보다는 로컬 다문화주의를 존중하는 것이 다문화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또 세계화를 지배하는 강대국의 문화 뿐 아니라 이웃한 지역의 문화를 수용한다고 할 때, 그 문화 중에서 어떤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가도 고민해볼 문제이다. 북미지역에서 다문화 교육의 이념이 활발하게 도입되었던 1970, 80년대에는 다른 문화의 가장 이국적이고 독특한 측면, 가령 전통명절, 민속의상, 춤, 음식 등을 주로 가르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겉핥기식의 다문화주의, 혹은 토크니즘을 비판하면서 다른 문화의 철학·종교·예술 등을 진지하게 공부해야 한다는 매우 유토피아적인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자신과는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는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대한 호감이 늘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문화적 시민의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신념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그들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해 차이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다. 다문화 시민의 기본

적인 소양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관용성에 있다. 킴리카는 다문화 교육의 목적이 다른 문화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방식, 그리고 각 집단이 스스로 자신을 대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등에 있다고 말한다. 동질성에 익숙해져서 이질성을 불편해하는 태도가 아니라, 다른 것과의 공존을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기존연구 검토

### 가. 외국인과 이주자에 대한 태도 조사

인종, 민족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문데, 계층간 양극화나 지역감정에 비교할 때 인종·민족간 갈등 문제가 전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태한(2001)은 한국사회에 인종민족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으며 따라서 인종 민족의식에 대한 조사나 연구 자료도 전무한 현실적인 무관심을 비판한다. 그는 전국 12개 대학교의 1,28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민족, 인종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의 인종민족 의식에서 서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백인 선호’ 의식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응답자들은 결혼 대상으로 물론 한국인을 가장 많이 지목했으나 그 다음 순위는 재미한인이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서유럽인과 미국인이 다른 지역의 외국인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서구인 또는 서구에 거주하는 한인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대학생들의 인종선호도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결국 백인의 인종차별 의식을 한국인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른 민족·인종에 대한 선호도 순위를 보면 미국과 서유럽인, 일본인, 그리고 동남아인의 순이었으며 흑인과 아프리카인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았다. 흑인과 아프리카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백인의 차별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도 흥미롭게 나타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대학생은 민족주의 성향이 뚜렷한 반면 여학생은 서구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에 비해 여생이 타인종·타민족과의 결혼에 더 호의적이고 개방적 태도를 보였으며 한국인 이외의 결혼상대자로 미국인이나 서유럽계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인, 흑인, 아프리카인에 대한 거리감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항구도시인 부산지역 대학생이 외국인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데 비해 대구나 광주지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으며, 특히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반공 성향이 짙은 강원도 지역 학생들은 북한인, 조선족에 대해 타 지역보다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장태한의 연구가 다양한 인종·민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분석한다면, 설동훈(2006)의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분석 대상은 국제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국민·민족 정체성에 대한 태도이며, 동일한 설문을 일반인, 대학생, 결혼이민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묻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분석 결과 결혼이민자 가족에서 출생한 자녀를 ‘한국인’ 또는 ‘한민족’으로 보는 태도에서 이민자 부모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부모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자녀를 한국인(응답률 97.3%)인 동시에 한민족(응답률 97%)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응답양상은 이와 다른데,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한국인 이라는 응답은 68%, 한민족이라는 응답은 그보다 더 낮은 54.4%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한국인들이 혈통에 근거한 민족 및 국민 개념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을 국민 또는 민족의 범위 안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타자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설동훈 2006). 혈통에 근거한 순혈주의적 단일민족 관념으로 인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집단’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점차 늘어나는 결혼이민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 및 사회진출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꾸로 만약 국제결혼 이주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인·한민족이라고 보는 응답이 높게 나온다면 그것이 과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인가를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나 이들의 자녀는 출신국과 거주국, 어머니 나라와 아버지 나라 사이에 모두 근거를 두고 있는 중간적 존재이며, 만약 어느 한 쪽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과도한 동화의 요구나 자민족 중심주의로 해석될 수도 있다.<sup>21)</sup>

#### 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적 태도 연구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최근 들어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의 실태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사회적 소수자의 한 사례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 등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연관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박수미·정기선(2006)의 연구는 전국 규모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폭넓게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사회적 소수자는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기타 소수자(동성애자, 이혼자, 편부모 가정의 자녀, 자발적 무자녀 부부 등)였는데, 분석결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21)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결혼 이민자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인이자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국적은 여전히 본국 국적을 응답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조사 대상인 결혼 이민자 전체에서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응답은 69.3%, 한민족이라는 응답은 75.5%로 자녀에 대한 응답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남성 결혼이민자들은 조선족을 제외하면 60% 이상이 자신이 한민족이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도 중국 한족의 경우에는 30% 이상이 자신을 한민족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이런 차원에서 설동훈은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주체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그들이 원할 경우 한국 민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민족 개념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심스런 해석을 하고 있다(설동훈 2006: 92-3).

22) 이 연구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로 측정하였다. 즉, 각 집단 사람들을

성별, 학력, 연령에 따라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편견의 정도가 낮았다. 소수자 집단에 따라 인구학적 요인이 편견에 미치는 영향도 달랐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은 학력이 높을수록 낮아졌으나, 동성애자나 여성에 대한 편견에는 학력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연령이 젊은 층에서 모든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낮아지지만, 연령별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었다. 연령이 젊을수록 모든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낮아진다.

**일반적 가치 - 측정 문항**(한국여성개발원 2004)<sup>23)</sup>

“귀하는 아래에 제시한 가치들을 귀하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7점 척도)

- |            |                                   |
|------------|-----------------------------------|
| 1) 보편주의 가치 | ① 평등 (모두에게 기회가 동등함)               |
|            | ② 사회정의 (불의를 바로잡음, 약자를 보살핌)        |
|            | ③ 마음이 넓음 (나와는 다른 사상이나 신념에 대해 관대함) |
|            | ④ 환경보호 (자연을 보존하기)                 |
|            | ⑤ 정직 (거짓 없음, 진실함)                 |
|            | ⑥ 도움이 됨 (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것)        |
| 2) 권력 가치   | ⑦ 사회적 권력 (타인에 대한 통제, 지배)          |
|            | ⑧ 사회적 인정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 |
|            | ⑨ 권위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권리)        |
| 3) 자기지도 가치 | ⑩ 자유(행동과 사고의 자유)                  |
|            | ⑪ 성공 (목표를 달성함)                    |
|            | ⑫ 독립성 (자기 자신을 믿음, 자족적임)           |
|            | ⑬ 야망 있음 (무엇을 이루고자 갈망하고 열심히 일함)    |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보편주의 가치, 권력가

얼마나 좋아하는지(호감도),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보는지(신뢰성),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는지(사회적 거리감)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23) 이 문항은 Schwartz(1992)의 가치척도 중 보편주의 가치, 권력가치 및 자기지도 가치를 반영하는 총 13개의 형용사를 써서 측정한 것이다(박수미 정기선 2006).

치 및 자기지도(self-direction) 가치 등 응답자의 다른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평등, 사회정의, 정직 등 ‘보편주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장애인과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성애자나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편견에는 이러한 보편주의 가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타인에 대한 통제와 지배, 다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중요시하는 ‘권력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높았다. 자유, 성공, 독립성 등을 중시하는 ‘자기지도 가치’는 보편주의 가치보다는 편견에 미치는 영향이 낮았으나 장애인, 여성에 대한 편견을 다소간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보편주의 가치나 권력 동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김혜숙(2002)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차별적 태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주의 가치를 고양시키고 권력 가치를 지양하도록 하는 가치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또한 박수미·정기선(2006)의 연구에서는 세 가지 가치와 연령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기대와 유사하게 젊은 세대에서는 ‘보편주의 가치’보다 ‘자기지도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평등, 정의와 같은 일반적인 가치보다 자기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더 중시하는 젊은 이들의 태도는 소수자 집단과의 화해와 공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을 연구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척도는 ‘사회적 거리감’이다. 김상학(2004)은 전국 8개 대학의 대학생 1,005명을 대상으로 네 가지 사회적 소수자 집단(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을 ‘사회적 관계맺음을 허용하는 정도’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재구성하고, 아울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감정적 평가를 측정하였다.

김상학의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는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나 부정적 고정관념, 감정적 평가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써 주목할 만하다. 우선 대학생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 중 한 집단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을 많이 느끼는 응답자는 나머지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사회적 거리감을 많이 느낀다는 점을 밝혀내고 이를 ‘사회적 거리감의 일관성’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소수자 집단과 접촉한 경험은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완화시키지만 이미 굳어진 고정관념을 완화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둘째,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 차이는 인구학적 특징이나 가족적 배경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었다. 셋째,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인지적 요인보다는 감정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 다. 국민정체성·시티즌십(citizenship)에 관한 연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인의 국민·민족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개념화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한국인의 국민 정체성에는 배타적인 단일민족 순혈주의를 신봉하는 강한 측면과, 다른 한편 세계화와 개방화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약한 측면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로는 <2005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sup>24)</sup>가 있는데,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결과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은 자신을 한민족(64%)보다 한국 국민(77%)에 더 가까운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한민족이나 한반도 같은 혈연·지연적 특성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의 소속감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만드는 핵심요소로 나타났다. 진정

24) 이 조사는 동아시아연구원과 중앙일보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2005년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1,03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앙일보 2005. 11. 13일자, 14일자 보도.

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82%)하거나 ‘한국인의 혈통’(81%), ‘대한민국에서 평생 거주(65%)’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88%)을 더 중시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이라 하여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한민족으로 본다(28%)는 관대한 의식이 일부 나타난 반면, 국적을 포기한 한국인을 한민족으로 보는 응답은 훨씬 낮았다(9%).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정체는 혈연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적 민족주의’라는 내용으로 요약되어 있다.

이 조사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다른 사회적 정체성보다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읍면동/시군구, 광역시·도) 보다는 대한민국을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76.8%)이 많았으며, 국가를 초월한 아시아 정체성(44%)이나 세계인으로서의 정체성(27.1%) 역시 국민정체성보다는 훨씬 낮았다. 한민족 정체성을 느낀다는 응답은 상당히 높았으나(63.9%)도 높았으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혈통이나 민족과 같은 귀속적 요소보다는 법률적인 국적의 획득을 훨씬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서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한국인은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를 당연시하였기 때문에 ‘국민’과 ‘민족’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sup>25)</sup> 따라서 ‘국적’을 중요시하는 태도 안에는 한국 국민은 당연히 한민족이라는 고정관념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적’을 중요시한다고 하여 혈통이나 민족적 특성을 가벼이 여긴다는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 둘째, 한민족의 범위는 북한주민과 세계 각지에서 살고 있는 재외 동포까지 포괄하는 반면 ‘대한민국 국민’은 그보다 좁은 범위의 남한 국적자를 의미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한민족 중에서도 남한 사람이 가장 쉽게 동일시할 수 있는 핵심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25) 한 예로, 미국의 프로풋볼 선수 하인스 워드가 자신이 ‘코리언(Korean)’임을 절감했다고 말했을 때,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은 이를 ‘한민족’ 또는 ‘한인’인 아니라 ‘한국인(국민)’으로 오역하여 보도하였다. 그는 엄연히 한국계 미국인, 즉 한민족 혈통을 가진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 보도된 것이다(설동훈 2006: 80).

이러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민족적 요소보다 법률적 국적을 더 중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잉해석이 될 수 있다. 오히려 한 민족의 범위 안에 핵심집단과 주변집단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국민의 자격조건에 대한 25개국에서의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한 정기선(2004)<sup>26)</sup>의 연구는 ‘국민됨(nationhood)’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국제적인 추세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정체성을 민족적 요인(ethnic factors)과 시민적 요인(civic factors)을 나누어 분석의 구성요소로 삼고 있다.<sup>27)</sup>

**한국인의 자격조건 - 설문 문항(1995 KGGS- ISSP module)**

- |         |  |
|---------|--|
| 민족적 요인- | ①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출생)<br>② 한국 국적을 갖는 것 (국적 소지)<br>③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장기 거주)<br>④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종교) |
| 시민적 요인- | ⑤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것 (언어)<br>⑥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제도와 법 존중)<br>⑦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소속감)                     |

위의 7 가지 요인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두 가지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즉, 출생, 국적소지, 장기거주, 종교 항목은 ‘민족적 요인(ethnic factor)’으로, 제도와 법 존중 및 소속감, 언어는 ‘시민적 요인(civic factor)’으로 추출되었다.<sup>28)</sup>

26) 이 연구는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의 1995년 조사결과 중 국민의 자격조건에 대한 응답을 비교분석하였다.

27) 정기선의 연구에서는 ‘국가정체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관련된 연구들과 통틀어 ‘국민정체성’으로 통일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28) 물론 개별 항목들이 요인으로 추출되는 양상은 국가별로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정기선에 따르면 조사대상 24개국 중에서 15개국은 두 요인이 추출된 반면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에서는 한 요인만이 추출되었다. 사실 한 요인만이 추출된 9개국

분석 결과에서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다. 첫째, 국민정체성에 대한 태도에서 한국인들은 민족적 요인보다 시민적 요인을 더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사 대상 25개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 중요한 자격조건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항목은 ‘그 나라 사람임을 느끼는 것’이었으며 한국의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자료와 응답의 순위를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즉, 다른 나라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한국인들은 시민적 요인(25개국 중 21위)보다 민족적 요인(25개국 중 8위)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둘째, 시민적·민족적 요인을 통합해서 보았을 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정체성에 관련된 요인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편에 속하였다. ‘국민됨’의 자격조건에 대한 응답의 유형은 (시민적 요인을 민족적 요인보다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대체로 유사했지만, 그러한 자격조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응답의 강도는 두 요인 모두에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것은 미국인들의 경우 국민의 자격조건에서 시민적 요인과 민족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응답의 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상식적인 추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한국인들이 순혈주의나 단일민족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경험적 분석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국가 정체성을 그다지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소개한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 결과, 즉 한국인은 다른 어떤 정체성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분석과는 다소 모순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민정체성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척도로 측정하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sup>29)</sup> 또한, 국가 정체성에서 시민적 요소와 민족적 요소 중 어느 쪽을 중시

의 경우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에서 민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외의 다른 8개국은 필리핀, 아일랜드, 이태리, 영국, 스페인, 체코, 일본, 동독 및 서독이다.



하는가 여부는 정치적 성향(진보/보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정체성은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과 연관성이 매우 깊은 개념이다. 그런데 한국인의 순혈주의나 단일민족 관념은 경험적 조사연구를 통해 측정하기는 어려우며, 조사에 따라 국민정체성에 대한 태도가 달리 나타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국민 정체성을 시민적 요소와 민족적 요소로 구분하는 논의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지만(Smith 1991; Jones & Smith 2001; Choe 2002), 지금까지 살펴본 조사결과에서는 시민적 요소와 민족적 요소가 상호 배타적이거나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즉 양자가 다 높은 국가(미국)도 있는가 하면, 어느 한쪽은 높고 다른 쪽은 낮은 경우(노르웨이, 스웨덴)도 있다.

Brown(2000)은 시민적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와 민족적 민족주의(ethnocultural nationalism)에 대한 이분법적 설명을 비판하고 있다. 전자는 자유주의적이고 후자는 집단적, 권위주의적이라는 고정관념도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한다. 시민적 요인을 강조하건 혹은 민족적 요인을 강조하건 간에, 그러한 민족주의를 주도하는 엘리트의 지위가 불안정하고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타자 집단을 겨냥하여 공격적이고 반동적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권위주의적 민족주의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정체성을 시민적 요소와 민족적 요소로 양분하는 개념은 실제 분석에서 견지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여기에서 시민으로서의 인식과 태도를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최현(2004)의 연구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최현은 우선 시티즌십(citizenship)을 ‘특정한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및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관행’으로 정의한다. 시티즌십에는 네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 국적(특정 국가에의 소속), 시

29) 동아시아 연구원의 국민정체성 조사에서는 ‘한민족 정체성’과 ‘대한민국 국민’ 정체성을 대비시켜 후자, 즉 국적을 더 중요시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런데 정기선의 연구에서는 ‘국적’을 시민적 요소가 아니라 민족적 요소로 분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굳이 구분했던 민족 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은 정기선의 연구에서는 한 덩어리로 묶여 ‘민족적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 및 문항구성에서의 차이로 인해 국민정체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일반화하거나 비교해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과 국가의 관계(제도), 그리고 시민의 의식 및 시민 참여 능력이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시티즌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중시하는 시민의 덕목과 의무는 납세와 준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사회·정치 단체에의 참여, 환경을 고려한 상품 구매 등에서 일본인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한국사회가 일본보다는 적극적인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빈곤한 외국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훨씬 관심이 낮았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시민 역할에 대한 인식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나 일본은 시티즌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적 영역을 우선시하는 지향이다. 최현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온 양국의 전통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강력한 민족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바탕을 둔 공적영역 지향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정체성이나 시티즌십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아무튼 세계화 경향으로 인해 국민국가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인이 ‘국민’이나 ‘국적’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다양한 인종과 민족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국민정체성의 내용과 강도, 시티즌십에서의 특징 등을 각각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인들 간의 상호 관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사회적 거리감 등이 일반적인 국민정체성이나 시티즌십과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종적 편견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인종·민족적 편견은 타인종·타민족의 삶의 현실보다는 그들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perception) 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결국 응답자의 일반적인 가치관이나 성향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이주자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이주자의 특성에 좌우되기 보다는 한국인들이 관용성이나 정의와 평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

는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3.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의 개념 구성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이주노동자의 유입, 노동시장과 경제구조의 변화, 세계화로 인한 문화적 개방성과 다양성의 확대, 소수인종의 정치적 입지 변화, 그 외에도 매우 여러 가지 차원의 사회변동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균질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층적 지위나 직업 등에 따라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하는 정도도 매우 다를 것이다. 또한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공존이라는 가치 역시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추상적인 가치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상이한 입장들로 분화될 수 있다. 요컨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사회적 변화과정이나 이를 지지하는 가치관의 내용이 모두 매우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외국인 이주자가 최근 급증하기는 했으나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주 외국인과의 정주 한국인간의 갈등이나 이익의 대립은 아직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조사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현실조건이 변화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시 조사하면 매우 다른 양상으로 급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을 조사하고 분석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방향에 입각하여 한국인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을 정형화된 지표로 보기 보다는 폭넓은 개념

으로 일단 열어놓고, 다양한 차원에서 이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래의 네 가지 차원을 포괄하여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

- ① 사회적 거리감 : 외국인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감정적 의미에 대한 척도를 채용 (외집단에 대한 태도)
- ② 국민 정체성과 시티즌십(citizenship) :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시티즌십에 대한 인식, 관용성(내집단에 대한 인식)
- ③ 문화 다양성에 대한 태도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 외국 및 외국 문화(이문화)에 대한 관심, 글로벌 다문화주의와 로컬 다문화주의
- ④ 종족적 배제주의(ethnic exclusionism) : EU의 척도에 기초한 측정 및 비교<sup>30)</sup>

사회적 거리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차원, 국민정체성과 시티즌십은 정치적 차원, 문화 다양성 분석은 문화적 차원에서 각각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종족적 배제주의’ 분석은 한국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이를 유럽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네 가지 차원에서 조사·분석한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이 반드시 내적 일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모순된 결과가 발견될 수 있다. 한국인의 인종·민족 문제나 이문화(異文化)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 내에서 발견되는 모순된 요소나 비일관성 등이 한국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의외의 발견적 가치(heuristic value)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을 수미일관하고 정합적인 개념 내지 지표로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네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 다양한 태도들을 분석하고 일관성 및 비일관성의 측면들을 드러내는 작업에 무게를 두었다. 이는 앞으로 보다 심화된 연구를 위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0) 각 차원의 개념 정의 및 조사 방법,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3, 4, 5, 6장에서 다루어지며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업 등) 외에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 정치적 이념성향, 양성평등 의식 등의 태도 요인들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인종·민족문제나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태도에는 응답자의 교육수준, 정치적 이념 지향(보수/진보),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jerm 2005). 정치적 신뢰가 낮을수록, 또 정치적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인종주의 편견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반면 신뢰가 높고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편견이 완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보수/진보의 정치적 태도나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 시민의식 등은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의 인종주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인종차별주의가 완화되는 것을 교육의 효과(liberalizing effect)로 해석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학력이 높을수록 약화된다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III

##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    |
|-------------------------|----|
| 1. ‘사회적 거리’의 개념과 측정     | 55 |
| 2. 사회적 거리감 분석           | 62 |
| 3. 감성적 의미론 : 감성, 권력, 활동 | 75 |
| 4. 소결                   | 83 |

## 1. ‘사회적 거리’의 개념과 측정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그러한 관심이 거시적인 추세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측면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김숙자, 1998; 강유진, 1999; 윤형숙, 2004a, 2004b; 이해경, 2005; 설동훈 외, 2005; Kim, 2007). 그러나 전체 이주자나 특정한 민족·인종에 대한 일반적인 한국인의 평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와 평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이미지나 평가를 몇 가지 차원으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론적 시각을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학 전통에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을 다루고 있는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적 거리는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또한 이 개념은 외국인 이주자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유럽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Morrissey, 1992; Meilczrek and Silorska, 2000; Parrillo and Donoghue, 2005). 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는 여러 민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존재 여부와 그 실태를 알아 볼 수 있다.

둘째, 감성적 의미(affective meaning) 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인간의 감성적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몇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몇 가지 중요 차원에서 특정한 대상 즉 개인이나 집단이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통하여 그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인 이미지와 평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성적 의미이론은 전통적인 사회적 거리 연구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측면을 다룰 수 있다. 즉 사회적 거리 연구, 특히 보가더스 척도로 대표되는 경험적인 연구에서는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민족에 대한 편견을 일종의 위계적이고 단일한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반면에 감성적 의미 이론은 이러한 이미지와 평가를 보다 다양한 차원

에서 각각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이 이론은 기존의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 전통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면, 감성적 의미 이론에서 주요 차원으로 다루고 있는 평가(evaluation)와 권력(power) 개념은 지위(status)와 권력(power) 개념과 그 맥을 같이한다. 개인과 집단사이에 존재하는 편견과 스테레오타입을 활발하게 다루고 있는 사회심리학적 전통에서도 도덕성(moral)과 능력(competence)을 주요 차원으로 다루고 있다.

### 1)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는 미국 사회학자인 파크(Park)가 독일의 사회학자 짐멜(Simmel, G.)의 논의로부터 이끌어낸 개념이다. 파크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간 차이가 단순하게 동화(assimilation) 과정을 통해 사라질 것으로 보지 않았다. 즉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어떠한 사회적 ‘거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 거리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친밀감(intimacy)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는 계급의식이나 민족의식처럼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사회적 거리가 클수록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았다. 그는 마치 물리적인 공간상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친근감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종의 친근감 혹은 적대감은 물리적 공간과 꼭 일치할 필요는 없다. 멀리 살고 있는 가족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웃보다 사회적 거리가 더 가깝다(Coser, 1977).

이러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척도가 개발되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척도가 보가더스 척도(Borgadus scale)이다. 이 척도에 의하여 응답자들이 다양한 민족과 인종에 대해 얼마만큼 사회적 거리를 느끼는가가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결혼, 친구, 이웃, 직장동료 같은 7가지 항목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과의 접촉 찬반 여부를 통해 사람들의 자발성(willingness)을 알아봄



으로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심리적 거리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Babbie, 2006).

이 척도는 개별 집단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는지 일종의 위계적인 차이에 기반하고 있다. 일종의 거트만 척도(guttman scale)로 볼 수 있다. 거트만 척도는 하나의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을 그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배치한 것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항목을 찬성한다면, 그 보다 덜한 항목은 당연히 찬성하는 것으로 본다. 보가더스 척도는 사회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통해 가까운 친척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에 점수 1을 부여하는데, 이 때 1점은 사회적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같은 집단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으로 친한 친구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에 2점을 부여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에 3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그리고 특정한 인종이나 민족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에 7점을 부여한다(Parrillo and Donoghue, 2005).

## 2) 감성적 의미 이론

대체로 외국인이나 타민족에 대한 평가는 논리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성적 의미(affective meaning)를 체계화한 이론인 감성적 의미 이론도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론적 시각이다. 감성적 의미 이론은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회정체성은 사회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한 신뢰관계의 근원인 가치체계를 반영한다. 이 개념은 1970년대 말 타이펠(Tajfel)과 터너(Turner)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다. 이 개념은 범주화(categorization), 정형화(identification)와 비교(comparison)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개념과 관련이 깊다. ‘범주화’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사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사한 사물끼리 분류하듯이, 사람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형화’의 의미는 사람들이 집단을 자기가 속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라

는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일시 한다는 것이다. ‘비교’는 사회적 비교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가하기 위해서 비슷한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획득해 나간다는 것이다(Smith-Lovin, 1987; Turner et al., 1987; MacKinnon, 1994; MacKinnon and Heise, 1993).

이러한 사회정체성 개념은 사람들이 어떤 인물이나 물건 같은 대상을 각기 개별적이고 독특한 개체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이러한 대상을 특정한 사회적 집단에 소속된 하나의 구성원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적인 가치나 문화적 가치에 견주어 그 대상의 사회적 역할을 정형화 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체성에 대한 이론의 첫 번째 요소는 안정성(stability)이다. 사회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관계와 사회체제를 기반으로 한다.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이전의 감정은 그 사건에 대한 이후의 감정에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특정한 시점 이전에 한 대상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시점 이후에도 그 대상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정체성에 대한 두 번째 요소는 도덕성(morality)이다. 사회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의 행위는 행위자의 선악에 대한 이미지 혹은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다. 행위에 대한 평가가 그 행위자의 도덕성을 단정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체성의 마지막 요소는 행위와 대상과의 일관성(consistency)이다. 특정한 사회정체성에 대한 평가 혹은 감정은 그 행위 자체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하면, 그 행위 자체 때문에만 나쁘다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일종의 일관성의 원칙(principle of consistency)이 작용을 한다. 즉 나쁜 사람은 나쁜 반응을 받아야 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반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Smith-Lovin and Heise, 1988; Heise, 2001; Heise, 2002).

하이즈(Heise, 2001)는 이러한 사회정체성 이론을 하나의 과정으로 체계화하였다. 우선 개인은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과 타자를 사회

정체성을 통해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정체성에 관련된 감성은 감성적 의미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개인은 그러한 기초적인 의미와 최근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감정을 비교한다. 만약에 최근의 경험이 이러한 감정과 차이가 날 때, 개인은 그러한 기초적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event)을 구성한다. 이러한 하나의 사건은 자신에 의해 실현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실현될 수도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 개인은 하나의 사건에서 기초적인 의미를 확인하지 못하면, 일련의 사건의 고리를 구성해서 기초적인 의미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의도했던 기초적인 의미가 확인되면, 개인은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이나 의제(agenda)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인간은 끊임없이 세계를 재구성하는 의미의 관리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은 여러 경험적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면, 스미스-로빈(Smith-Lovin, 1987)은 미국, 아일랜드, 중동에 대한 비교조사자료를 메타분석(meta-analysis)기법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녀는 조사대상자들이 사회정체성에 대한 특정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도덕성, 일관성이 발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조사대상이 되는 전체 사회에서 유사하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체성 형성과정의 유사성은 맥키논(MacKinnon, 1994)의 연구와 스미스 등(Smith et al., 1994)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정체성 개념과 판단기준이 하나의 이론으로 형성된 것은 오스굿을 비롯한 일련의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성과에 기인하고 있다. 오스굿 등(Osgood et al., 1975)은 감성의 보편적인 세 가지 차원을 증명하기 위해 문화간 감성의미 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시하였다. 측정의 방법은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개념들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응답자에게 각 개념에 대한 형용사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형용사에 대한 정반대 의미의 형용사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정반대의 형용사 묶음들은 사회정체성 측정을 위한 의미분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인물이나 사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정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척도로 사용하였

다. 응답자들은 제시된 각 개념에 대하여 등간척도로 구성된 의미분화척도를 이용하여 평가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들은 각 사회별로 평균을 산출하고, 비교하여 범문화적 상관관계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한 결과 이들 척도들이 주로 세 개의 집단으로 밀집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세 개의 집단은 각각 평가(evaluation), 권력(potency), 활동(activity)으로 명명되었다. 평가의 차원은 도덕, 미적 감각, 기능, 쾌락, 또는 다른 표준의 판단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느낌과 관련된다. 권력의 차원은 물질적인 크기, 강제성, 힘, 사회적 권력, 중요성 등의 평가로 그 실체의 영향력과 관련된다. 활동의 차원은 행동의 경향, 속도, 지각이 있는 자극, 연령, 민감성 등의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는 실제의 자발성과 관련된다. 이 세 가지 차원은 모두 사회적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다. 평가의 차원은 가치와 태도에 상응하고, 권력의 차원은 행동의 영향과 역할의 힘을 나타내며, 활동의 차원은 행동에서 개인의 경향과 정서적 활동의 수준을 평가한다(Heise, 2000; Heise, 2001).

이와 같은 사회정체성 판단의 보편성에 관해서는 다른 분야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캠퍼와 콜린스(Kemper and Collins, 1990)는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차원을 기반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권력(power)으로 사람들의 관계에서 강제성을 수반한다. 이 차원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하는 힘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와 강제의 차원은 주로 인간관계의 인식(cognition)과 관련이 깊다. 두 번째 차원은 지위(status)로 자발성에 기인한다. 여기에는 동의, 경의, 수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발성의 차원은 인간관계의 감정(emotion)과 관련이 깊다.

### 3) 사회적 거리감의 다차원성

이와 같이 미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감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큰 흐름을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많은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주관적 감정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한가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거리감 개념 자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사회적 행동이 아니라, 사회화의 영향을 통해 내재화되는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의 영역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사실 실증주의의 영향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자들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대상만을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간주해 왔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쉽게 측정이 가능한 인간의 행동이나 합리성에 기반을 둔 행동 양식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의 전 영역에 걸쳐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반면에 거리감 같은 인간의 주관적 감정은 합리적으로 측정되거나 예측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성과가 사회적 거리와 이를 측정하는 보가더스 척도라고 볼 수 있다. 감정조절 이론(Affect Control Theory)을 주창한 하이즈를 비롯한 일군의 사회과학자들도 모든 인간은 문화와 사회를 넘어서 상징들의 감정적 의미를 구별하는 공통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 감정을 기능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미분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정체성의 과학적인 측정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다.

둘째,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최근 연구는 사회적 거리감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보가더스 척도 같은 거트만 척도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감이 단일한 차원 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아울러 각 항목 간에 일종의 선형적인 위계 혹은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전제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다루지는 않지만 감성적 의미 일반을 다루는 감정조절 이론에서는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은 사회의 근본적인 의미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평가(Evaluation), 권력(Potency), 활동(Activity)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거리감도 이러한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스테레오타입을 연구하는 사회심리학적 연구 성과들도 다차원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타민족이나 인종을 평가하는데,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 즉 윤리성(morality)과 능력(competence)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윤리성과 능력이라는 차원이 사실 감정조절이론에서 언급하는 평가와 권력 차원과 그 맥이 닿아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그 동안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에서 여러 민족에 대해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양적인 측정값을 산출하여, 그 동안 다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모습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아울러 그러한 사회적 거리감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그 과정과 원인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산출하고자 한다.

## 2. 사회적 거리감 분석

### 1)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이 조사에서 사용된 평가 대상으로 모두 8개 외국인 집단을 선택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에서 대체로 빈번하게 마주치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미국인, 남아시아인, 몽골인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sup>31)</sup>. 그리고 조선족과 새터민의 경우에는 같은 민족이지만 국적이라는 문제를 고려하여 두 집단을 다른 외국인과 함께 비교하였다.

<표 III-1>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할 때 사용한 원자료이다. <표 III-2>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값이다. <표 III-1>을 살펴보면, 한국 방문이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이고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항목이 가장 거리가 가까운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항

31) 평가 대상에 국가와 지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설문지 상에는 지역으로 표기한 경우 사례 국가를 예시하였다. 즉, 동남아시아인(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남아시아인(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과 같은 형식으로 설문하였다.

목인 ‘방문’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가장 찬성 비율이 높은 대상은 미국인이다. 두 번째 항목인 ‘국민’에 대해서는 새터민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높은 집단은 미국인과 조선족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동료’와 네 번째 ‘이웃’ 그리고 다섯 번째 ‘친구’ 항목에 대해서 미국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인에 대한 찬성 비율이 다소 달라지는 항목이 ‘자식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 항목이다. 이 항목에서만 새터민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다. 미국인과 일본인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새터민과 관련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언어와 인종이라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인과 일본인의 경우는 결혼에 관해서 선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가 나타난 것이다.

<표 Ⅲ-1>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찬성 응답자수

(단위: 명)

|            | 조선족   | 중국인   | 일본인   | 동남<br>아시아인 | 새터민   | 미국인   | 남아시아인 | 몽골인   |
|------------|-------|-------|-------|------------|-------|-------|-------|-------|
| 방문         | 1,160 | 1,151 | 1,150 | 1,162      | 1,139 | 1,179 | 1,160 | 1,163 |
| 국민         | 740   | 564   | 617   | 592        | 956   | 787   | 587   | 638   |
| 동료         | 974   | 885   | 956   | 892        | 1001  | 1053  | 875   | 896   |
| 이웃         | 995   | 899   | 932   | 903        | 994   | 1062  | 862   | 896   |
| 친구         | 845   | 771   | 838   | 794        | 915   | 985   | 779   | 792   |
| 자식의<br>배우자 | 293   | 233   | 340   | 199        | 453   | 415   | 201   | 217   |
| 배우자        | 267   | 196   | 302   | 176        | 413   | 347   | 175   | 193   |
| 입국금지       | 57    | 71    | 69    | 50         | 78    | 34    | 55    | 53    |

<표 Ⅲ-2>는 전통적인 보가더스 척도 계산을 적용하여 각 외국인 집단에 대한 거리감을 계산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하여 Kelg and Yamamoto(1998)와 Parrillo and Donoghue(2005)가 사용한 보가더스 척도 항목과 사회적 거리 계산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척도 구성 항

목에는 입국금지, 방문, 국민, 직장동료, 이웃, 친구, 자녀 배우자 등 8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거리감은 먼저 가장 가까운 항목인 자녀 배우자 항목에 1점을 부여하고, 입국 금지 항목에 7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응답자의 대답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을 해당 응답자의 사회적 거리 점수라고 간주한다(Parrillo and Donoghue, 2005).

전반적인 결과는 개별 항목에 대한 찬성 비율과 유사하다. 먼저 전체적인 평균치를 살펴보면, 미국인(2.08)이 가장 가깝게 여기는 대상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새터민(2.28), 조선족(2.48) 순서로 가까운 대상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가장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상은 남아시아인(2.90)과 몽골인(2.82)으로 나타났다.<sup>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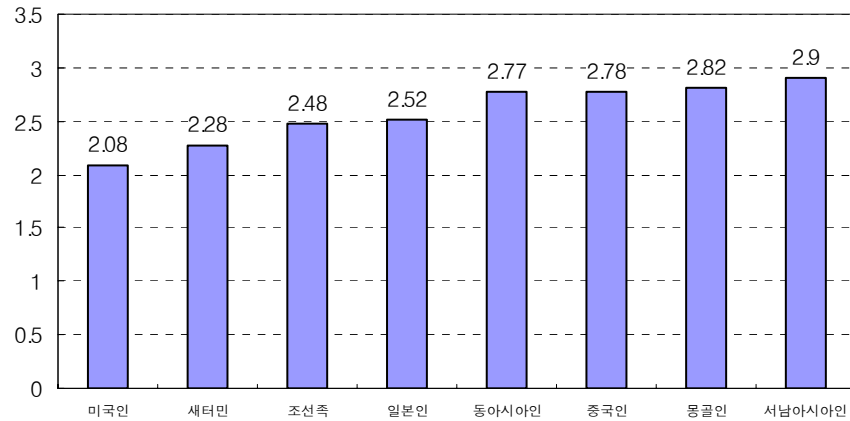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의견에 대한 일치도를 표준편차를 통해 살펴보면, 평균값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유형이 나타난다. 미국인에 평가의 표준편차가 1.33으로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조선족에 대한 평가의 표준편차가 1.57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응답자들 사이에서 가장 의견차이가 나는 대상은 남아시아인(1.83)과 몽골인(1.79)이다.

<표 III-2> 각 외국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보가더스 척도 점수)

|       | 순위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
| 미국인   | 1  | 1,202 | 2.08 | 1.33 |
| 새터민   | 2  | 1,202 | 2.28 | 1.64 |
| 조선족   | 3  | 1,202 | 2.48 | 1.57 |
| 일본인   | 4  | 1,201 | 2.52 | 1.71 |
| 동아시아인 | 5  | 1,198 | 2.77 | 1.72 |
| 중국인   | 6  | 1,202 | 2.78 | 1.76 |
| 몽골인   | 7  | 1,201 | 2.82 | 1.79 |
| 남아시아인 | 8  | 1,201 | 2.90 | 1.83 |

32) 비교대상과 표본의 특성으로 인해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참고적으로 미국조사에는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작은 대상이 앵글로색슨 백인(1.07)이고 가장 큰 대상이 아랍(1.94)으로 나타났다(Parrillo and Donoghue, 2005).





<그림 Ⅲ-1> 각 외국인 집단에 대한 보가더스 척도 평균 점수

##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거리감

여기에서는 주요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보가더스 척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를 산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표 Ⅲ-3>은 성별 사회적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결과는 남녀별 차이가 크게 보이고 있지 않다. t-검정 결과를 보면 차이가 나는 대상은 조선족, 새터민, 몽골인이다. 먼저 조선족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과 몽골인에 대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거리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성별 사회적 거리감(보가더스 척도 점수)

| 성별 | 조선족   | 중국인  | 일본인  | 동남<br>아시아인 | 새터민   | 미국인  | 남아시아인 | 몽골인   |
|----|-------|------|------|------------|-------|------|-------|-------|
| 남성 | 2.33  | 2.76 | 2.52 | 2.76       | 2.15  | 2.14 | 2.86  | 2.68  |
| 여성 | 2.62  | 2.80 | 2.52 | 2.77       | 2.41  | 2.02 | 2.94  | 2.96  |
| 합계 | 2.47  | 2.78 | 2.52 | 2.77       | 2.28  | 2.08 | 2.90  | 2.82  |
| t값 | .001* | .694 | .969 | .975       | .004* | .119 | .421  | .0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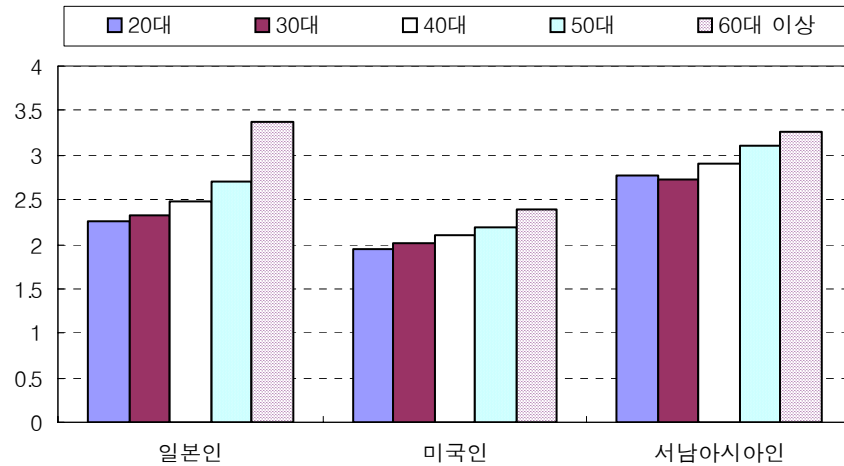
\* p<0.05

<표 III-4>는 연령별 사회적 거리감과 F-검정의 유의확률을 제시하고 있다. 연령별 거리감은 성별 거리감과 달리 일본인, 미국인, 남아시아인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일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거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일본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리감을 크게 느끼는 반면에, 50대 이하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거리감을 작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인에 대한 거리감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연령이 높을수록 미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미국인에 대해 거리감을 가장 느끼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미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작다. 남아시아인에 대한 거리감은 앞서 일본인이나 미국에 대한 거리감과 유형이 다소 다르다.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남아시아인에 대해 많은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향은 40대 이상 응답자 사이에서만 나타난다. 20대와 30대 사이에서 남아시아인에 대한 거리감에 차이가 없다.

<표 III-4> 연령별 사회적 거리감(보가더스 척도 점수)

| 연령<br>재코드 | 조선족  | 중국인  | 일본인   | 동남<br>아시아인 | 새터민  | 미국인   | 남아시아인 | 몽골인  |
|-----------|------|------|-------|------------|------|-------|-------|------|
| 20대       | 2.32 | 2.67 | 2.26  | 2.66       | 2.48 | 1.94  | 2.77  | 2.77 |
| 30대       | 2.46 | 2.63 | 2.32  | 2.76       | 2.15 | 2.02  | 2.72  | 2.77 |
| 40대       | 2.45 | 2.81 | 2.47  | 2.76       | 2.25 | 2.09  | 2.91  | 2.78 |
| 50대       | 2.60 | 2.99 | 2.70  | 2.81       | 2.16 | 2.18  | 3.10  | 2.88 |
| 60대 이상    | 2.72 | 2.94 | 3.37  | 2.96       | 2.39 | 2.39  | 3.26  | 3.04 |
| 합계        | 2.48 | 2.78 | 2.52  | 2.77       | 2.28 | 2.08  | 2.90  | 2.82 |
| 유의확률      | .121 | .123 | .000* | .587       | .106 | .017* | .019* | .603 |

\* p<0.05



<그림 III-2> 연령별 사회적 거리감 점수

학력별 사회적 거리감은 성별이나 연령별 거리감과 달리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드러나고 있다. <표 III-5>는 학력별 거리감과 F-검정의 유의확률을 제시하고 있다. 새터민에 대한 거리감을 제외하고 다른 대상에 대해 학력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모든 외국인 집단에 대하여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있다. 중졸 이하 응답자들이 새터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거리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반면에 대졸 이상 응답자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거리감을 가장 작게 느끼고 있다.

<표 III-5> 학력별 사회적 거리감(보가더스 척도 점수)

| 학력    | 조선족   | 중국인   | 일본인   | 동남<br>아시아인 | 새터민  | 미국인   | 남<br>아시아인 | 몽골인   |
|-------|-------|-------|-------|------------|------|-------|-----------|-------|
| 중졸 이하 | 2.87  | 3.12  | 3.30  | 3.04       | 2.37 | 2.42  | 3.29      | 2.99  |
| 고졸    | 2.61  | 2.88  | 2.57  | 2.83       | 2.38 | 2.10  | 2.96      | 2.95  |
| 대졸 이상 | 2.23  | 2.57  | 2.24  | 2.62       | 2.15 | 1.96  | 2.73      | 2.65  |
| 합계    | 2.48  | 2.78  | 2.52  | 2.77       | 2.28 | 2.08  | 2.90      | 2.82  |
| 유의확률  | .000* | .001* | .000* | .013*      | .051 | .001* | .002*     | .010* |

\* p<0.05

<표 III-6>은 가구소득별 사회적 거리감과 F 검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나는 대상은 일본인, 새터민, 남아시아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본인에 대한 거리감을 살펴보면, 가구소득과 거리감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일본인에 대해서는 가구소득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는 비선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거리감이 작은 집단은 가구소득이 201만원에서 400만원 이하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들이다. 이들보다 가구소득이 낮거나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커지고 있다. 가장 거리감이 큰 경우는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 범주이다. 그 다음으로 거리감이 큰 경우는 가구소득이 101-200만원 이하 범주이다.

두 번째로 새터민의 경우는 가구소득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가 다소 복잡하다. 가장 거리감이 작은 경우는 401-500만원 이하 범주이다. 그 다음으로 작은 경우는 201-300만원 이하 범주이다. 반면에 가장 사회적 거리감이 큰 경우는 100만원 이하 범주이다. 그 다음으로 큰 경우는 501만원 이상 범주로 나타났다.

남아시아인에 대한 거리감은 일본인의 경우와 유사하다. 가구소득과 사회적 거리감 사이의 관계가 비선형적이다.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낮은 경우는 201-300만원 범주로 나타났다. 이 범주보다 가구소득이 낮거나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크다. 가장 사회적 거리감이 큰 경우는 100만원 이하 범주이다.

<표 III-6> 가구소득별 사회적 거리감(보가더스 척도 점수)

| 가구소득      | 조선족  | 중국인  | 일본인   | 동남<br>아시아인 | 새터민   | 미국인  | 남아<br>아시아인 | 몽골인  |
|-----------|------|------|-------|------------|-------|------|------------|------|
| 100만원 이하  | 2.71 | 3.00 | 3.23  | 2.97       | 2.62  | 2.45 | 3.46       | 3.14 |
| 101-200만원 | 2.45 | 2.89 | 2.66  | 2.77       | 2.28  | 2.12 | 2.82       | 2.85 |
| 201-300만원 | 2.36 | 2.59 | 2.39  | 2.61       | 2.17  | 2.01 | 2.77       | 2.65 |
| 301-400만원 | 2.58 | 2.79 | 2.39  | 2.87       | 2.36  | 2.09 | 3.02       | 2.86 |
| 401-500만원 | 2.41 | 2.96 | 2.41  | 2.84       | 1.95  | 2.02 | 2.76       | 2.74 |
| 501만원 이상  | 2.57 | 2.69 | 2.45  | 2.77       | 2.47  | 1.97 | 2.92       | 3.03 |
| 합계        | 2.48 | 2.78 | 2.52  | 2.77       | 2.27  | 2.08 | 2.90       | 2.82 |
| 유의확률      | .347 | .169 | .001* | .382       | .033* | .117 | .031*      | .161 |

### 3) 사회적 거리감 국제비교

#### 가. 미국인의 사회적 거리 분석

보가더스 척도 같은 상대적 척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표본 추출방법, 표본의 성격 등 다양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상대적으로 유사한 항목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반적인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7>은 최근에 보가더스 척도를 기반으로 미국 사회에서 인종과 민족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원자료에서는 총 30개 인종과 민족이 조사 대상이지만, 이 표에서는 가장 가까운 대상부터 가장 멀게 느껴지는 대상까지 대표적인 인종과 민족만을 제시하였다.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대상인 미국 백인(1.07)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가 작은 인종으로는 주로 유럽계에 속한 영국인, 그리스인, 네덜란드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인은 중간 혹은 사회적 거리가 먼 인종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인(1.47)과 필리핀(1.46)인은 일본인(1.51)이나 한국인(1.54)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작다. 반면에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큰 인종으로는 인도인(1.60)과 아랍인(1.94)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한국 사회의 결과를 보면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비해 사회적 거리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미국에서 조사할 때, 응답자들 대다수가 유럽계라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작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족이나 새터민에 대한 평가만을 비교할 때도 사회적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아울러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소수인종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 보면 한국 사회에서 대체로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에서 가장 사회적 거리가 먼 대상인 아랍인에 대한 보가더스 척도값이 1.94인 반면에 한국에서 가장 거리가 먼 대상인 남아시아인에 대한 보가더스 척도값은 2.90이다.

&lt;표 III-7&gt; 미국인의 주요 인종/민족에 대한 보가더스 척도 점수 : 2001년

| 대상    | 점수   | 대상   | 점수   | 대상   | 점수   |
|-------|------|------|------|------|------|
| 미국 백인 | 1.07 | 유태인  | 1.38 | 일본인  | 1.51 |
| 캐나다인  | 1.20 | 폴란드인 | 1.45 | 한국인  | 1.54 |
| 영국인   | 1.23 | 필리핀인 | 1.46 | 멕시코인 | 1.55 |
| 그리스인  | 1.33 | 중국인  | 1.47 | 인도인  | 1.60 |
| 네덜란드인 | 1.35 | 러시아인 | 1.50 | 아랍인  | 1.94 |

출처: Pariilo and Donohue(2005).

#### 나. 유럽사회조사

유럽에서는 다민족, 이민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대규모 조사로 유로바로미터(Euro Barometer)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하여 이 연구의 자료와 문항별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 다만 유럽사회조사에서 다른 인종과 거리감을 두 가지 방식으로 묻고 있다. 첫 번째 문항은 가까운 친척이 다른 민족이나 인종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은 직장에서 직장상사로 오는 문제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문항을 기반으로 EUMC(2005)에서는 각 유럽국가의 인종 사이에 거리 유지에 대한 찬성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I-8>은 대표적인 몇 국가의 찬성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전체 유럽국가에서는 평균 21.0%가 인종 사이에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종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자는 비율이 높은 국가,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가 큰 국가는 주로 지중해 지역 국가와 동유럽 국가이다. 반면에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는 상대적 찬성비율이 낮은, 사회적 거리가 작은 국가들이다.

<표 III-9>는 이러한 결과와 비교하고자 보가더스 척도를 구성할 때 사용한 항목 중 가장 유사한 항목인 외국인과 자녀 결혼 반대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대상인 외국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단순 평균이 75.6%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보가더스 척도의 구체적인 측면을 분석할 때,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외국인과 관계를 평가할 때 혈연이나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과 유사한 결과이다. 즉 한국인들이 일시적인 방문이나 이웃, 동료, 친구라는 측면에서 특별하게 폐쇄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혈연과 가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 내집단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폐쇄적인 편이다.

<표 Ⅲ-8> 유럽국가별 인종간 거리 유지 찬성 비율

| 국가    | 백분율 (%) |
|-------|---------|
| 그리스   | 39.33   |
| 체코    | 30.99   |
| 벨기에   | 25.21   |
| 아일랜드  | 19.37   |
| 오스트리아 | 11.42   |
| 스웨덴   | 9.06    |
| 전체 유럽 | 21.0    |

출처: EUMC(2005).

<표 Ⅲ-9> 자녀와의 결혼 반대 비율

| 평가 대상 | 백분율  |
|-------|------|
| 조선족   | 75.6 |
| 중국인   | 80.6 |
| 일본인   | 71.7 |
| 동남아인  | 83.5 |
| 새터민   | 62.3 |
| 미국인   | 65.4 |
| 남아시아인 | 83.3 |
| 몽골인   | 82.0 |
| 전체    | 75.6 |

#### 다. 사회적 거리감의 다차원성

앞서 언급한대로 보가더스 척도는 하나의 차원에 정도가 다른 항목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따라서 각 항목 사이에는 일종의 위계적인 순서가 존재하고, 그 순서는 선형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가더스 척도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제가 어느 사회, 어떤 대상에게나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 관계가 등간적이거나 선형적이지 않다면, 다차원 분석을 함으로써 사회적 거리감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다차원성을 살펴보는 이러한 작업은 이후에 진행할 감성적 의미 이론 같은 논의와 관련이 깊다.

사회적 거리감의 다차원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사용하고자 한다. 대응분석은 한마디로 분할표(contingency table) 자료의 행과 열을 저차원의 공간상에 지도로 표시하여 그들의 대응관계를 탐구하려는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이다. 이 분석기법은 복잡한 자료를 간단하게 한 두 개의 축(axis) 상에 표현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선거분석, 마케팅, 의학 등 응용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Lebart et al., 1984; Benzécri, 1992; 이명진, 1997).

여기에서는 앞서 <표 III-1>에 제시된 찬성 응답자수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대응분석은 주로 범주변수(categorical variable) 혹은 이산변수(discrete variable)만을 다루고 있다. 물론 분할표분석(contingency table analysis)이나 로그선형분석(log-linear analysis) 같은 범주변수를 다루는 다른 분석기법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에 비해 대응분석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분할표 분석에서는 행과 열 범주 사이에 관계의 존재 여부만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범주간의 관계는 살펴보기 힘들다. 그 다음으로 로그선형모형에서는 범주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모형으로 다루고 있지만, 표본의 크기에 많이 좌우된다. 너무 작은 표본에서는 측정치의 신뢰도(reliability)



가 문제가 있고, 너무 큰 표본에서는 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에 문제가 있다. 그 밖의 문제로는 측정치의 해석이 힘들다라는 것을 들 수 있다 (Fox, 1984; Clogg and Eliason, 1987; Kim and Lee,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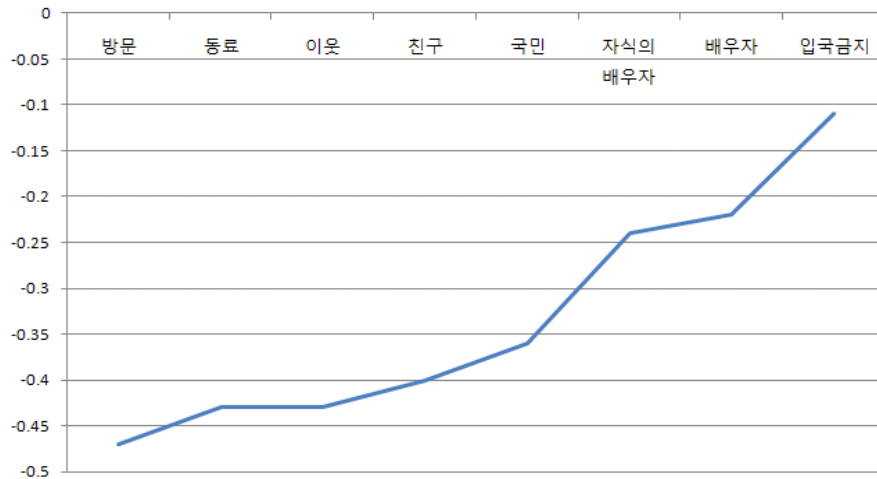
둘째, 대응분석은 기술적인(descriptive) 통계기법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감과 같이 구체적인 원인을 직접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 분석의 출발점은 복잡한 자료를 요약하고(summarize), 평이화(simplify)하는 작업이다. 사회적 거리감의 찬성여부를 조사한 자료에 기반하여 대응분석을 실시하면 앞서의 두 개의 목적 즉 자료의 요약과 평이화를 달성할 수 있다.

대응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응답자들의 반응을 요약할 수 있는 벡터값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III-3>은 각 평가 대상에 대한 찬성여부에 관한 분할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원을 추출하고 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먼저 각 항목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외국인을 평가할 때 어떤 항목을 극단적인 항목 혹은 중간 항목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보가더스 척도에서 가정하고 있는 순서로 항목이 배치되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순서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가장 왼쪽에 ‘방문’이라는 항목이 위치하고 있다. 즉 방문만을 허락하는 대상을 사회적 거리가 먼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동료, 이웃, 친구로 나타난다. 이어서 국민, 자식의 배우자, 배우자, 입국금지 항목이 배열되어 있다. 전통적인 보가더스 척도에서는 입국금지, 시민(국민), 동료, 이웃, 친구, 결혼 항목의 순서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항목이 시민(국민)과 입국금지이다. 이는 서구사회에서 시민이라는 개념과 한국사회에서 국민이라는 개념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다민족사회이고 이민이 보편화된 미국사회보다 민족이나 혈통이 중요시되는 한국사회에서 국민이 보다 내집단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입국금지는 미국사회에서 가장 거리가 먼 항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즉 입국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거리감과 차이가

있는 감정이거나 전혀 다른 차원을 대표하는 항목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3> 평가항목 찬성여부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 : 벡터값

다음으로 평가 항목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평가되는가는 <그림 III-3>에서 제시된 각 벡터값을 연결한 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보가더스 척도에서는 이러한 선이 선형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는 각 항목의 중요성이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시적인 방문과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동료, 이웃, 친구 사이에 차이가 두드러진다. 동료, 이웃, 친구 사이, 특히 동료와 이웃 사이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가 그 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동료, 이웃, 친구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사회에서 국민이 갖는 특별한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구사회의 시민보다는 훨씬 내집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국민과 자식의 배우자나 배우자 항목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이다. 사실 이러한 차이가 다른 어떤 항목 사이의 차이보다 크다. 이러한 차이 역시 결혼을 통한 친척관계 성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국민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강력한 내집단 범주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3. 감성적 의미론 : 감성, 권력, 활동

#### 1) 각 차원별 평가

<표 III-10>은 감성적 의미론에서 주된 차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세 가지 기준으로 각 대상을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각 차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자. 호감도 차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상은 미국인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상은 조선족과 새터민이다. 적어도 같은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반면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대상은 중국인이고, 그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대상은 남아시아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영향력 차원에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력이 잘 드러나 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대상은 미국인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상은 일본인이다. 반면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대상은 남아시아인과 몽골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능동성 차원에서는 영향력 차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상은 역시 미국인과 일본인이다. 반면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대상은 중국인과 남아시아인이다.

한편 각 차원별 점수의 표준편차는 각 대상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 평가의 일치도는 세 가지 차원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첫째, 호감도 차원에서 응답자들의 평가가 가장 일치하는 대상은 남아시아인이다. 반면에 일본인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평가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식민지 지배의 경험 유무와 일본 문화 개방에 따른 세대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향

력에서도 의견 일치 정도는 호감도 차원과 유사하다. 즉 남아시아인에 평가가 가장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인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능동성에서 의견 일치 정도도 앞서의 경우와 유사하다. 남아시아인에 대한 평가가 가장 일치하고, 일본인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불일치하다. 다만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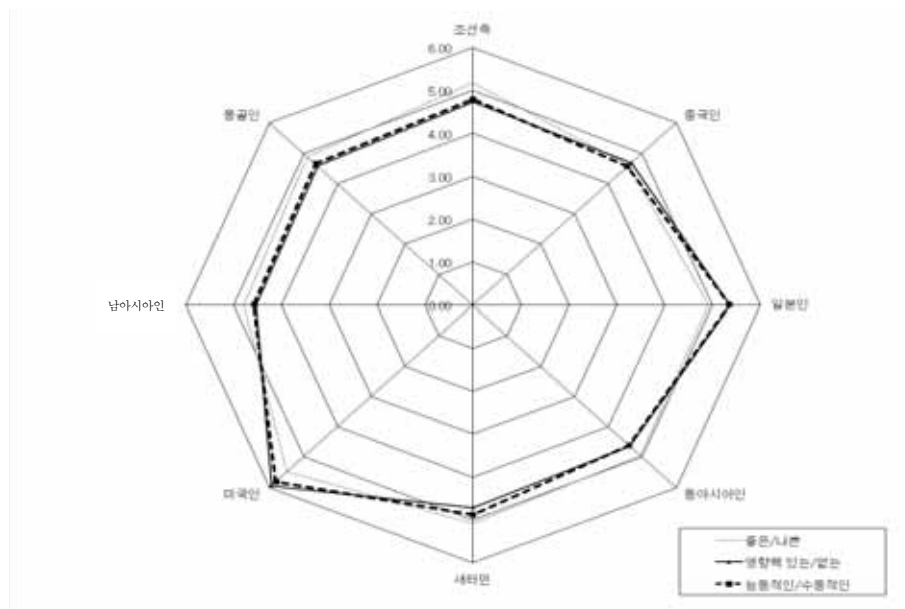
<표 III-10> EPA(Emotion Power Activity) 척도의 각 차원별 평균 및 표준편차

|       | 좋은/나쁜          | 영향력 있는/없는      | 능동적인/수동적인      |
|-------|----------------|----------------|----------------|
| 조선족   | 5.19<br>(1.52) | 4.73<br>(1.56) | 4.79<br>(1.58) |
| 중국인   | 4.60<br>(1.49) | 4.67<br>(1.58) | 4.55<br>(1.56) |
| 일본인   | 4.90<br>(1.72) | 5.37<br>(1.72) | 5.35<br>(1.65) |
| 동아시아인 | 4.95<br>(1.40) | 4.62<br>(1.45) | 4.62<br>(1.46) |
| 새터민   | 5.09<br>(1.54) | 4.71<br>(1.59) | 4.89<br>(1.55) |
| 미국인   | 5.47<br>(1.56) | 5.95<br>(1.65) | 5.82<br>(1.57) |
| 남아시아인 | 4.78<br>(1.29) | 4.53<br>(1.37) | 4.57<br>(1.35) |
| 몽골인   | 4.88<br>(1.37) | 4.59<br>(1.42) | 4.65<br>(1.41) |

주: 9점 척도로 조사했으며 ‘좋은, 영향력 있는, 능동적인’이라는 평가에 높은 점수가 부여됨.  
1점: 나쁘고, 영향력이 없고, 수동적임. 9점: 좋고, 영향력이 있고, 능동적임.

<그림 III-4>는 앞서 각 차원별 평가점수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도표이다. 먼저 모든 차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상은 미국인이다. 최근에 일련의 사건과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미 관계의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미국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모든 차원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의 경우는 의견이 다소 혼재되어 있다. 호감도에 있어서 그렇게 높지 않지만, 경제력이라는 측면

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편이다. 일본인과 반대 평가를 받는 대상은 조선족과 새터민이다. 같은 핏줄이라는 측면에서 호감도는 높은 편이지만, 그들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모든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상은 남아시아인과 몽골인이다. 해당 국가의 경제력은 물론 한국인들과의 접촉이나 문화적인 요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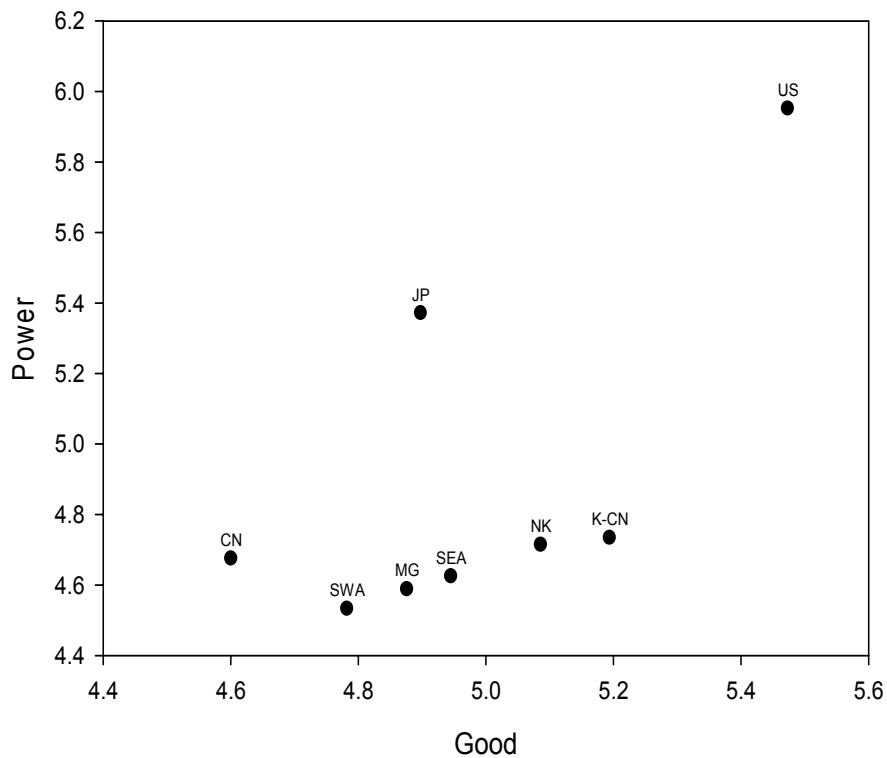


<그림 Ⅲ-4> 각 차원별 평가점수 : 평균값

## 2) 다차원 비교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각 차원을 함께 비교하면서 결과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Ⅲ-5>는 호감도와 영향력을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호감도와 영향력을 비교하면 일종의 군집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두 가지 종류의 차원이 존재하는데, 하나의 축은 호감도와 영향력 모두에서 유사한 평가를 받는 대상들이 위치해 있다. 호감도와 영향력 차원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대상이 미국인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대상이 남아시아인, 몽골인, 중국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축에는 호감도와 영향력이 일치하지 않은 대상들이 위치해 있다. 일본인의 경우는 영향력은 높은 반면에 호감도는 높지 않은 존재로 평가하고 있으며, 같은 민족인 조선족과 새터민의 호감도는 높은 편이나 영향력은 낮은 존재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족과 새터민 차이에 영향력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호감도라는 측면에서 조선족이 새터민 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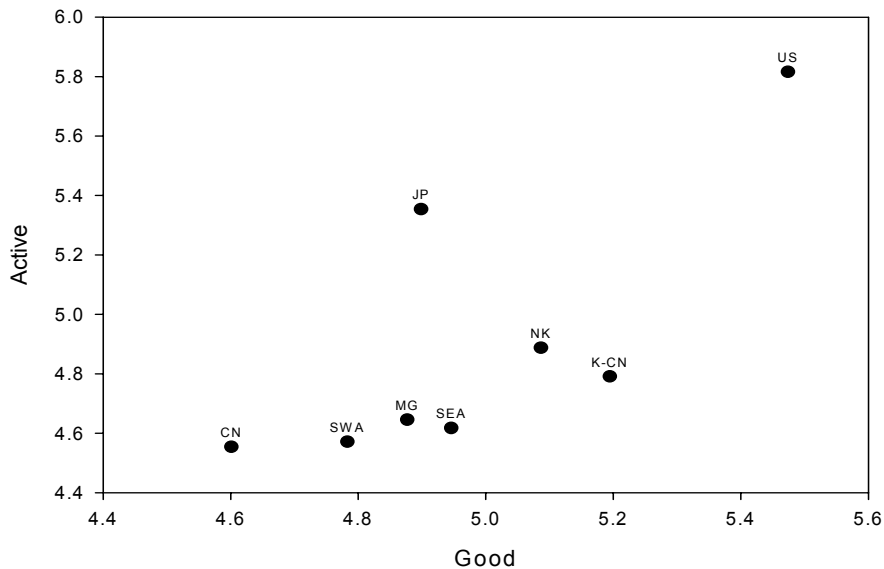


주: 조선족(K-CN); 중국인(CN); 일본인(JP); 동남아시아인(SEA); 새터민(NK); 미국인(US); 남아시아인(SWA); 몽골인(MN)

<그림 III-5> 호감도와 영향력 비교

<그림 Ⅲ-6>은 각 대상에 대한 호감도와 능동성 평가 결과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적어도 이 조사의 평가대상을 기준으로 볼 때, 호감도와 영향력을 같이 비교했을 때 비해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많은 응답자들은 능동성이 결국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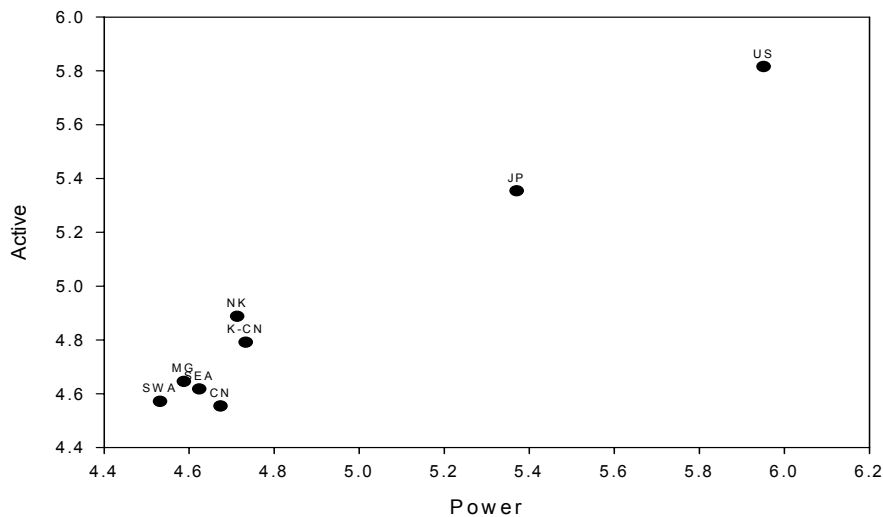
미국인이 호감도와 능동성 두 차원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중국, 남아시아인, 몽골인이 두 차원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인은 호감도는 다소 떨어지나 능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족과 새터민은 호감도는 높은 편이나 능동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호감도와 영향력이라는 측면과 달리, 새터민이 조선족에 비해 다소 능동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새터민이 한국사회와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공산체제 주민이었다라는 생각의 결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조선족의 경우는 다른 민족의 국가라고 간주되는 중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 조선족(K-CN); 중국인(CN); 일본인(JP); 동남아시아인(SEA); 새터민(NK); 미국인(US); 남아시아인(SWA); 몽골인(MN)

<그림 Ⅲ-6> 호감도와 능동성 비교

앞서 언급한대로 영향력과 능동성은 외국인을 평가할 때, 거의 유사한 차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림 III-7>에 제시된 것처럼, 해당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의 경제력이 그 외국인의 영향력과 능동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종에 영향력과 능동성 사이에는 일종의 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외는 새터민과 조선족의 경우이다. 아마도 같은 핏줄과 민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대상보다는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인의 경우는 중국사회의 변화와 경제발전에 비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주: 조선족(K-CN); 중국인(CN); 일본인(JP); 동남아시아인(SEA); 새터민(NK); 미국인(US); 남아시아인(SWA); 몽골인(MN)

<그림 III-7> 영향력과 능동성 비교

### 3) 사회경제적 배경과 각 차원별 평가

<표 III-11>과 <표 III-12>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배경 중에서 차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연령과 학력별 호감도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어떤 외국인을 평가하는가에 따라 호감도 평가



정도가 달라진다. 20대나 30대의 경우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 미국인들에 대해서도 호감도가 높거나 유사하다. 이러한 선진국 출신 외국인에 비해 남아시아인, 중국인, 몽골인 등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 20대나 30대의 호감도 평가가 낮은 편이다.

<표 Ⅲ-11> 호감도에 대한 연령별 평가

(단위: 평균 점수)

| 연령     | 조선족  | 중국인  | 일본인  | 동남<br>아시아인 | 새터민  | 미국인  | 남아시아인 | 몽골인  |
|--------|------|------|------|------------|------|------|-------|------|
| 20대    | 4.78 | 4.65 | 5.11 | 4.80       | 4.99 | 5.51 | 4.66  | 4.64 |
| 30대    | 4.72 | 4.62 | 5.12 | 5.08       | 5.21 | 5.42 | 4.90  | 4.89 |
| 40대    | 4.82 | 4.75 | 5.04 | 5.06       | 5.11 | 5.50 | 4.88  | 5.06 |
| 50대    | 4.94 | 4.31 | 4.52 | 4.81       | 4.97 | 5.44 | 4.77  | 4.86 |
| 60대 이상 | 4.81 | 4.55 | 4.20 | 4.88       | 5.11 | 5.50 | 4.60  | 4.98 |
| 계      | 4.81 | 4.60 | 4.90 | 4.94       | 5.09 | 5.47 | 4.78  | 4.88 |

주: 9점 척도로 조사했으며 호감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됨.

1점: 호감이 가장 낮음, 9점: 호감이 가장 높음.

학력의 경우 <표 Ⅲ-1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연령과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가 선진국인가 아닌가에 많은 차이가 난다. 먼저 미국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호감도 평가가 대체로 높다. 일본인에 대해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호감도가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학력과 호감도 사이에 정의 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족에 대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호감도가 낮아지기도 한다.

<표 Ⅲ-12> 호감도에 대한 학력별 평가

| 학력    | 조선족  | 중국인  | 일본인  | 동남<br>아시아인 | 새터민  | 미국인  | 남아시아인 | 몽골인  |
|-------|------|------|------|------------|------|------|-------|------|
| 중졸 이하 | 4.91 | 4.47 | 3.96 | 4.87       | 4.95 | 5.44 | 4.66  | 4.99 |
| 고졸    | 4.88 | 4.64 | 5.01 | 4.98       | 5.06 | 5.52 | 4.86  | 4.91 |
| 대졸 이상 | 4.70 | 4.60 | 5.07 | 4.92       | 5.15 | 5.44 | 4.74  | 4.81 |
| 계     | 4.80 | 4.60 | 4.90 | 4.94       | 5.08 | 5.47 | 4.78  | 4.88 |

주: 9점 척도로 조사했으며 호감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됨.

1점: 호감이 가장 낮음, 9점: 호감이 가장 높음.

영향력 차원에 대한 평가는 호감도 평가와 다소 다르다. <표 III-13>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미국인과 일본인의 경우는 호감도 평가와 유사하지만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뚜렷한 흐름을 찾기 어렵다. 미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젊은 세대의 평가가 높은 편이다. 일본인에 대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향력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 있다. 미국인에 대해서는 20대의 평가가 50대나 60대의 평가와 유사하다. 조선족과 중국인에 대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향력에 평가 낮아진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인, 새터민, 남아시아인, 몽골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

<표 III-13> 영향력에 대한 연령별 평가

| 연령     | 조선족  | 중국인  | 일본인  | 동남<br>아시아인 | 새터민  | 미국인  | 남아시아인 | 몽골인  |
|--------|------|------|------|------------|------|------|-------|------|
| 20대    | 4.72 | 4.81 | 5.71 | 4.56       | 4.60 | 6.08 | 4.49  | 4.42 |
| 30대    | 4.82 | 4.77 | 5.51 | 4.71       | 4.85 | 5.88 | 4.64  | 4.64 |
| 40대    | 4.79 | 4.71 | 5.38 | 4.74       | 4.78 | 5.86 | 4.63  | 4.77 |
| 50대    | 4.55 | 4.32 | 5.05 | 4.37       | 4.60 | 5.92 | 4.35  | 4.39 |
| 60대 이상 | 4.68 | 4.57 | 4.74 | 4.60       | 4.63 | 6.05 | 4.37  | 4.68 |
| 계      | 4.73 | 4.67 | 5.37 | 4.62       | 4.71 | 5.95 | 4.53  | 4.58 |

주: 9점 척도로 조사했으며 호감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됨.

1점: 호감이 가장 낮음, 9점: 호감이 가장 높음.

<표 III-14>는 영향력에 대해 학력별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평가를 일정한 방향으로 요약하기 힘들다. 일본인에 대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높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족, 중국인, 새터민에 대한 평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인에 대해서는 중졸 이하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고, 고졸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낮다. 반면에 동남아시아인과 몽골인에 대해서는 고졸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높다.

<표 Ⅲ-14> 영향력에 대한 학력별 평가

| 연령       | 조선족  | 중국인  | 일본인  | 동남<br>아시아인 | 새터민  | 미국인  | 남아시아인 | 몽골인  |
|----------|------|------|------|------------|------|------|-------|------|
| 중졸<br>이하 | 4.44 | 4.42 | 4.72 | 4.44       | 4.46 | 6.13 | 4.28  | 4.43 |
| 고졸       | 4.76 | 4.69 | 5.28 | 4.72       | 4.74 | 5.84 | 4.65  | 4.64 |
| 대졸<br>이상 | 4.78 | 4.72 | 5.64 | 4.56       | 4.75 | 5.99 | 4.49  | 4.57 |
| 계        | 4.73 | 4.67 | 5.36 | 4.61       | 4.71 | 5.95 | 4.53  | 4.58 |

주: 9점 척도로 조사했으며 호감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됨.

1점: 호감이 가장 낮음, 9점: 호감이 가장 높음.

#### 4. 소결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감과 감성적 의미이론이라는 이론적 자원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전체적인 평균치를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가깝게 여기는 대상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새터민, 조선족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상은 남아시아인과 몽골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작다. 편견이라는 측면도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고학력, 고소득자들에게 있어서 평가대상인 외국인들은 특별히 경쟁관계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일종의 관대함이 작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셋째,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하여 일종의 비선형적인 관계가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시점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일시적인 방문과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동료, 이웃, 친구 사이에 차이가 두드러진다. 동료, 이웃, 친구 사이, 특히 동료와 이웃 사이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

자의 이주가 그 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동료, 이웃, 친구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이다. 이 차이는 앞서의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사회에서 국민이 갖는 특별한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구사회의 시민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이 훨씬 내집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넷째, 감성적 의미론을 기반으로 볼 때, 호감도 차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상은 미국인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상은 조선족과 새터민이다. 적어도 같은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반면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대상은 중국인이고, 그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대상은 남아시아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는 영향력이나 능동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일본인의 경우는 영향력이나 능동성에 비해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리감은 다소 추상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외국인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단일민족’에 따른 배타성이 적어도 일반적인 방문이나 동료 혹은 친구 정도의 관계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현실적인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 ‘혈연’ 혹은 ‘가족’이라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는 이러한 관대함이 급속도로 약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국가나 국민 같은 공적 영역이 가족과 같은 사적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논의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양현아, 2007).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단일한 차원에서 선형적인 거리감이라기 보다는 다차원적이고 비선형적인 거리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는데 있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관대함이나 배타성의 맥락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글로벌화 경향을 고려한다면 연령이 낮거

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방화 정도가 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인과 일본인 같은 선진국 출신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만,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향을 찾아보기 힘들다. 앞으로 외국인 이주자 정책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 IV

# 한국인의 국민 정체성과 다문화 시티즌십(citizenship)

|                     |     |
|---------------------|-----|
| 1. 배경 : 시티즌십의 개념    | 89  |
| 2. 분석 : 한국인의 국민 정체성 | 93  |
| 3. 이주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 104 |
| 4. 소결               | 108 |

## 1. 배경 : 시티즌십의 개념

미국과 유럽에서 시티즌십에 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다. 이러한 시티즌십 연구의 폭발적 증가의 배경에는 두 가지 현실의 문제가 놓여 있었다. 먼저, 동서 냉전이 해소된 이후 지구화와 국제 이민의 증가로 국민-국가(nation-state)의 문화적 다양성이 전례 없이 확대되었고, 유럽공동체의 예에서 보듯이 단일한 민족문화의 보호자라는 국민-국가의 전형을 훌쩍 뛰어넘는 정치적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또 다른 현실적 문제는 수십 년 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해 왔던 몇몇 나라에서 민족적-문화적 충돌이 폭발하면서 일부에서는 ‘인종청소’와 같은 극단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은 정치적 공동체 내에 문화적 다양성과 갈등을 수용할 수 있는 이념 및 제도와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학자들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시티즌십의 역사적 경험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작업은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로서 시티즌십이 가진 잠재력을 보여준 마샬(T. H. Marshall 1964)의 연구였다. 하지만 마샬의 연구가 계급 사이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로서 시티즌십이 갖는 의미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킴리카와 노먼 등은 문화적 집단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다문화 시티즌십의 이념, 제도, 가치 등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Kymlicka 1995, 2004; Kymlicka and Norman 1995).

시티즌십을 둘러싼 서구의 문제의식은 최근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에 접근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몰락, 지구화와 맞물린 이주의 증대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와 구 사회주의 국가의 국적을 가진 해외 동포들이 대거 한국 사회로 밀려들어 왔으며 이제 한국에도 다양한 종족 집단(ethnic group)의 거주지역이 생겨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결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혈통적-문화적 단일성의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또한 아직 충분히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현실로 나타날 경우 그 규모에 있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큰 충격을 가져다 줄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유입에 대비해야 한다. 흔히 통일

문제는 단순히 민족의 재결합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는 다른 가치와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시티즌십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이제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지닌 국가로 성장하였다. 특히 1987년 이후 한국으로 유입하는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1987년 2백만에 불과했던 외국인 입국자는 2000년 5백만에 육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와 조선족 등 불법 체류 동포의 수도 1987년의 6,409명에서 1992년에는 73,868명, 1997년에는 266,301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국내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더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인이나 이주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1990년대 중국 경제의 발전,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 의한 무역 장벽의 철폐, 급속한 세계화 등의 환경변화로 한국 경제의 구조 조정과 첨단기술 산업 진흥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외국 자본 및 고급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향후 저임 노동력 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의 질이 높은 외국인 인력들이 한국의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의 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종적 단일성 내지 동질성을 전제로 형성되어온 한국인의 정체성과 국적 제도, 시티즌십 제도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실과 더욱 괴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 시티즌십 원리와 제도, 다문화 사회의 시민적 덕목(virtue)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의미에서 세계화에 대비하여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와 냉전의 해체,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는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한 통일이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북한의 노동력이 남한 노동 시장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



들이 ‘2등 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것이 기우가 아님은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주민들의 실업 문제와 동서독 격차 해소의 어려움, 그리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나 새터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볼 때 잘 드러난다. 같은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는 동포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조선족 들은 남한 사회에서 2등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새터민들은 비록 대한민국 시민권을 획득했지만, 자본주의의 경험이 거의 없고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년 이상을 전혀 다른 사회체제 하에서 살아온 북한 동포들에게 남한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남북한의 문화적·혈연적 연결성을 근거로 통일 국가의 장래를 낙관하는 것은 어리석은 낙관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시티즌십 개념을 확장하고 또 소수자들을 우대하는 제도와 시민의식을 발전시켜온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 한국,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에 부합하는 시티즌십 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

시티즌십의 다의성으로 인해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티즌십의 개념을 우선 정의할 필요가 있다. 시티즌십의 주요 연구자인 킴리카와 노만(Kymlicka and Norman 1995: 284)에 따르면, 시티즌십은 ‘법적 지위로서의 시티즌십(citizenship-as-legal-status)’과 ‘바람직한 시민의 덕성 및 활동으로서의 시티즌십(citizenship-as-desirable-activity)’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흔히 시티즌십을 ‘시민권’ 또는 ‘시민성’으로 번역해서 맥락에 따라 사용하고 있지만, 위의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시민권’이라는 말은 법적 지위로서의 시티즌십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의 덕성으로서의 시티즌십’은 고사하고 ‘법적 지위로서의 시티즌십’이라는 의미조차 완전히 담아내지 못 한다. 왜냐하면 법적 지위로서의 시티즌십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그리고 ‘시민의 소속인 국적’이라는 의미를 포괄하는데, ‘시민권’은 좁은 의미의 형식적 권리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시민성’이라는 용어 역시 시티즌십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한 의미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므로 적절한 번역어라고 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시티즌십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시민권이나 시민성 대신 ‘시티즌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리하면 이 연구에서의 시티즌십은 ‘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시민의 덕성’으로 정의되며, 다음의 여러 측면을 갖고 있다.

가) 법적 지위로서의 시티즌십:

- ① 국적,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소속,
- ② 시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
- ③ 사회적 약자인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 그리고

나) 바람직한 시민의 덕목과 활동으로서의 시티즌십:

- ④ 시민의식과 시민으로서의 덕성,
- ⑤ 시민의 활동(최현 2006; Klusmeyer 2001; Turner 1993)

시티즌십이 포괄하는 이러한 영역들은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지위로서의 시티즌십은 외적으로는 소속(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나타나며, 내적으로는 그러한 소속에 따른 권리와 의무로 규정된다. 그리고 시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은 사회적 약자인 시민(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이주자 등)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기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로서의 시티즌십과 바람직한 시민의 활동으로서의 시티즌십 역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곧 시민의 소속과 권리 및 의무는 시민에게 교육 기회, 복지 혜택,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식을 규정하며, 시민의식과 그에 따른 시민참여는 역으로 시민의 지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다. 이처럼 시티즌십의 각 영역은 서로 의존하고 동시에 규정하면서 밀접한 연관을 가지

고 있다. 그리고 시민과 시민의 관계,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다루는 시티즌십은 근대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의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스미스 1994; 터너 1997; 피어슨 1998).

이 장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시티즌십의 수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의 국민 정체성, 외국인의 귀화에 대한 태도와 이주자에 대한 우대 제도인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태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분석 : 한국인의 국민 정체성

### 1) 혈통-문화적 정체성과 정치-법적 정체성

국민 정체성(national identity)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혈통적-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ethnic nation’의 요소와 정치적-법적 측면을 강조하는 ‘civic nation’의 요소가 국민정체성 안에 함께 혼재하며, ‘civic nation’의 요소가 정체성의 주요소가 되는 국민국가는 다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다(Brubaker 1992; Smith 2000). 혈통적-문화적 특성은 귀속적(attributive) 특징이므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반면, 정치적-법적 특성은 획득적인(acquisitive) 것이므로 변화가 비교적 용이하다. 따라서 정치적-법적 요소를 국민의 요건으로 생각하는 경우 타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민 정체성과 다문화-다인종주의에 대한 개방성의 상관관계는 경험적으로도 프랑스의 개방성과 독일의 폐쇄성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국민 정체성이 혈통적-문화적 측면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정치적-법적 측면을 중시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할 요건”으로 혈통적-문화적 요인(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등)과 정치적-법적 요인(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한국국적을 갖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등)을 나누어 질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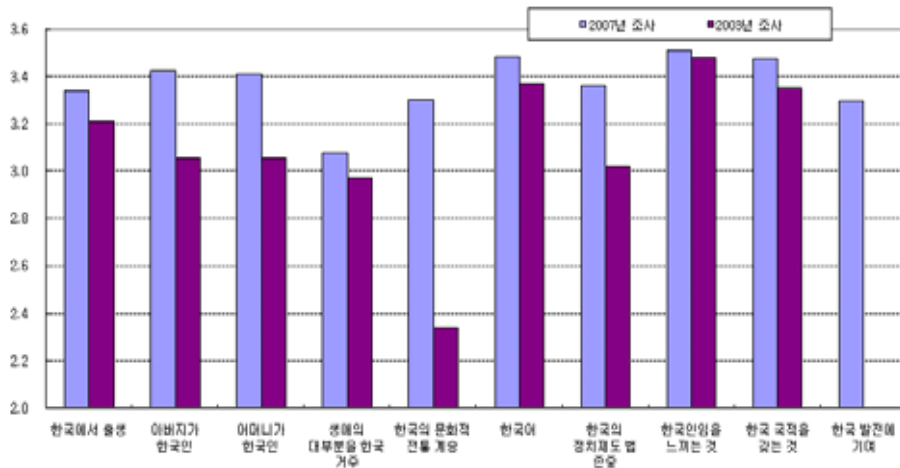
조사 결과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은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었으며, 이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편차도 가장 낮아서 응답자들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 참조). 이는 한국인들이 국민정체성에서 정치적-법적 요인을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혈통적-문화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 즉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은 단일민족과 동질적 혈통을 중시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이번 조사 결과는 정치적 법적 요인이 국민정체성의 요인으로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사한 항목으로 2003년에 실시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IV-1>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평균 및 표준편차

|    |                | 평균   | 표준편차 |
|----|----------------|------|------|
| 1  | 한국에서 출생        | 3.34 | 0.71 |
| 2  | 아버지가 한국인       | 3.43 | 0.67 |
| 3  | 어머니가 한국인       | 3.41 | 0.68 |
| 4  |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 거주 | 3.07 | 0.81 |
| 5  | 한국의 문화적 전통 계승  | 3.30 | 0.68 |
| 6  | 한국어 능력         | 3.48 | 0.63 |
| 7  | 한국의 정치제도 법 존중  | 3.36 | 0.70 |
| 8  |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 3.51 | 0.62 |
| 9  | 한국 국적을 갖는 것    | 3.47 | 0.64 |
| 10 | 한국 발전에 기여      | 3.30 | 0.71 |

주: 4점 척도로 조사 :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4점(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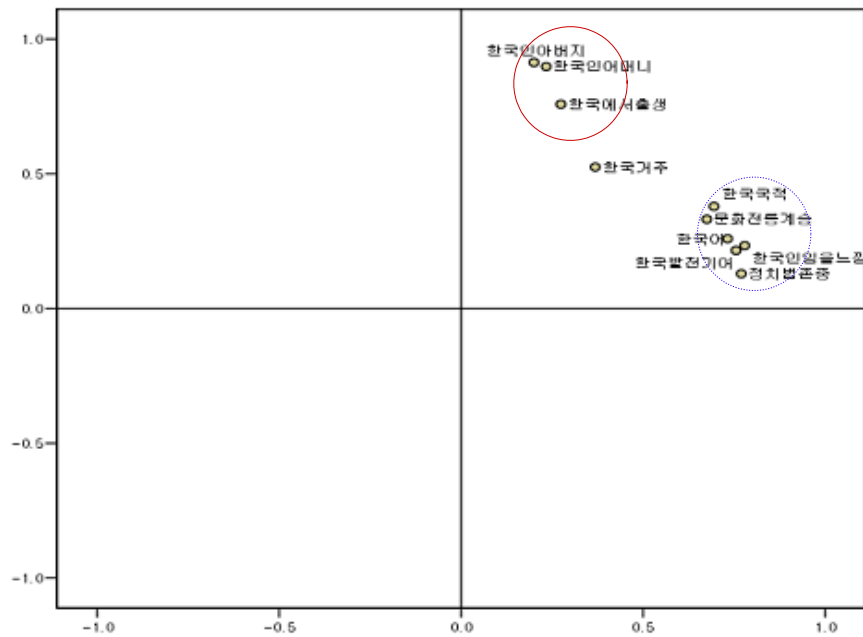
<그림 IV-1> 한국인의 요건 항목에 대한 2003년과 2007년 조사 비교

위의 그림은 2003년<sup>33)</sup>과 2007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항목에 대한 응답에 약간의 차이<sup>34)</sup>는 있지만, 한국인의 요건으로 가장 중요시 하는 항

33) 2003년 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이다. 2007년 조사는 비교를 위해 거의 같은 질문을 사용했지만, 2003년 조사 설문항목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달라진 내용은 다음 두 항목이다 : ① ‘조상이 한국인인 것’(03)→‘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07), ② ‘유교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03) →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07).

34) 2003년과 2007년 결과를 통해 추세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정체성의 변화를 추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2번의 조사만으로 추세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조사항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사 항목을 바꾼 것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유교의 가르침을 따름” 대신에 “한국의 문화적 전통 계승”이라는 항목을 사용한 결과 중요도 평가가 매우 높아졌다. 또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항목을 2007년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한국인” 또는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항목으로 바꿨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치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혈통과 전통문화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2003년과 2007년 조사에서 크게 차이 나는 것을 정체성 변화의 결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고 이 시기에 짧은 기간을 뛰어넘을 만한 사회적 격변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2003년보다 2007년에 국민의 요건으로 혈통이나 문화적 전통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조사항목의 조정이 방법적으로 옳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히려 조금이나마 추세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목들은 정치적-법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항목들이다. 같은 항목들을 사용했는데도 2007년에 2003년에 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으며 차이도 크지 않아 오히려 신뢰할 수 있다.

목으로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 혈통적 요인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는 동일한 추세가 확인된다. 즉, 한국인들은 혈통적-문화적 요인보다는 정치적-법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V-2>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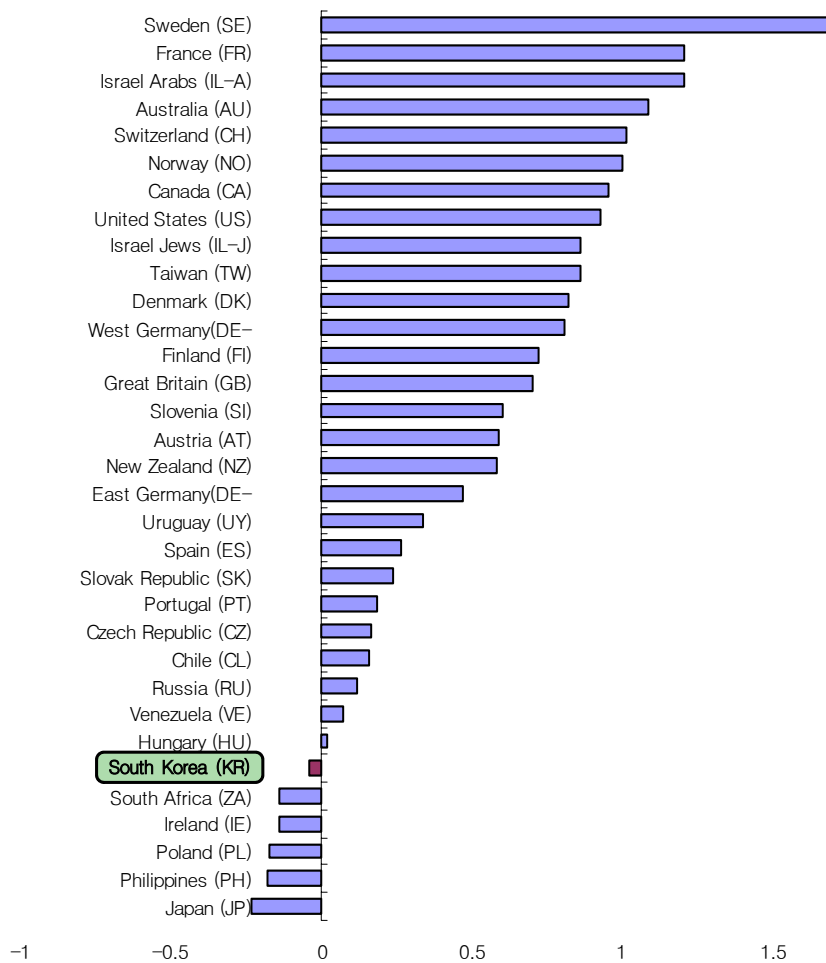
이러한 정체성의 유형화가 나름대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그림 IV-2>에 나타나듯이 2007년 조사결과의 요인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요인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성에 대한 답변이 의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혈통적-지역적 요건을 포함한 그룹(<표 IV-1>의 1, 2, 3)과 정치적-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5, 6, 7, 8, 9, 10)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 항목(4)은 잔여적 요건으로 판별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혈통적-문화적 요인과 정치적-법적 요인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혈통과 출생지 등 귀속적 특징과 언어, 한국인이라는 의식, 법과 정치제도의 존중, 사회적 기여 등 획득적 특징으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개념적으로 더 적

합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요인으로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중국 문화주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폐쇄적인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상당히 개방적일 수 있다(Brugger and Reglar 1994). 왜냐하면 문화는 귀속적이면서도 동시에 획득적이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는 한국인들이 혈통적 정체성을 중시하지만 언어를 통한 교류, 정치적인 유대나 소속감을 그 이상으로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식적으로 한국인이 혈통주의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장태한(2001), 설동훈·정태석(2002)과 정기선(2004)의 연구가 주목할 만한데, 장태한은 한국 대학생의 인종·민족 선호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이 다의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설동훈·정태석은 북한과 북한 동포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세대별로 비교해서 한국인의 혈통적 민족 정체성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기선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국민 정체성을 혈통주의로 단순화하는 것에 대한 실증적 문제제기가 담겨 있다. 본 연구 결과도 이러한 연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국민정체성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인의 인식이 갖는 특징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국제적 조사모듈인 ISSP의 1995년 조사결과를 활용해서 혈통중심 요건의 대표적 항목인 ‘조상이 ○○국인’과 정치적 요건의 대표적 항목인 ‘○○국의 정치제도 존중’의 평가점수 평균의 차이를 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 일본인, 필리핀인, 폴란드인, 아일랜드인, 남아프리카인 등이 혈통주의적 국민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스웨덴인, 프랑스인, 아랍계 이스라엘인, 호주인, 스위스인, 미국인 등이 압도적으로 공화주의적 국민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각 국가별 ‘국민 형성(nation-building)’의 역사 및 방법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국가나 복수의 민족이 형성한 국가들이 대체로 공화주의적인 국민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식민지 상태에서 혈통중심으로 국민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들은 혈통주의적 국민정체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

면 일본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공화주의적 국민정체성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국민의 민족구성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는 혈통주의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의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출처: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1995.  
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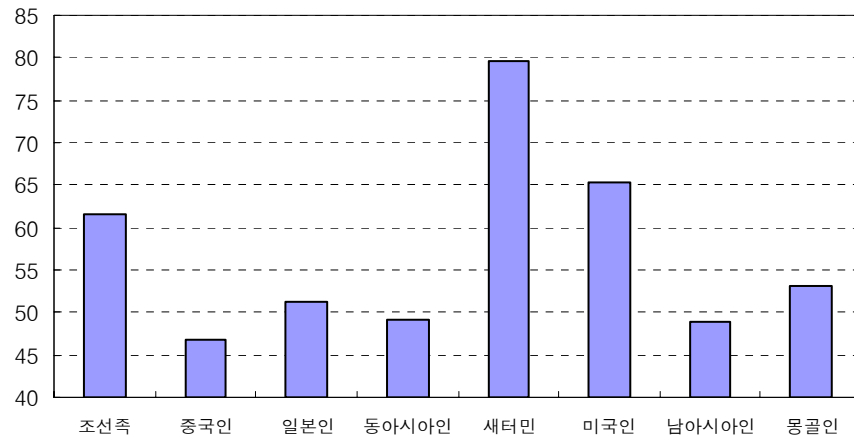
<그림 IV-3> 국가별 국민정체성의 공화주의/혈통주의 경향 비교



## 2) 외국인 귀화에 대한 태도

<그림 IV-4>는 외국인들을 출신지역과 나라에 따라 구분해서 한국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 찬성한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의 조건으로 혈통적인 특징을 중시한다는 상식이 충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동포인 조선족에 대해서보다 인종적-문화적-언어적으로 완전히 다른 미국인의 귀화를 인정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실 법률적으로도 우리 국민인 새터민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인과 인종적으로 비슷한 중국인이나 몽골인, 일본인 등 다른 모든 집단보다 미국인들을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종에 대한 거리감이나 태도, 그리고 인종주의가 피부색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는 기존의 인종주의에 대한 고전적 이론(Christie 1998)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중반까지도 이태리인이나 아일랜드인은 피부색과 관계없이 백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중국인의 귀화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의 개방성이 크기는 하지만, 예상 밖으로 귀화 찬성 응답자 비율이 전체적으로 다른 모든 외국인 집단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최근 급속한 성장세로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인식과 개별적인 중국인에 대한 인식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유럽에서 다문화주의나 개방성에 관한 조사 연구(EUMC 2005) 결과는 실제적인 접촉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개방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것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인들의 중국인들에 대한 폐쇄적 태도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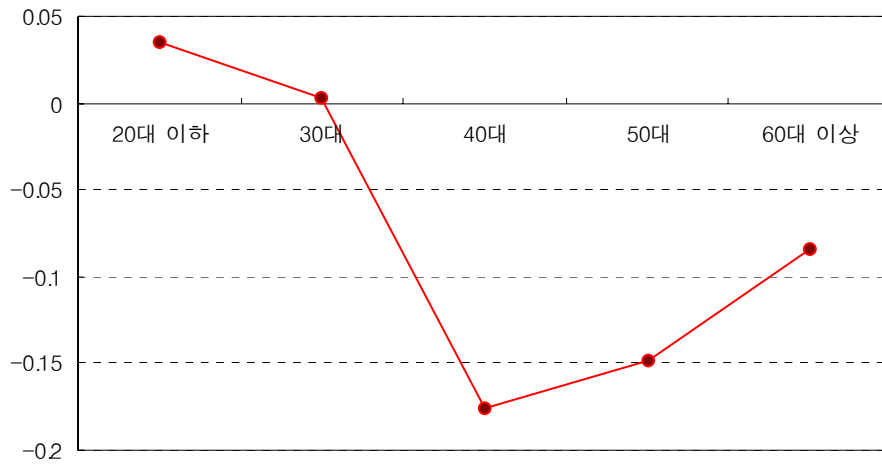
<그림 IV-4> 외국인의 출신지역에 따른 귀화인정 찬성비율 (단위: %)

### 3) 세대간 인식차이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혈통중심 요건의 대표적 항목인 ‘아버지가 한국인’과 정치적 요건의 대표적 항목인 ‘한국의 정치제도 법 존중’에 대한 평가점수의 차이를 연령별로 비교해 보았다(<그림 IV-5> 참조). 이에 따르면 30대와 40대를 경계로 극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40대 이후의 사람들은 혈통을 더 중시하는데 반해 30대 이하의 사람들은 정치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수준을 통제했을 때도 연령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표 IV-2> 한국인의 요건 중 정치제도·법 존중과 부계혈통 평균 비교

| 연령     | 한국 정치제도 법 존중 | 아버지가 한국인 | 평균 차이 |
|--------|--------------|----------|-------|
| 20대    | 3.28         | 3.24     | 0.04  |
| 30대    | 3.35         | 3.35     | 0.00  |
| 40대    | 3.31         | 3.49     | -0.18 |
| 50대    | 3.44         | 3.59     | -0.15 |
| 60대 이상 | 3.54         | 3.63     | -0.08 |



<그림 IV-5> 연령별 정치제도-법 존중과 부패행태 평균 차이

최현(2006)의 한국 시민의식에 대한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들의 자유주의적 성향과 개방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연구는 젊은 세대의 국민 정체성에도 자유주의적 합리성과 개방성이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적 합리성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에 기여한 만큼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종적-혈통적 국민 정체성을 점차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논리적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령 화교도 혈통은 다르지만 한국 사회에 기여한다면 한국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적 또는 혈통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이 한국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합리주의는 개방주의나 문화적 다원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젊은 세대에서 혈통을 중시하는 태도가 약화되고 자유주의적 합리주의 태도가 강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극단적 집단에 대한 관용성 항목과 교차시켜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종교적 극단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힘으로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집단 등 극

단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공개 집회를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항목은 특정 집단에 대한 태도 그 자체를 측정하는 것 보다는 일반적인 시민적 관용성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신과 의견이 다른 극단적인 집단이라 하여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었고, 따라서 특정 집단의 주장의 내용에 상관없이 원칙적인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을 관용적·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태도로 해석하고자 하였다.<sup>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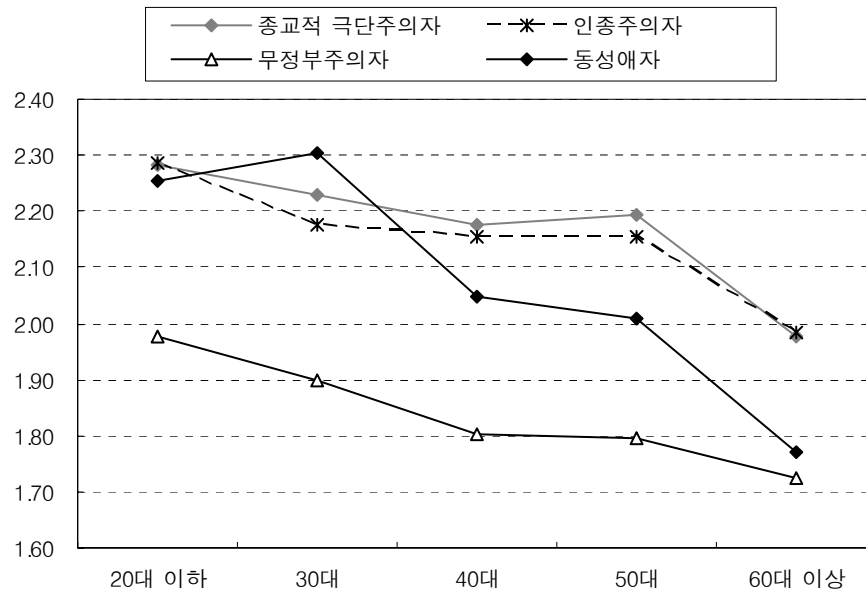
분석 결과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관용성에 있어서도 30대 이전의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표 IV-3> 참조). 그리고 극단주의 집단에의 개방성에 관한 4개의 응답과, 국민정체성에서 정치제도와 법의 존중을 중시하는 응답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크지는 않지만 유의수준 0.01 또는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연령별 극단주의자에 대한 개방성 점수\*

|        | 종교적 극단주의자 | 인종주의자 | 무정부주의자 | 동성애자 |
|--------|-----------|-------|--------|------|
| 20대    | 2.28      | 2.29  | 1.98   | 2.26 |
| 30대    | 2.23      | 2.17  | 1.90   | 2.30 |
| 40대    | 2.18      | 2.16  | 1.80   | 2.05 |
| 50대    | 2.19      | 2.15  | 1.80   | 2.01 |
| 60대 이상 | 1.98      | 1.98  | 1.73   | 1.77 |
| 합계     | 2.20      | 2.17  | 1.86   | 2.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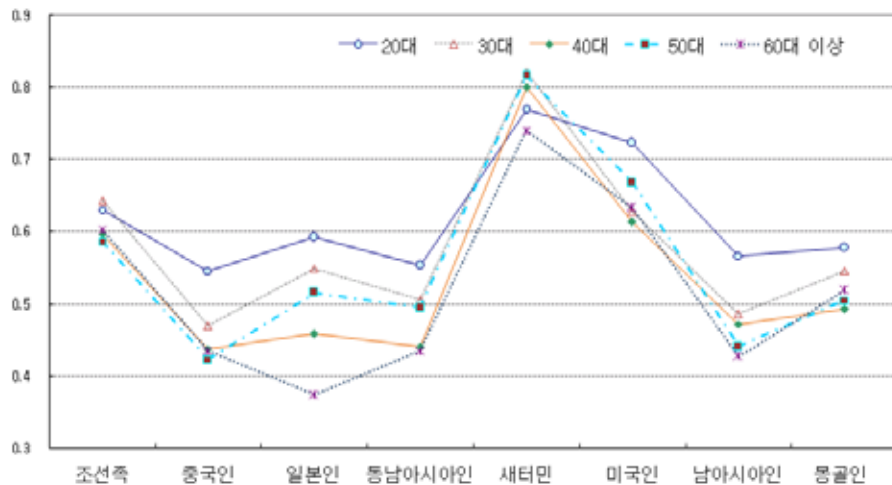
주: '다음과 같은 형태의 공개집회에 찬성하십니까?'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를 5점 척도로 측정.(1점 '당연히 허용하면 안된다'~5점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

35) 극단적 집단의 시위 허용 여부에 대한 태도는 ISSP의 시티즌십 모듈(한국의 경우 KGSS 2004년도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이다. 최현(2005)의 연구 역시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이해'하는 시민적 덕목으로 해석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한국인이 더 관용적·개방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림 IV-6> 연령별 극단주의자에 대한 개방성 점수 비교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자유주의적 합리주의와 개방적 관용성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사용되었던 이와 연관된 다른 질문에 대한 응답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조선족, 일본인, 동남아인, 미국인, 남아시아인, 몽골인 등 외국인들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응답을 보면, 새터민과 조선족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에 대해 20대의 찬성응답률이 가장 높다(<그림 IV-7> 참조). 같은 민족인 새터민이나 조선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찬성하는 응답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이 의견이 수렴되는 반면, 그 외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서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젊은 세대들이 외국인의 귀화에 더 수용적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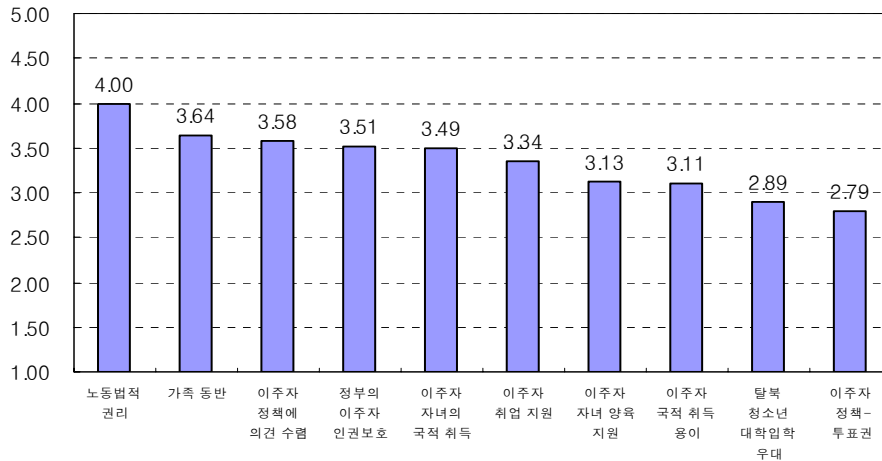
주: 척도 1점-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찬성, 0점-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데 반대  
해당 점수는 각 민족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데 찬성하는 비율을 의미함.

<그림 IV-7> 외국인을 한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연령별 응답

### 3. 이주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이 절에서는 문화적 소수자들 또는 외국인들의 권리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분석 결과 외국인들의 ‘노동법적 권리’ 보호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78% 가량의 압도적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보다는 낮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 이주자 정책 마련 과정에서 외국인 이주자의 의견 수렴, 이주자 인권보호 등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민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한 의견도 평균 3.5점(5점 척도)로 상당히 높았다. 부모의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과반수가 넘는 54.9%의 사람들이 찬성의

견을 표시했다. 이주자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15.7%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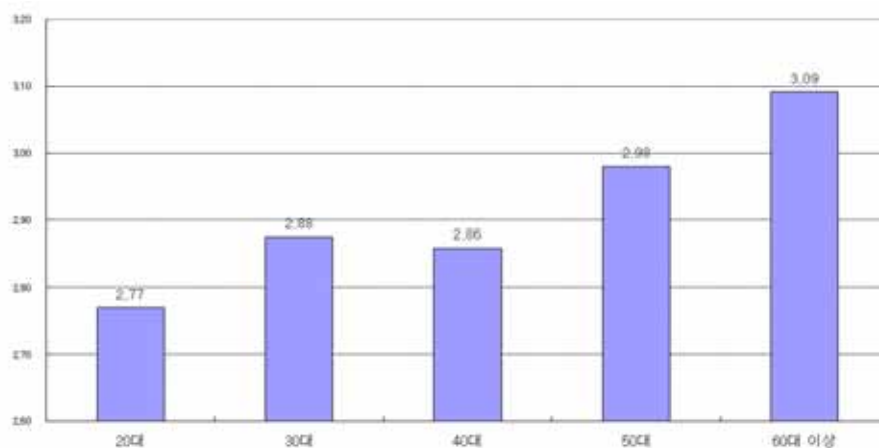


<그림 IV-8> 외국인의 권리 인정 또는 지원 필요성에 관한 평균 점수

그러나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아직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 문제가 거의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탈북 청소년에게 대학입학 시 우대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었는데, 평균 점수(2.89)가 중립적 입장인 3점보다 낮아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것은 적극적 조치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적극적 조치를 수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적극적 조치는 여러 차례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여성을 위해 처음으로 몇 가지 적극적 조치가 도입되었는데 이에 대해 반대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그 도입과 적용 사례도 매우 적다.

한국에서 수행된 적극적 조치에 대한 드문 연구 가운데 하나인 윤인진과 김상학의 연구는 한국에서 문화적 소수자들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여론과 시민의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윤인진·김상학 2003). 곧 장애인의 취업, 대학입학,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70~90%에 이르는 사람들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데 찬성했지만, 새터민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경우 취업에 관한 적극적 조치에 54.1%가 찬성했을 뿐, 대학입학과 장학금에 대한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각각 60% 가량의 사람들이 반대했다. 한국 시민의식 조사의 결과들은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자유주의적 합리주의나 다원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최현 2006)를 해왔으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민의식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우선 적극적 조치에 대한 논의나 사회적 경험의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며, 또한 아직까지 적극적 조치가 경쟁논리나 업적주의 등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와 상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20~30대 젊은 연령층이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나이든 세대들에 비해 더욱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20~30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새터민에 대한 적극적 조치에 대해 반대한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반대 비율보다 높았다(<그림 IV-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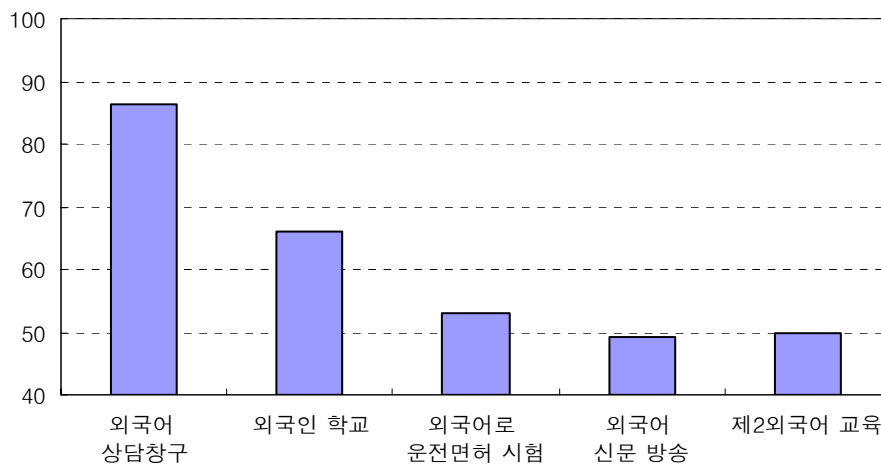


주: 5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북한 청소년 대학입학 우대조치에 찬성하는 것을 의미함.

<그림 IV-9> 연령별 북한 청소년 대학입학 우대조치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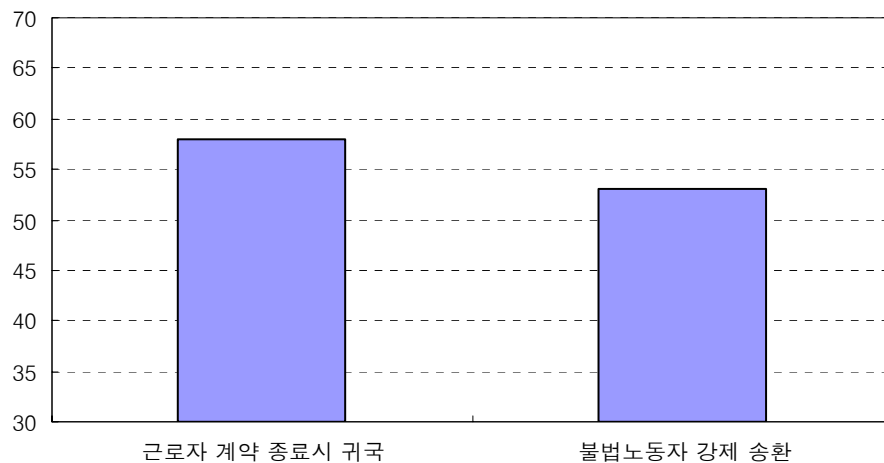
적극적 조치에 반대한다고 해서 다원주의적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림 IV-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찬성의견은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관공서에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외국어 창구를 만드는 것에는 거의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찬성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66% 정도가 찬성했다. 가장 찬성자의 비율이 낮은 외국어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지원에도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찬성했다.



<그림 IV-10> 외국인 이주자 국내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찬성 비율 (단위: %)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임시 체류자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표 IV-11>을 보면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본국으로 즉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시티즌십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복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고 배려를 해야 하지

만, 그들이 한국에 장기 거주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이주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숙지주의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림 IV-11> 계약 종료 외국인 노동자들 귀국과 불법 외국인 노동자 본국 송환에 찬성하는 비율 (단위: %)

#### 4. 소결

이 장에서는 한국인들이 다문화 시터즌십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국민정체성에 대한 태도, 외국인 귀화에 대한 태도, 외국인 이주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새터민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해보았다. 상식적인 판단과는 달리 한국인들 스스로가 규정하고 있는 한국인의 기준은 전적으로 혈통이나 민족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실용적인 근거에 의해 한국인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인 스스로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합의되어 있지 않다. 한편에서는 숙지주의에 의한 국적취득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

할 정도로 개방적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한 과반수 이상의 한국인들이 계약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를 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주자 지원정책에 전반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문화적 소수자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상당히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국제결혼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혈통중심의 국민정체성이 아닌 공화주의적-정치적 국민정체성이 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어떤 면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시민의 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킴리카(Kymlicka 2004)가 지적하고 있듯이 다문화 시민(intercultural citizen)의 이상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 등 강대국 문화를 수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으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문화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구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와 함께 이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와 같은 다양한 다문화 국가(multicultural state)의 정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다문화 시티즌십은 이처럼 시민과 국가의 종합적 변화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V

## 문화 다양성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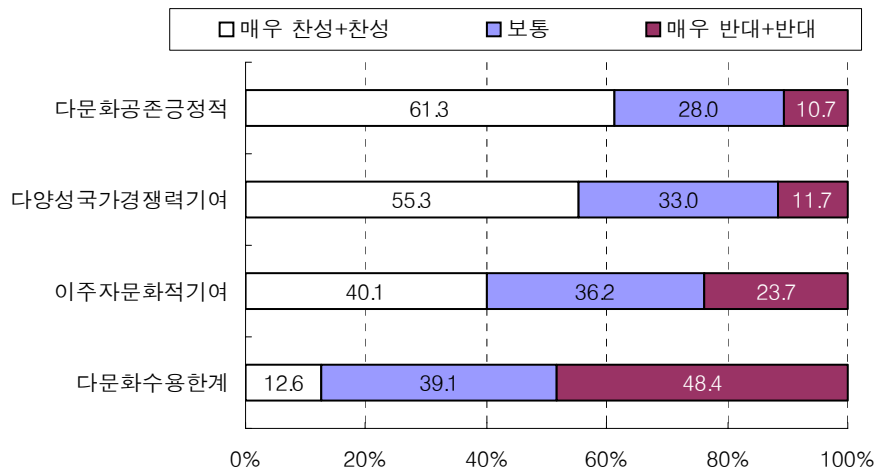
|   |     |
|---|-----|
| 1.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 113 |
| 2. 다문화지향성에 따른 집단 비교 :<br>개방적·제한적·부정적 지향 집단                          | 117 |
| 3. 외국 및 외국문화에 대한 태도   | 125 |
| 4. 외국에 대한 관심 구조를 통해 본<br>한국인의 상호문화지향성 : 로컬<br>상호문화지향 vs. 글로벌 상호문화지향 | 134 |
| 5. 소결   | 138 |

세계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어 일상생활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으며, 문화교류 및 관광의 확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 대중문화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많은 한국인들은 이제 문화의 세계화를 체감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의 세계화 안에는 대자본이 만들어낸 문화상품이 세계시장을 석권함으로써 나타나는 문화의 획일화 현상과, 국가간 지역간 문화교류가 증대함으로써 문화의 혼종화·다양화가 확산되는 서로 다른 흐름이 공존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다양성’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으나, 한국인들이 문화 다양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장에서는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외국과의 문화 교류에 대한 태도, 한국과 교류가 빈번한 여러 국가·지역에 대한 관심도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민족적·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둘러싼 한국인의 가치 지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찬성 61.3%), ‘우리나라의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찬성 55.3%)는 문항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총론적인 수준에서 다문화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와는 달리,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 문화가 더 풍부해진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부정적 태도는 23.7%로 늘어난다. 이처럼 일반적인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정하는데 비해 이주민들의 구체적인 기여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시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종교·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하는 응답(48.4%)이 많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없다는 태도는 12.6%로 크게 낮아졌다.



주: '다문화 수용 한계'의 경우 '찬성'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의견(한계가 없다), '반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의견(한계가 있다)을 의미함.

<그림 V-1>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한국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를 종합해 볼 때, 일반적 차원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이주자가 한국사회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훨씬 약화되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가 긍정적 태도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질문의 방식이나 문항의 내용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문항별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8.0%에서 39.1%에 이르고 있어 상당수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형성하지 않은 채 유보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비교해보면 한국인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2003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EU회원국가에서는 평균 25%<sup>36)</sup>,

회원후보국의 경우에는 평균 28%의 시민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해 저항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최소 7.1%(북아일랜드)~최대 59%(그리스)의 시민들이 저항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UMC 2005: 11-12). 이에 비해 이번 국민의식 조사 결과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공존이 바람직하다’에 대해서는 10.7%, ‘인종·종교·문화적 다양성이 국가경쟁력에 기여한다’에 대해서는 11.7%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해 유럽국가에 비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 태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회의적인 태도가 확산되는 경향이다. 유로바로미터 2003년도 조사 결과에서도 최근 유럽 각국에서 다문화 수용능력의 한계 내지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계 의식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EU 회원국에서는 평균 60%의 시민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회원후보국에서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42%의 시민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면<sup>37)</sup>, 본 조사결과(48.4%)는 유럽 회원국보다는 낮지만 후보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를 연령, 학력 등 집단의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지가 높고 이주자의 문화적 기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비해, 50대와 60대 응답자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이 다문화사회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고졸학력자, 중졸 이하 응답자의 순으로 긍정적 태도가 감소하고 있다. 유럽의 조사결과를 보면 연령이 높은 집단에 비해 젊은 연령층이, 저학력층 보다는 고학력층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저항과 다문화사회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즉 다문화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

36) Eurobarometer에서는 11점 척도(0에서 10)를 사용하여 ‘5 이하’와 ‘6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7) Eurobarometer에서는 수용능력의 한계 이외에 한계 도달 여부를 함께 질문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UMC, 2005). 한국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연령이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다문화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단, 유럽과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 수용능력의 한계 내지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계 인식에 있어서는 연령집단이나 교육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전반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고학력 집단들이 다문화 수용능력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표 V-1> 참조).

<표 V-1> 연령대별·교육수준별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비교

|    |       | 다문화 공존<br>긍정적         | 다양성<br>국가경쟁력기여        | 이주자<br>문화적 기여        | 다문화<br>수용 한계 |
|----|-------|-----------------------|-----------------------|----------------------|--------------|
| 연령 | 20대   | 3.69                  | 3.59                  | 3.32                 | 2.61         |
|    | 30대   | 3.61                  | 3.54                  | 3.15                 | 2.64         |
|    | 40대   | 3.68                  | 3.61                  | 3.27                 | 2.6          |
|    | 50대   | 3.54                  | 3.52                  | 3.13                 | 2.56         |
|    | 60대이상 | 3.49                  | 3.37                  | 3.01                 | 2.58         |
|    | F값    | 1.979 <sup>*</sup>    | 1.867                 | 3.520 <sup>**</sup>  | 0.310        |
| 학력 | 중졸이하  | 3.33                  | 3.3                   | 3.03                 | 2.63         |
|    | 고졸    | 3.65                  | 3.52                  | 3.14                 | 2.61         |
|    | 대졸이상  | 3.67                  | 3.65                  | 3.3                  | 2.59         |
|    | F값    | 10.253 <sup>***</sup> | 10.114 <sup>***</sup> | 6.923 <sup>***</sup> | 0.114        |
| 전체 |       | 3.62                  | 3.55                  | 3.2                  | 2.6          |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냄.

\*\*\* p<.001      \*\* p<.01      \* p<.05

외국인과 이주의 증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유럽 사회에서는 다문화 수용능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 사회를 지지하는 집단이 다문화 수용능력의 한계에 관해서는 역으로 ‘한계가 많이 있다’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관성의 결여와 모순적인 태도



의 공존은 아직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2. 다문화지향성에 따른 집단 비교 : 개방적 · 제한적 · 부정적 지향 집단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편차나 모순적 태도의 공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가령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의 증대가 ‘바람직하다’고 동의하면서도, 다양성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사회적 거리감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역시 단일 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V-2> 다문화지향성에 따른 집단 구분

|             |    |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                             |
|-------------|----|-----------------|-----------------------------|
|             |    | 지지              | 저항                          |
| 다문화 수용능력 한계 | 없다 | 개방적 지향 집단 28.4% | 유보적 집단 15.8%<br>잔여적 집단 7.4% |
|             | 있다 | 제한적 지향 집단 32.8% | 부정적 지향 집단 1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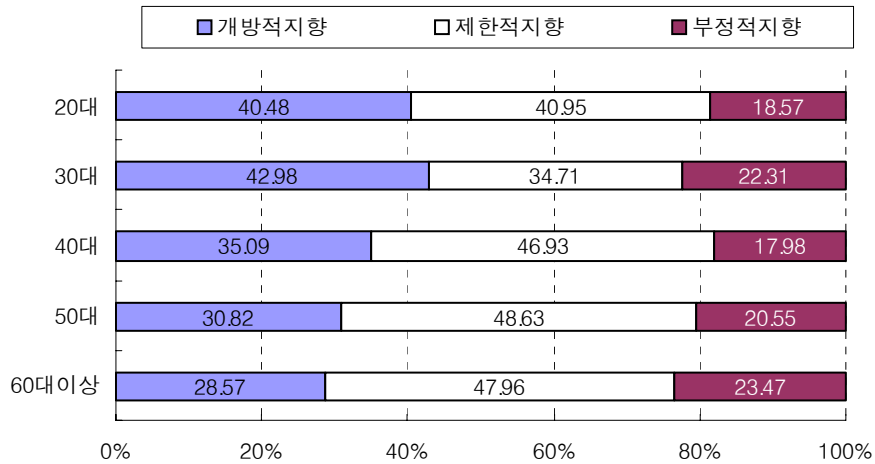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과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sup>38)</sup>을 교차시켜 몇 가지 집단을 구분해 보았다. 즉, 다문화사회를 지지하면

38)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중 2 이하(매우그렇다+대체로그렇다), 3 이상(보통이다+별로그렇지않다+전혀그렇지않다)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서 한계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집단(개방적 지향 집단), 다문화사회를 지지하면서도 수용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집단(제한적 지향 집단), 다문화사회를 지지하지 않으면서 다문화 수용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집단(부정적 지향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외에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계에 대해 모두 부정적 태도를 취한 경우, 다문화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다양성의 수용에 한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소수 있었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보면, 다문화사회를 전반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다문화 수용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한적 지향’을 지니는 응답자들이 32.8%에 달해 수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다문화사회를 지지하면서 다문화 수용능력의 한계도 없는 것으로 보는 ‘개방적 지향’ 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28.4%, 다문화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 다문화 수용능력의 한계도 인정하는 ‘부정적 지향 집단’이 15.5%를 차지했다. 이밖에 23.2%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지/저항과 다문화 수용능력의 한계 모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거나(15.8%) 다문화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수용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7.4%).

유보적 입장을 취하거나 다문화사회에 대해 부정적이면서 수용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을 제외하고 연령대별로 다문화 지향성 집단 분포를 비교해보면, 개방적 지향 집단은 20-30대 층에서, 제한적 지향 집단은 상대적으로 40대 이상 층에서, 부정적 지향 집단은 50대 이상 층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 30대 이상 층에서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정적 지향 집단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100%의 전체 N에서 유보적, 부정적 집단은 제외하였다.

<그림 V-2> 연령대별 다문화 지향성 집단 분포 (단위: %)

다문화사회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집단별로 외국인 이주자의 존재나,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개방적 지향 집단과 제한적 지향 집단이 부정적 지향 집단에 비해 이주자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주자의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이나 가족 동반권 등의 권리 부여, 그리고 결혼 이주자 및 자녀양육 지원과 다문화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두 지지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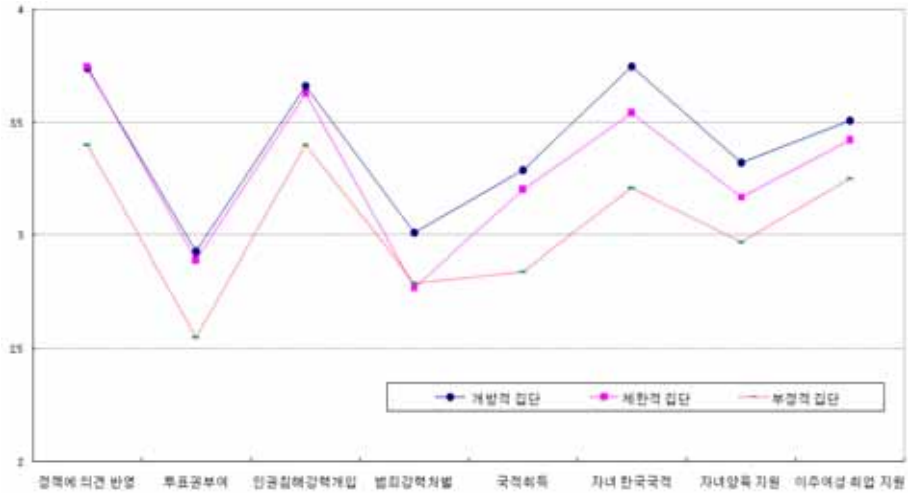
&lt;표 V-3&gt; 다문화 지향성 집단별 이주자 및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비교

|                                       |                             | 개방적<br>지향 | 제한적<br>지향 | 부정적<br>지향 | 전체   | F 값       |
|---------------------------------------|-----------------------------|-----------|-----------|-----------|------|-----------|
| 이주자 증가에<br>대한 지지도<br>(5점)             | 결혼이주여성                      | 3.29      | 3.27      | 2.95      | 3.21 | 7.506***  |
|                                       | 생산직근로자                      | 3.44      | 3.35      | 3.09      | 3.33 | 6.486**   |
|                                       | 전문기술직 근로자                   | 3.52      | 3.58      | 3.25      | 3.49 | 7.102***  |
|                                       | 새터민                         | 3.23      | 3.30      | 3.02      | 3.22 | 4.512**   |
|                                       | 유학생                         | 4.19      | 4.14      | 4.05      | 4.14 | 1.655     |
|                                       | 사업가                         | 4.20      | 4.13      | 4.05      | 4.14 | 1.352     |
| 외국인이주자<br>정책 지지도<br>(5점)              | 정책에 의견 반영                   | 3.74      | 3.75      | 3.40      | 3.68 | 15.013*** |
|                                       | 투표권부여                       | 2.93      | 2.89      | 2.55      | 2.84 | 8.464***  |
|                                       | 인권침해강력개입                    | 3.66      | 3.63      | 3.40      | 3.60 | 6.429**   |
|                                       | 외국인범죄 강력처벌                  | 3.01      | 2.77      | 2.79      | 2.86 | 4.923**   |
|                                       | 국적취득                        | 3.29      | 3.20      | 2.84      | 3.16 | 14.937*** |
|                                       | 자녀 한국국적                     | 3.75      | 3.54      | 3.21      | 3.56 | 20.006*** |
|                                       | 자녀양육 지원                     | 3.32      | 3.17      | 2.97      | 3.19 | 8.330***  |
|                                       | 이주여성 취업 지원                  | 3.51      | 3.42      | 3.25      | 3.42 | 5.876**   |
| 탈북청소년 대학 특례                           |                             | 2.88      | 3.00      | 2.82      | 2.92 | 2.344     |
| 다문화증진정책 지지도<br>(4점 Cronbach α=.732)   |                             | 2.71      | 2.77      | 2.54      | 2.71 | 10.078**  |
| 외국인<br>근로자에 대한<br>태도                  | 권리부여 (5점 <sup>39)</sup> )   | 4.01      | 3.92      | 3.72      | 3.91 | 8.752***  |
|                                       | 체류통제송환 (5점 <sup>40)</sup> ) | 2.57      | 2.42      | 2.28      | 2.45 | 6.470***  |
|                                       | 집합적위협 (5점 <sup>41)</sup> )  | 3.29      | 3.00      | 2.98      | 3.10 | 15.971*** |
|                                       | 전통생활습관유지 (5점)               | 3.71      | 3.44      | 3.58      | 3.57 | 5.662**   |
| 결혼이주여성출신사회·문화존중도 (4점 <sup>42)</sup> ) |                             | 3.14      | 3.15      | 3.00      | 3.12 | 6.17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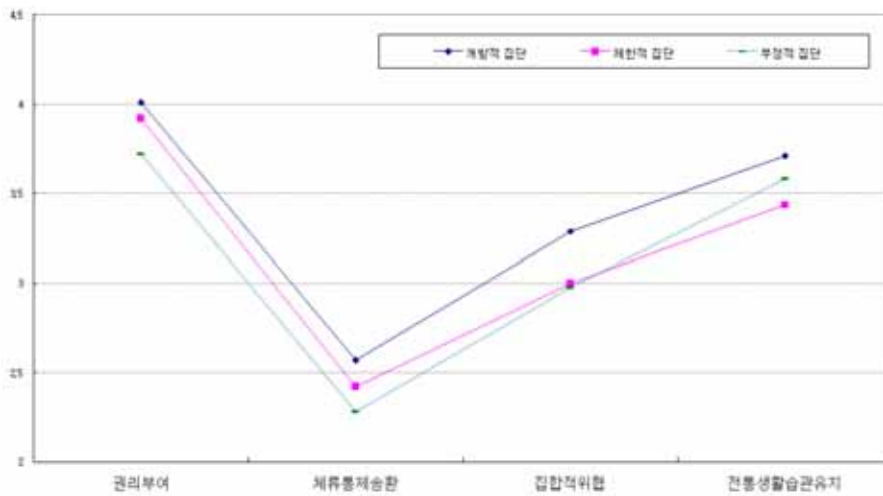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이주자 및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냄.

\*\*\* p<.001      \*\* p<.01

- 39)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족들을 데려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에 대한 응답의 평균점수임(Cronbach α=.693).
- 40)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은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에 대한 응답의 평균점수임(Cronbach α=.618).
- 41)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



<그림 V-3> 이주자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 집단별 비교



<그림 V-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 - 집단별 비교

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에 대한 응답의 평균점수임 (Cronbach  $\alpha=.798$ ).

- 42)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한 한국 남성은 아내의 모국어를 배워야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는 한국어와 더불어 어머니의 모국어도 배워야 한다’,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한국 명절과 더불어 이주여성(아내쪽) 모국의 명절이나 풍습도 챙겨야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의 가족 뿐 아니라 고향에 있는 부모나 가족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에 대한 응답의 평균점수임(Cronbach  $\alpha=.824$ ).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그림 V-3> 참조) 개방적 집단과 부정적 집단의 태도 차이는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즉, 개방적 집단은 부정적 집단에 비해 이주자 지원정책을 더 지지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그런데 제한적 지향집단은 항목에 따라 개방적 집단에 더 가까운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 지향집단에 더 가까운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우선, 이주자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주자 관련 정책에 이주자의 의견 수렴, 투표권 부여, 이주자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개입, 이주여성 취업지원 정책 등에 관해서는 제한적 지향집단의 태도가 개방적 집단의 태도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에 있어서는 제한적 집단이 부정적 집단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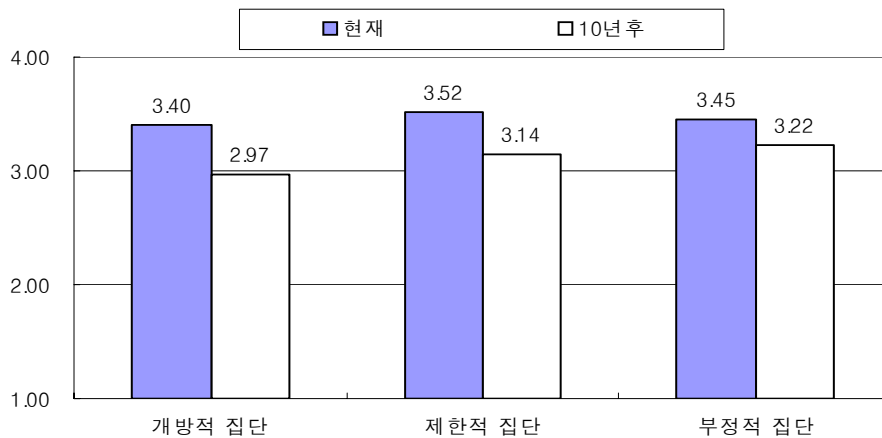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동등한 노동법적 권리 인정, 가족을 동반할 권리 인정(<그림 V-4>상의 ‘권리부여’ 항목)에 관해서는 개방적 집단과 제한적 집단의 태도가 비슷하게 수렴되고 있다. 반면 외국인 이주자가 제기하는 집합적 위협, 즉 범죄율 증가, 한국인 일자리 잠식 및 임금수준 하락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 집단의 태도가 부정적 집단의 태도에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제한적 지향집단의 특징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이주자들의 권리 보장 및 권익 신장을 원칙적으로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주자들이 제기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위협, 즉 범죄증대나 한국인들의 일자리 잠식 등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히 우려한다는데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개방적 지향집단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데 대해서도 제한적 지향 집단은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외국인 증대로 인한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현재 외국인과의 갈등 수준에 대해 제한적 지향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10년 후 외국인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제한적 지향 집단은 부정적 지향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갈등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을 각종 사회 문제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위협적 존재로 보는 부정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제한적 지향 집단이 개방적 지향 집단과 달리 외국인 이주자의 범죄에 대해 부정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문화 지향성을 기준으로 구분된 세 집단들 간에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단일민족의식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한 응답경향이 나타난다. 우선 한국에 대한 자긍심은 세 집단 가운데 제한적 지향 집단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일민족의식도 개방적 지향 집단에 비해 제한적 지향 집단, 부정적 지향 집단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5> 다문화 지향성 집단별 외국인과의 갈등의 심각성 인식 비교

<표 V-4> 다문화 지향성 집단별 국가자긍심 및 단일민족의식 비교

|                                    | 개방적 지향집단 | 제한적 지향집단 | 부정적 지향집단 | 전체 평균 | F값        |
|------------------------------------|----------|----------|----------|-------|-----------|
| ‘한국’ 자긍심 (5점척도)                    | 3.92     | 4.15     | 3.97     | 4.02  | 7.923***  |
| 단일민족의식 (4점척도 평균점수 <sup>43)</sup> ) | 2.80     | 3.03     | 3.07     | 2.95  | 18.908*** |

주: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자긍심과 단일민족의식이 강한 것을 의미함.

\*\*\*  $p < .001$

43) ‘한국이 오랫동안 단일민족 혈통을 유지해온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여러 민족을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개방적 지향 집단과 제한적 지향 집단, 부정적 지향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개방적 지향 집단과 부정적 지향 집단은 비교적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었다. 즉, 개방적 지향 집단은 이주자의 증가에 대한 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외국인과의 갈등에 대한 태도, 외국인 대상 정책이나 다문화정책 등에 대한 지지도, 단일민족의식 등 제반 영역에서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에 일관되게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반면, 부정적 지향 집단은 개방적 지향 집단과는 반대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제한적 지향 집단은 다분히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이주자 증가에 대한 지지도나 외국인의 권리 보장정책, 다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방적 지향 집단과 유사하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방적 지향 집단과는 달리 외국인과의 갈등에 민감하고 외국인,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며 그만큼 외국인 범죄와 체류자격 등을 강력하게 통제하기를 바라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문화는 존중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전통과 생활 관습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단일민족의식도 강한 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한적 지향 집단은 개방적 지향 집단 보다 오히려 부정적 지향 집단과 유사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제한적 지향 집단의 경우 외국인의 존재가 사회구성이나 생활환경에 있어 위협을 야기하지 않고 합법적 틀 내에서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 이주자, 특히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범죄나 사회문제 등이 가시화된다면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의 확대와 수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확산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다양성을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유보적인 태도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 집단별 비교 분석에서 드러났

---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될 것이다'에 대한 응답의 평균점수임(Cronbach  $\alpha=.663$ ).



듯이 개방적 지향집단보다는 제한적 지향집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를 비롯한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이주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태도가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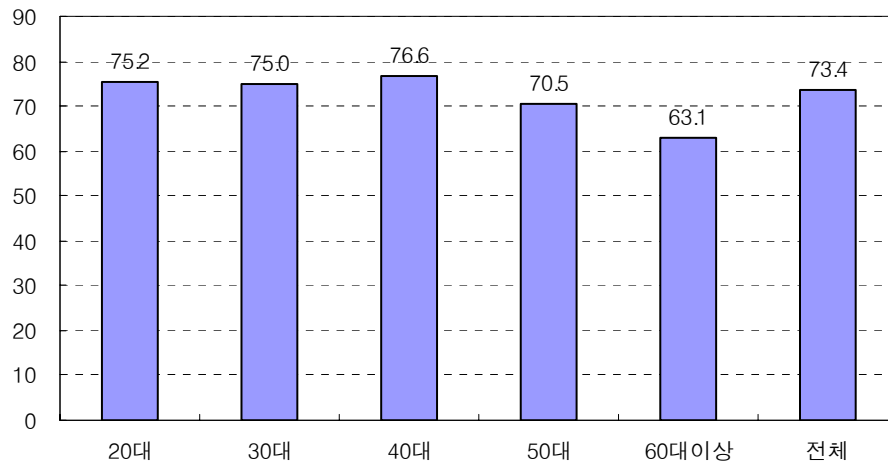
### 3. 외국 및 외국문화에 대한 태도

이 절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한국사회와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4개 국가·지역에 대해 한국인들이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각 국가·지역별로 음식, 대중문화, 공연과 문화예술, 역사와 문화유산, 언어 등 문화의 측면과 사회경제문제, 자연풍경과 관광명소 등에 대한 관심도, 외국과의 문화교류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인의 이문화에 대한 관심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인의 상호문화지향성(interculturalism)을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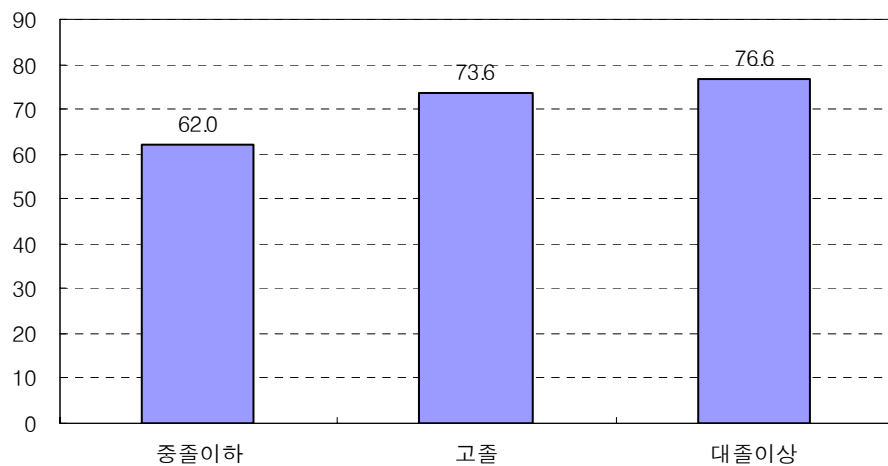
#### 1) 국가·지역별 관심의 분화

국가와 지역을 포괄해 외국에 대한 전반적 관심도<sup>44)</sup>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연령대의 관심도가 5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 집단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졸, 중졸 이하의 순이다.

44) 관심도 점수는 해당 국가에 대한 세부항목(총 7개)을 모두 합산한 점수로 최소 28점에서 최대 112점까지 분포한다.



<그림 V-6> 연령대별 외국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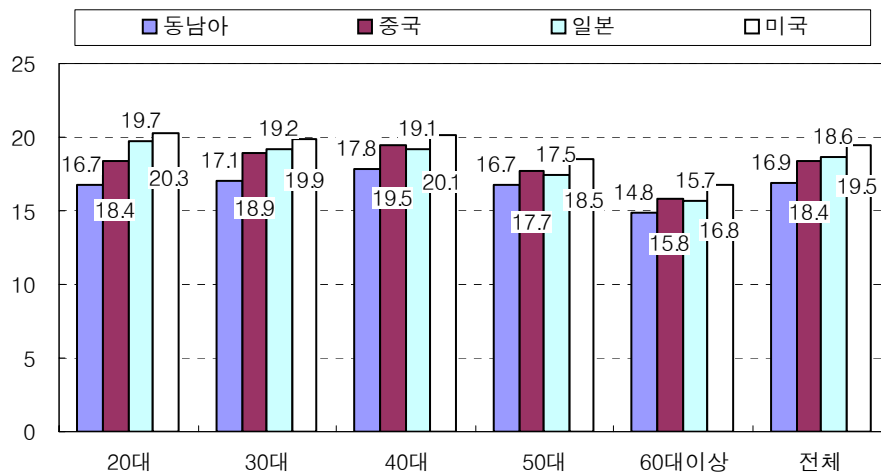


<그림 V-7> 교육수준별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국가·지역별로<sup>45)</sup> 살펴보면, 미국에 대한 관심(평균 19.5점)이 가장 높고

45) 국가·지역별 관심도는 7개 문항(음식, 대중문화, 공연 등 예술, 역사와 문화유산, 언어, 관광명소, 사회 경제문제)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그 국가·지역에 대한 전반적 관심도를 나타내는 점수로 활용하였다(미국 Cronbach  $\alpha=.889$ , 일본 Cronbach  $\alpha=.897$ , 중국 Cronbach  $\alpha=.872$ , 동남아 Cronbach  $\alpha=.885$ ).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관

그 다음으로 일본(18.6점)과 중국(18.4점)이 유사한 수준이며, 동남아(16.88점)에 대한 관심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국가·지역별로 40대 이하 젊은 연령층의 전반적인 관심 수준이 50~60대 보다 현저히 높은 가운데, 모든 연령대에서 미국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낮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과 중국에 대한 상대적 관심도는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40대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다소 높은 반면, 20·30대 연령층에서는 중국보다 일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8> 연령대별 국가·지역별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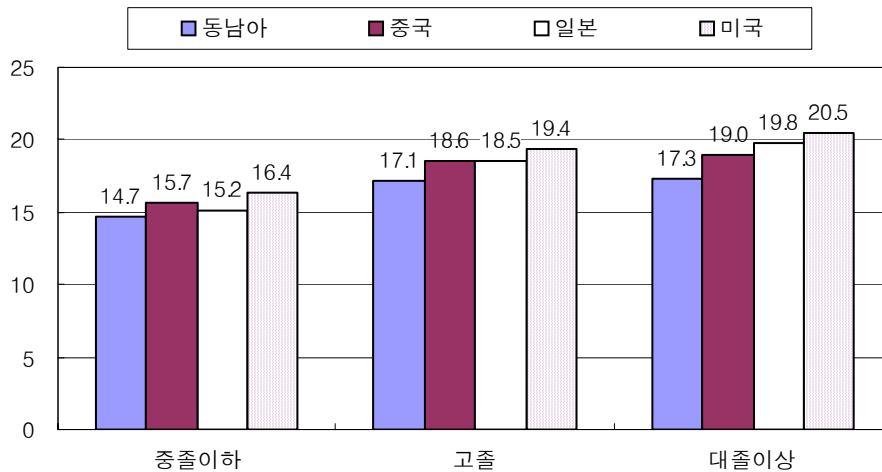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대 이상과 50대 연령층에서는 외국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제한되고 국가·지역별 관심도에 큰 차이가 없다. 외국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은 40대 이하 연령층 가운데, 40대 연령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동남아와 중국에 대한 관심은 높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관심은 20대 연령층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30대

심도의 정도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국가·지역별 관심도의 최소점수는 7점, 최대점수는 2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하 연령층,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은 데 비해 동남아에 대한 관심은 5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서 국가·지역에 따라 외국에 대한 관심에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모든 국가·지역별로 대졸 이상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졸, 중졸이하의 순이었으며 특히 중졸 이하의 관심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력층에서 미국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 가운데, 중졸 이하층과 고졸층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비해, 대졸 이상층에서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 중국에 대한 관심보다 높다.

이처럼 외국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 젊은 연령층, 대졸 이상층 사이에서는 미국>일본>중국>동남아 순으로 국가·지역별로 뚜렷한 관심의 위계 질서가 발견된다. 또한 이들 집단은 국가별·지역별 관심의 격차가 다른 층에 비해 크게 벌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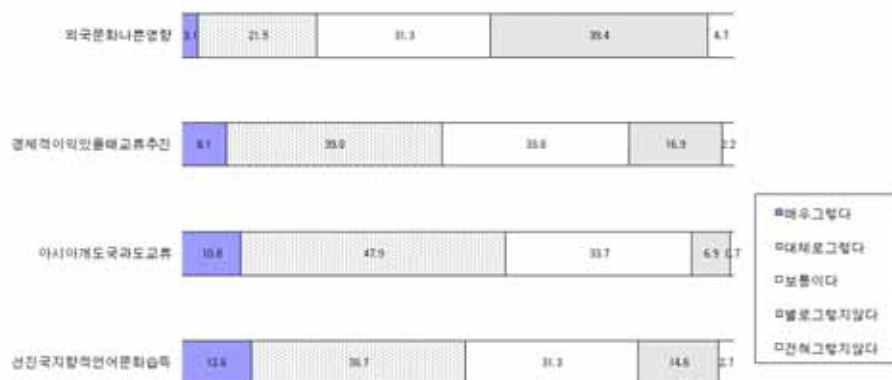
<그림 V-9> 교육수준별 국가·지역별 관심도

&lt;표 V-5&gt;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관심의 편중성(미국-동남아 관심도 격차) 비교

|      |        | 미국관심도<br>(a) | 동남아관심도<br>(b) | 관심도격차<br>(a-b) | F 값       |
|------|--------|--------------|---------------|----------------|-----------|
| 연령대  | 20대    | 20.33        | 16.75         | 3.59           | 7.708***  |
|      | 30대    | 19.87        | 17.06         | 2.81           |           |
|      | 40대    | 20.14        | 17.84         | 2.30           |           |
|      | 50대    | 18.47        | 16.74         | 1.72           |           |
|      | 60대 이상 | 16.82        | 14.84         | 1.98           |           |
| 교육수준 | 중졸 이하  | 16.38        | 14.73         | 1.65           | 11.339*** |
|      | 고졸     | 19.40        | 17.11         | 2.29           |           |
|      | 대졸 이상  | 20.48        | 17.30         | 3.18           |           |

\*\*\* p&lt;.001

문화교류의 대상 국가(지역)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시아 개도국과의 문화 교류도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58.7%가 지지하여 부정적 답변(7.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른 나라 문화를 배우려면 선진국의 것을 배워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51.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17.3%였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교류의 대상국으로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을 우선시 하는 태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보다 세밀한 차원에서는 유의해야 할 점들이 발견된다.



&lt;그림 V-10&gt; 외국과의 문화교류에 대한 개방성 (단위: %)

문화교류에 대한 태도를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외국문화 도입에 대해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이 개방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20대 연령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문화교류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면서도 유독 한국사회보다 경제적 발전 수준이 낮은 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60대 이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표 V-6> 연령대별 문화교류에 대한 개방성 비교

|    |        | 외국문화는<br>한국문화에<br>악영향 | 경제적 이익<br>있을 때<br>문화교류 추진 | 아시아개도국과<br>도 활발한<br>문화교류 | 선진국 지향적<br>문화 습득   |
|----|--------|-----------------------|---------------------------|--------------------------|--------------------|
| 전체 |        | 3.21(.937)            | 2.66(.925)                | 3.61(.795)               | 2.56(.978)         |
| 연령 | 20대    | 3.38(.862)            | 2.71(.882)                | 3.54(.840)               | 2.64(.982)         |
|    | 30대    | 3.31(.932)            | 2.72(.936)                | 3.68(.713)               | 2.65(1.001)        |
|    | 40대    | 3.28(.938)            | 2.61(.986)                | 3.64(.855)               | 2.44(1.031)        |
|    | 50대    | 2.96(.938)            | 2.62(.884)                | 3.63(.730)               | 2.58(.899)         |
|    | 60대 이상 | 2.85(.940)            | 2.60(.910)                | 3.52(.826)               | 2.43(.877)         |
|    | F(sig) | 12.535***             | 0.943                     | 1.636                    | 2.880 <sup>†</sup> |

주: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교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함.

\*\*\* p<.001      <sup>†</sup> p<.05

문화교류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도 흥미로운 경향이 나타난다. 외국문화 도입에 대한 태도와 경제적 이익을 위한 문화교류를 지지하는 태도, 선진국과의 문화교류를 우선시하는 태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아시아 국가와의 문화교류에 대한 태도는 문화교류의 경제적 도구성이나 선진국 지향적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부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교류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지 않을수록, 선진국 지향적 태도가 강하지 않을수록, 즉 비교적

개방적 태도를 취할수록 아시아 개도국과의 문화교류에 대해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V-7> 문화교류에 대한 개방성-문화간 상관관계

|                        | 외국문화<br>한국문화에<br>악영향 | 경제적 이익<br>있을 때<br>문화교류 추진 | 아시아<br>개도국과도<br>활발한 교류 | 선진국 지향적<br>문화 습득 |
|------------------------|----------------------|---------------------------|------------------------|------------------|
| 외국문화 한국문화에<br>악영향      | 1                    | .312**                    | .028                   | .218**           |
| 경제적 이익 있을 때<br>문화교류 추진 |                      | 1                         | -.174**                | .314**           |
| 아시아 개도국과도<br>활발한 교류    |                      |                           | 1                      | -.109**          |
| 선진국 지향적 문화<br>습득       |                      |                           |                        | 1                |

주: 각 문항에 대해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교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재부호화하여 분석하였음.

\*\* p<0.01

## 2) 영역별 관심의 격차

외국에 대한 관심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에 대한 관심도를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국가·지역을 총괄해 영역별 관심도를 살펴보면<sup>46)</sup> 자연경관과 관광명소에 대한 관심도(평균 11.5점)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언어(10.7점), 사회경제문제(10.4점), 역사와 문화유산(10.4점), 음식(10.2점), 대중문화(10.1점), 공연 및 문화예술(10.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층은 모든 영역에서 관심이 현저히 낮으며 자

46) 7개 영역별 관심도를 숫자가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은 방향으로 역부호화한 후 4개 국가·지역의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영역의 전반적 관심도를 나타내는 점수로 활용하였다(음식과 요리법 Cronbach  $\alpha$ =.809, 대중문화 Cronbach  $\alpha$ =.774, 공연 및 문화예술 Cronbach  $\alpha$ =.817, 언어Cronbach  $\alpha$ =.774, 역사와 문화유산 Cronbach  $\alpha$ =.792, 사회경제문제 Cronbach  $\alpha$ =.849). 영역별로 최소 4점에서 최대 16점까지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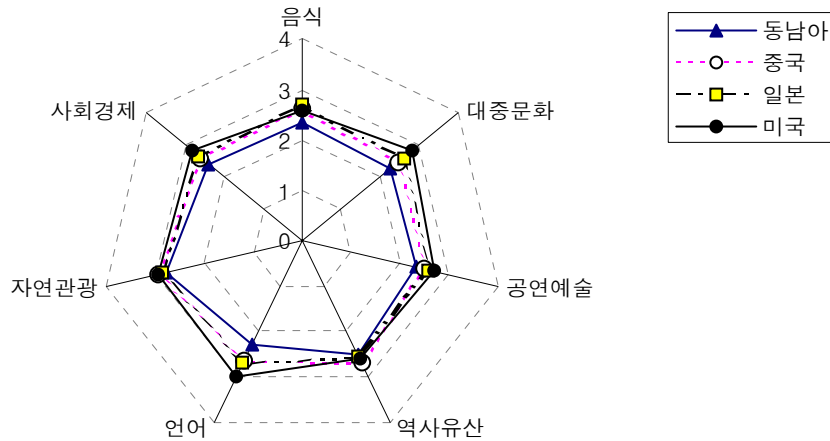
연풍광이나 관광명소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고 영역별 격차도 크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40대의 경우에는 자연풍광과 관광명소, 사회경제문제, 언어 등을 중심으로 전 분야에 비교적 고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대 연령층은 음식과 언어에 대한 관심은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는데 비해, 대중문화와 공연·문화예술, 자연경관·관광명소에 대한 관심은 30-40대와 유사한 수준이며, 역사·문화유산과 사회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은 30-40대 보다 낮고 50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영역별로 관심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중문화와 공연·문화예술 등 젊은 연령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서 20대의 관심이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은 이 영역에 있어 국가별 관심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lt;표 V-8&gt; 연령대별 영역별 관심도 비교

|        | 음식        | 대중문화      | 공연예술      | 역사<br>문화유산 | 언어        | 자연<br>관광명소 | 사회경제<br>문제 |
|--------|-----------|-----------|-----------|------------|-----------|------------|------------|
| 전체     | 10.2      | 10.1      | 10.1      | 10.4       | 10.7      | 11.5       | 10.4       |
| 20대    | 10.7      | 10.3      | 10.5      | 10.5       | 11.2      | 11.8       | 10.2       |
| 30대    | 10.4      | 10.4      | 10.3      | 10.7       | 10.9      | 11.7       | 10.6       |
| 40대    | 10.4      | 10.6      | 10.6      | 10.9       | 11.1      | 11.9       | 11.1       |
| 50대    | 9.8       | 9.5       | 9.5       | 10.1       | 10.0      | 11.1       | 10.4       |
| 60대 이상 | 8.9       | 8.5       | 8.6       | 9.0        | 8.8       | 10.3       | 9.1        |
| F값     | 14.982*** | 26.005*** | 20.391*** | 15.025***  | 31.033*** | 12.544***  | 16.006***  |

\*\*\* p&lt;.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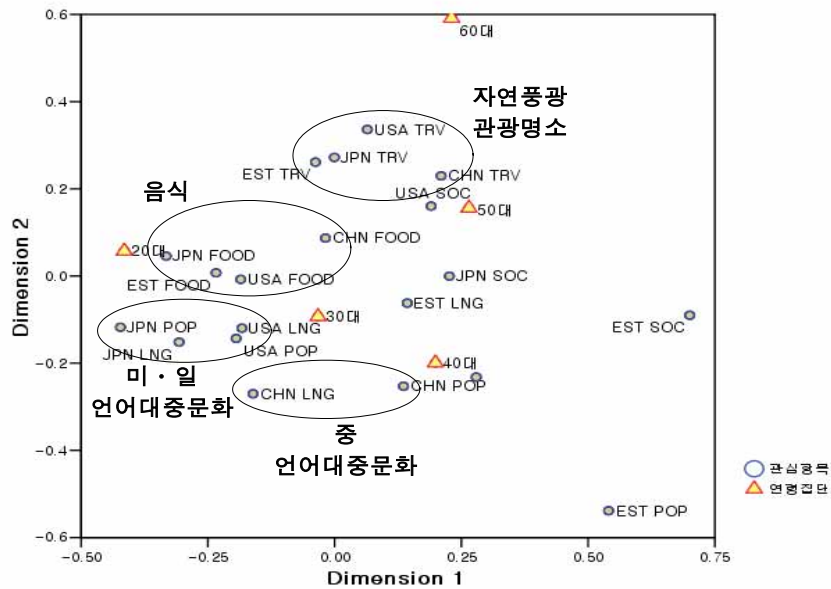
영역별 관심도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역사·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음식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는 미국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일본과 중국의 순이었다. 이들 국가에 비해 동남아에 대한 관심은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자연풍광과 관광명소,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국가별,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은데 비해 언어·대중문화·공연과 문화예술·사회경제문제 등에 있어서는 국가·지역별 관심의 격차가 컸으며, 특히 미국≫일본>중국≫동남아 순으로 관심의 위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연령별로는 살펴보면 외국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 20대의 경우 동남아와 중국에 대한 관심은 음식, 자연경관과 관광명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그 외의 측면, 특히 대중문화와 공연·문화예술에 있어서는 동남아와 중국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젊은 연령층에서는 동남아와 중국에 대한 관심이 특정 영역에 치우쳐 있어 영역별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동남아에 대한 관심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전 영역에 고르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영역별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 4. 외국에 대한 관심 구조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호문화지향성 : 로컬 상호문화지향 vs. 글로벌 상호문화지향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지역), 관심영역, 응답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대응 분석은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않는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이지만 전체적인 관심의 분포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중앙에서 좌측으로 미국과 일본의 음식과 대중문화, 언어 등이 집중적으로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의 대중문화나 사회경제 문제는 우측으로 동떨어져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동남아 문화에 대한 관심 간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을 드러낸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좌측에 있고 30, 40, 50대는 중앙 부분에 위치하는 반면 60대는 가장 상단의 동떨어진 지점에 분포하고 있다. 외국에 대한 관심에서 60대는 다른 연령층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역별로 보면 중앙 상단에는 관광명소에 대한 관심이 주로 분포하며 여기에 가장 가까운 집단은 50대이다. 이에 비해 20대와 30대는 음식, 미국과 일본의 언어 및 대중문화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USA: 미국 JPN: 일본 CHN: 중국 EST: 동남아  
FOOD: 음식 POP: 대중문화 LNG: 언어 TRV: 자연풍광, 관광명소 SOC: 사회경제문제<sup>47)</sup>

<그림 V-11> 연령별 외국에 대한 관심 구조 : 대응분석 결과

이러한 분포는 한국인들의 외국에 대한 관심의 전반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한국인의 외국에 대한 관심은 관광을 중심으로 한 즉각적 감각의 대상으로서의 ‘외국’과, 특정한 정보와 의미를 지닌 사회·문화적 측면의 ‘외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보와 의미를 지닌 ‘외국’은 다시 문화자본으로서의 가치에 따라 질서 지워지는데, 한편으로는 문화자본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선진국의 언어와 대중문화·음식문화 등이 위치해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문화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동남아의 사회경제 문제나 동남아·중국의 대중문화 영역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동남아의 사회경제 문제나 대중문화는 문화자본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관심 밖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47) 원래 조사에는 7가지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연 및 문화예술 분야’는 ‘역사 및 문화유산’, ‘대중문화’ 문화와 응답의 분포가 거의 유사하여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연령별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국가나 특정 분야에 편향된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나타난다. 50-60대의 경우에는 그 관심이 감각의 대상으로서 '외국'에 편향되어 있다. 이에 비해 20대는 음식과 문화자본으로서 확실한 가치를 인정받는 미국과 일본의 일부 문화 영역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다. 이에 비하면 40대의 경우에는 위의 두 연령대에 비해 편향성은 두드러지지 않고 중국의 언어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사회의 젊은 세대들이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그 가운데에서도 소비 취향이나 문화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영역에 관심이 편중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문화자본으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별, 영역별 관심이 위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문화본연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기보다는 일종의 도구로 문화를 보는 우리사회의 지배적 시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외국과의 문화교류는 뚜렷한 경제적 이익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7.1%가 지지를 표명한 데 비해 반대는 19.1%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사회에는 경제적 수단으로서 문화교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문화의 도구적 가치를 기준으로 국가별·영역별 관심이 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지역별 관심의 위계가 뚜렷해지고 영역별 관심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외국에 대한 전반적 관심도와 관심의 편중성을 축으로 삼아 네 집단을 구분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에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lt;표 V-9&gt; 외국에 대한 관심 × 관심의 편중성 교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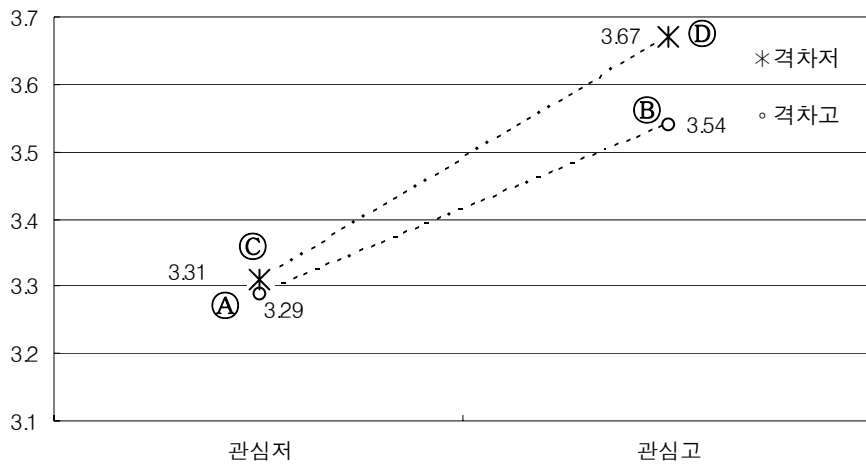
|                                       |       | 외국에 대한 관심도<br>(평균: 73.4) |                  |
|---------------------------------------|-------|--------------------------|------------------|
|                                       |       | 관심 낮음                    | 관심 높음            |
| 관심의 편중성<br>(미국-동남아 관심<br>격차, 평균: 2.6) | 격차 큼  | ㉠관심저-격차고 (19.8%)         | ㉡관심고-격차고 (24.4%) |
|                                       | 격차 적음 | ㉢관심저-격차저 (29.8%)         | ㉣관심고-격차저 (25.4%) |

주: 관심도 및 격차의 기준은 평균값으로 그 보다 높은 경우 관심 높음(격차 큼), 평균값 보다 낮은 경우 관심 낮음(격차 적음)으로 하였음.

위의 <표 V-9>에 나타났듯이, 외국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으면서 여러 지역에 고른 관심을 보인 응답자는 25.4%(집단 D), 관심은 높으나 특정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응답자는 24.4%(집단 B), 외국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낮으면서 여러 지역에 고른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 C는 29.8%, 외국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고 또한 선진국에 편향된 관심을 보이는 응답자는(집단 A)는 19.8%였다. ‘집단 D’는 다양한 문화에 고른 관심을 갖고 있는 다문화 시민(상호문화지향적 시민)에 비교적 가깝다고 한다면, 외국문화에 관심도 적고 선진국 문화를 선호하는 ‘집단 A’는 다문화 사회와 가장 거리가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에 대한 관심도나 국가별 관심의 격차에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네 집단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에서는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해 보았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다양성과 이주의 증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 V-13>에서 보듯이 외국에 대한 관심이 낮은 집단보다는 관심이 높은 집단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외국에 대한 관심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 A와 집단 C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 점수가 엇비슷하지만, 외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 B와 D의 경우는 국가별 관심의 격차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국가별 관심의 격차가 적은 집단 D의 경우 격차가 큰 집단 B 보다 다문화 사회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외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경우에는 관심의 편중성 여부에 따라, 즉 선진국에 관심이 집중되는가 여부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수용하는 태도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화의 진전과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외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것 뿐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위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국가에 대한 ‘균형 잡힌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V-12> 외국에 대한 관심 양상에 따른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sup>48)</sup> 비교

## 5. 소결

이주의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일반 시민들이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할 것인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념적 태도가 시민들의 실천적 태도로 내재화되고 있는지 등은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논의

48)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 ‘우리나라의 인종·종교·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에 대한 5점척도 응답 평균점수이다(Cronbach  $\alpha$ =.819).

의 핵심적 부분이다. 특히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이상과 현실 간에 모순이 노정되면서 실천적 함의를 지닌 시민의 태도는 더욱 중시되고 있다. 한편으로 다문화주의의 이상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가 공적으로 인정되고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질서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가 형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현실을 보면 정책이 표방하는 다문화사회의 이념과 실제 생활에서 대면하는 타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태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리카(2003)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념적 태도와 어느 정도 구분되는 상호문화지향(interculturalism), 다문화적 국가(multicultural state)와 구분되는 상호문화적 시민(intercultural citizen) 개념을 제시하면서 다문화주의의 내재화, 즉 다문화주의 본연의 목적과 일치하는 상호문화적 시민의식과 태도의 정착을 위한 별도의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상호문화적 시민의식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시민들이 실제로 대면하는 사회 집단의 문화적 배경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상호관계를 맺어가려는 의지와 실행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이나 이문화에 대한 일반적 관심의 증가 자체만으로 이러한 경향이 정착되어 가지는 않는다. 이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그 내용과 방향에 따라, 특히 한 사회 안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타집단에 대한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때로는 상반된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시대의 조류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조사 결과 한국사회에서도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외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관심의 내용과 방향을 보면 젊은 연령대로 갈수록 일본과 미국 지향적 태도가 강화되고 문화자본으로서의 가치에 따라 국가별, 영역별로 관심의 위계가 형성되는 경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이나 이문

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아시아 개도국 출신자를 포함한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실제 사회 속에서 대면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의해 촉발된 것, 즉 로컬 상호문화지향(local interculturalism)의 발로라기보다는, 초국가적 경제체계가 제공하는 기회에 근접하고 또 선진국의 문화상품 교환-소비능력을 높이하고자 선진국의 '대문화(Great Culture)'에 민감하게 관심을 갖는 경향, 즉 글로벌 상호문화지향(global interculturalism)(Kymlicka 2003)의 전형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접근이 일반적·피상적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책의 공식적 이념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이념과 실천적 태도의 모순 내지 내재화의 지연을 논의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게 보일 수도 있다.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유의해야 할 점은 정책적, 이념적 공백 속에서 외국에 대한 관심, 이문화에 대한 태도는 세계화가 내포하는 권력관계를 따라 '선진국 문화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외국에 대한 관심의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문화적 다양성'의 강조는 오히려 선진국 지향성과 문화자본 중심적 태도만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회에서 실제 전개되고 있는 이주의 양상에 맥락화되고 이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자의 민족적, 문화적 배경에 특화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별·영역별로 편향되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수용하는 균형잡힌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 VI

# 이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종족적 배제주의 (ethnic exclusionism)

|                       |     |
|-----------------------|-----|
| 1. 배경 및 개념 검토         | 143 |
| 2. 분석 : 한국인의 종족적 배제주의 | 148 |
| 3. 국제비교 : EU와의 비교     | 160 |
| 4. 소결                 | 165 |

## 1. 배경 및 개념 검토

인종적 편견,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는 한 사회의 인구 구성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과 맥락이 상이하다. 이주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의 경험은 오랫동안 인종차별이나 소수자 보호를 논의해온 유럽 및 북미국가들과 상당히 다를 것이다. 다민족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연구가 특정한 사례 분석을 넘어서서 보다 일반화된 논의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비교분석이나 유형화의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유럽 국가들의 인종적 편견을 비교 분석하는 EUMC(EU Monitoring Center for Racism and Xenophobia)의 보고서 『Majorities' Attitude Toward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2005)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민족·인종적 외집단에 대해 일반화된 비우호적 견해 (generalized unfavourable opinions on one or more different ethnic outgroups)’를 종족적 배제주의로 정의하고(EUMC 2005), 유럽의 EU 회원국 및 비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는 전면적인 국제비교조사는 아니지만 EUMC의 분석에 사용된 일부 문항을 설문지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두 가지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인들의 타인종·타민족에 대한 태도 및 이주에 대한 태도를 ‘종족적 배제주의’ 개념을 통해 측정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유럽과 공통된 문항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인들의 응답경향이 유럽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분석한다. 단, 유럽의 조사와 이번 조사는 조사 시점이나 척도 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을 비교하는 시론적인 분석임을 미리 밝혀둔다.

### 1) 종족적 배제주의(ethnic exclusionism)의 요인 구성

유럽에서 사용한 ‘종족적 배제주의’ 문항들은 유럽의 각 국에서 공통적으

로 조사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된 것이지만, 이주의 양상이 유럽과는 매우 상이한 한국의 응답자들에게는 생소하고 낯선 내용들도 많이 담겨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작성 단계에서 EUMC의 설문 내용 중 일부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sup>49)</sup>, 조사가 끝난 후 응답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적합한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요소들을 구성하였다. 즉 종족적 배제주의의 개념을 따오기는 하였으나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 VI-1> EUMC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요소

|                           |  |
|---------------------------|--|
| Euro<br>Barometer         | 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Resistance to multicultural society)<br>② 다문화 사회의 한계 (Limits to multicultural society)<br>③ 합법적 이주자의 시민권에 대한 반대(Opposition to civil rights for legal migrants)<br>④ 합법적 이주자의 송환정책에 대한 선호(Favour repatriation policies for legal migrants) |
| European<br>Social Survey | ⑤ 다양성에 대한 저항<br>⑥ 이주자에 대한 저항<br>⑦ 난민에 대한 저항<br>⑧ 민족적 거리에 대한 선호<br>⑨ 집합적인 민족적 위협에 대한 인지<br>⑩ 범죄를 저지른 이주자의 송환정책 선호   |

49) 설문문항 검토 단계에서 EU와 다른 한국의 차이는 첫째, 외국인 정주자 집단, 달리 표현하면 국내 거주하는 소수민족 집단이 뚜렷하게 가시화되어 있지 않으며, 둘째 난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의 차이를 감안하여 문항을 선별하고 수정하였다.

&lt;표 VI-2&gt; 수정된 종족적 배제주의의 차원 및 항목

| dimension           | 조사 항목  | Cronbach's @                 |      |
|---------------------|--|------------------------------|------|
| 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 .820                         | .720 |
|                     |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                              |      |
|                     |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             |                              |      |
| ② 다문화 사회의 한계        |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                            |      |
| ③ 이주자 시민권 반대        |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698                         |      |
|                     |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족을 데려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      |
| ④ 이주자 송환정책 선호       |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 .619                         |      |
|                     |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은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                              |      |
| ⑤ 이주로 인한 위협의 집합적 인지 |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 .690<br>↓<br>.755<br>(문항 추가) |      |
|                     |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                              |      |
|                     |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                              |      |
|                     |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항추가)    |                              |      |

EUMC는 종족적 배제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유럽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두 가지 조사자료, 즉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EB)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의 자료를 이용하여 종족적 배제주의를 10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EUMC의 ‘종족적 배제주의’는 국제적 비교분석이 가능한 개념으로써 주목할 만하지만, 그 자체를 표준화된 척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EU의 틀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한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는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 요인들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종족적 배제

주의의 하위 요소는 다섯 가지, 즉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다문화 사회의 한계, 이주자 시민권 반대, 이주자 송환정책 선호, 이주로 인한 집합적 위협의 인지로 압축되었다(<표 VI-2> 참조).

## 2) 현실경쟁이론과 사회정체성 이론

EUMC 보고서를 집필한 코엔더스 등(Coenders et. al 2003, Report 1: 8~9)은 종족적 배제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을 현실갈등이론(Real Conflict Theory)과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으로 구분한다. 현실갈등이론에 따르면, 사회에서는 언제나 희소한 자원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기 마련이며 종족적 배제주의 역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종·타민족을 경쟁에서 밀어내려 하기 때문에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분석적인 차원에서 다시 외부 위협(external threat)과 인지된 위협(perceived threa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 위협은 실제로 외국인 이주자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일자리나 생업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교육수준이 낮은 단순 노동자나 도시 슬럼가, 외국인 밀집지역의 거주자들이 외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접 외국인 이주자들과 경쟁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느끼는 상황은 ‘인지된 위협’이라고 개념화된다.

사회정체성 이론은 내집단(ingroup)을 옹호하고 반대로 외집단(outgroup)을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로부터 출발한다. 이 이론은 자기가 속한 민족·인종집단을 우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다른 민족·인종집단을 도덕적 문화적으로 열등하게 인식하는 태도로 인해 종족적 배제주의가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흥미로운 것은 코엔더스가 현실갈등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을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로 본다는 점이다. 즉, 자신이 속한 민족·인종집단을 동일시하고 타자를 배제하는 정체성(동일시)의 메커니즘은 현실적인 경쟁에 의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양자의 상호보완성을 전제로 EUMC 보

고서는 종족적 배제주의를 다음 네 가지 가설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첫째, 종족적 배제주의는 인종적 소수자집단(외집단)과 비슷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 인종적 외집단과 실제로 경쟁해야 하는 사람들(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집단)은 타인종·타민족 소수자에 대해 더 배제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둘째, 타인종·타민족 소수자들로 인한 사회적 위협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배제적인 태도가 강해질 것이다. 셋째, 인종간 경쟁의 실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배제적 태도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인종 간 경쟁이 심한 국가란 이주민의 비율이 높고 난민의 수가 많으며, 실업률이 높은 국가이다. 넷째, GDP가 낮은 국가, 그리고 GDP 중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이 낮은 국가<sup>50)</sup>는 인종간 경쟁의 수준을 낮추어 줄만한 정책 수단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가에서 배제적 태도는 더 뚜렷할 것이다(Coenders 2003 - Report 1: 10~16).

EUMC의 종족적 배제주의 개념은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오랫동안 공존해온 유럽과, 여전히 단일민족의식과 순혈주의가 강한 한국의 상황은 매우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족적 배제주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분석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종족적 배제주의는 EU 회원국과 후보국을 포함하여 경제·역사·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위해 구성된 개념이다. 즉 특정 국가의 경험이나 역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제적인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만든 개념이므로 한국의 상황에도 적용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 정도는 유럽과 한국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종족적 배제주의에는 다문화 사회를 보는 전반적 태도, 이주자 증대로 인한 위협에 대한 인식, 이주자의 시민권 보장이나 송환정책과 같은 정책 쟁점에 대한 태도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학술적 연구 뿐 아니라

50) EUMC의 보고서에서는 탈상품화(decommocification)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종족적 배제주의 태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책연구에도 시사점을 주는 내용들이다.

셋째, 종족적 배제주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인의 태도를 외국의 추세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조사 시점도 다르며 완전히 동일한 척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비교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론적인 작업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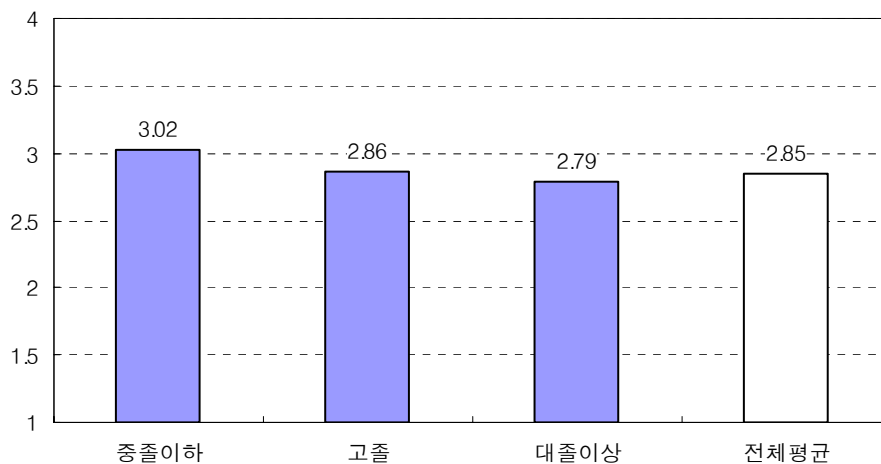
종족적 배제주의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를 중심적인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한국인들의 종족적 배제주의 태도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정치적 성향(진보/보수), 양성평등 의식, 단일민족의식과 같은 가치관들은 종족적 배제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셋째, 한국인들의 종족적 배제주의는 현실경쟁이론 또는 사회정체성 이론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는가? 넷째, 타인종·타민족 사람들을 보는 한국인들의 태도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 2. 분석 : 한국인의 종족적 배제주의

현실경쟁이론에 따르면 종족적 배제주의는 실제 다른 인종·민족 출신자와 경쟁하고 있는 집단, 즉 인종·민족적 소수자와 사회적 지위가 유사한 집단에서 더 강해진다.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면 내국인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빈곤한 이주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은 내국인에게 돌아갈 몫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익을 위협하는 타인종·타민족 출신자들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앞의 <표 VI-2>에서 제시된 포함된 12가지 문항의 평균값을 ‘종족적 배제주의’ 태도 점수로 보고 인구학적 요인별로 응답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배타적인 태도가 5점, 가장 포용적인 태도가 1점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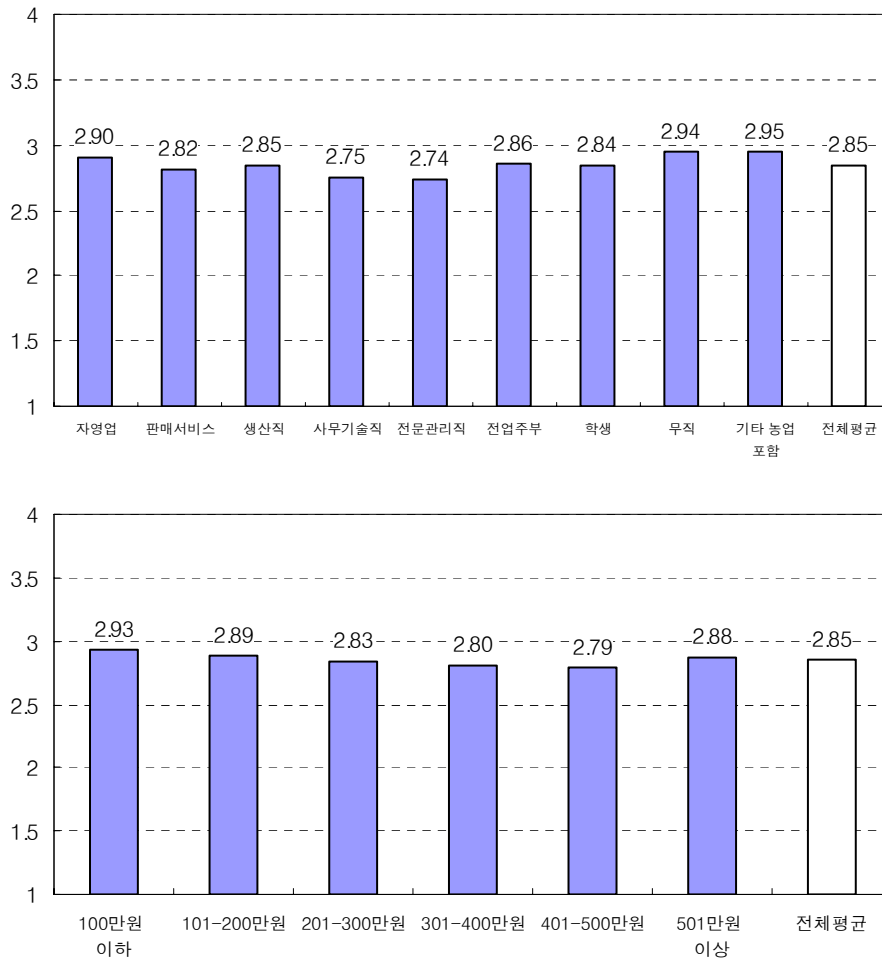
<그림 VI-1>에서 보듯이 집단의 특성에 따라 평균값의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sup>51)</sup> 직업별로는 사무기술직, 전문관리직이 평균보다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무직, 생산직, 자영업 종사자가 보다 배제적인 응답을 하였다. 주부들도 평균보다는 더 낮은 수준이어서 다른 인종·민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종 타민족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서 대졸이상 응답자의 배제주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별(월평균)로 살펴보면, 500만원 수준까지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다른 인종·민족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5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다시 배제주의 점수가 평균이상으로 올라가는 복잡한 양상이 나타난다.



<그림 VI-1> 교육수준별 인종적 배제주의 평균점수 비교

51) F 검정 결과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특히 교육수준별 차이가 가장 뚜렷하였다(직업:  $p < 0.01$ , 교육수준:  $p < 0.001$ , 가구소득:  $p < 0.5$ ).





### 1) 사회경제적 지위와 종족적 배제주의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이 응답자의 종족적 배제주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수준과 직업은 종족적 배제주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가구소득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이하 학력자들은 고졸 응답자에 비해 보다 배제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들은 상대적으로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직업별 분석은 사무기술직을 기준으로 할 때 자영업자와 판매서비스직, 무직자는 타인종·타민족에 대해 보다 배제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생산직이나 전문관리직은 사무직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VI-3> 종족적 배제주의(전체) : 회귀 분석 결과

|                   |        | 종족적 배제주의        |
|-------------------|--------|-----------------|
| 성별 (참조: 남성)       |        | -.112* (.066)   |
| 연령                |        | .010*** (.003)  |
| 교육<br>(참조: 고졸)    | 중졸이하   | .227* (.103)    |
|                   | 대졸이상   | -.253*** (.064) |
| 직업<br>(참조: 사무기술직) | 자영업    | .213* (.093)    |
|                   | 판매서비스  | .241* (.102)    |
|                   | 생산직    | -.054 (.133)    |
|                   | 전문·관리직 | -.124 (.208)    |
|                   | 전업주부   | .115 (.107)     |
|                   | 학생     | .355** (.121)   |
|                   | 무직     | .305* (.146)    |
|                   | 기타(농업) | .665*** (.201)  |
| 가구<br>소득          | 하      | .046 (.062)     |
|                   | 상      | .102 (.101)     |
| R <sup>2</sup>    |        | .086            |

\*\*\* p<0.001    \*\* p<0.01    \* p<0.05    † p<0.1

종족적 배제주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하위요소별로 동일한 변인들로 회귀분석을 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표 VI-4>). 전체적으로 가장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으로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타인종·타민족을 배제하는 태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고학력층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관적 추세가 나타났지만 하위요소별로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 특히 대졸이상의 고학력 응답자들은 이주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시민권

을 보장하는데 동조하고 있으며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위협을 된다는 주장에는 찬성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근로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나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찬성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아직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정주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한국의 현실이 응답자들의 태도에 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VI-4>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 차원과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                          |        | 다문화<br>사회에<br>저항             | 다문화<br>사회의<br>한계             | 이주자<br>시민권                  | 이주자<br>송환정책                 | 집합적<br>위협인지               |
|--------------------------|--------|------------------------------|------------------------------|-----------------------------|-----------------------------|---------------------------|
| 성별(참조: 남성)               |        | <b>-.170**</b><br>(.068)     | -.094 <sup>†</sup><br>(.057) | .048<br>(.068)              | .054<br>(.069)              | -.101<br>(.067)           |
| 연령                       |        | .001<br>(.003)               | <b>.005*</b><br>(.003)       | .005 <sup>†</sup><br>(.003) | <b>.007*</b><br>(.003)      | <b>.009**</b><br>(.003)   |
| 교육<br>(참조:<br>고졸)        | 중졸 이하  | <b>.213*</b><br>(.106)       | -.113<br>(.088)              | .189 <sup>†</sup><br>(.106) | -.043<br>(.107)             | .164<br>(.105)            |
|                          | 대졸 이상  | -.122 <sup>†</sup><br>(.066) | .019<br>(.055)               | <b>-.187**</b><br>(.066)    | -.106<br>(.067)             | <b>-.211***</b><br>(.065) |
| 직업<br>(참조:<br>사무<br>기술직) | 자영업    | .098<br>(.095)               | -.025<br>(.079)              | .140<br>(.095)              | .117<br>(.096)              | <b>.183*</b><br>(.094)    |
|                          | 판매서비스  | .116<br>(.105)               | -.063<br>(.087)              | .157<br>(.105)              | -.107<br>(.106)             | <b>.305**</b><br>(.104)   |
|                          | 생산직    | -.186<br>(.137)              | -.066<br>(.114)              | .109<br>(.137)              | -.022<br>(.069)             | .007<br>(.135)            |
|                          | 전문·관리직 | -.266<br>(.214)              | -.007<br>(.178)              | .146<br>(.214)              | .209<br>(.216)              | -.166<br>(.211)           |
|                          | 전업주부   | .043<br>(.110)               | -.130<br>(.091)              | .186 <sup>†</sup><br>(.109) | .062<br>(.111)              | .068<br>(.108)            |
|                          | 학생     | .105<br>(.124)               | -.114<br>(.103)              | .218 <sup>†</sup><br>(.124) | <b>.242*</b><br>(.125)      | <b>.311**</b><br>(.122)   |
|                          | 무직     | .070<br>(.150)               | .032<br>(.125)               | <b>.323*</b><br>(.149)      | .089<br>(.151)              | <b>.283*</b><br>(.148)    |
|                          | 기타(농업) | <b>.654**</b><br>(.207)      | .003<br>(.172)               | <b>.528**</b><br>(.207)     | .344 <sup>†</sup><br>(.209) | .273<br>(.204)            |
|                          |        |                              |                              |                             |                             |                           |
| 가구<br>소득                 | 하      | -.017<br>(.064)              | .036<br>(.053)               | -.019<br>(.064)             | .042<br>(.065)              | .080<br>(.063)            |
|                          | 상      | .095<br>(.104)               | .064<br>(.086)               | -.004<br>(.104)             | -.025<br>(.105)             | .123<br>(.102)            |
| R <sup>2</sup>           |        | .031                         | -.004                        | .035                        | .014                        | .059                      |

\*\*\* p<0.001    \*\* p<0.01    \* p<0.05    <sup>†</sup> p<0.1

직업별로도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른 응답경향이 나타나는데, 가장 뚜렷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이주자로 인한 집합적 위협의 인지’였다. 사무기술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학생, 무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협, 즉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수준을 낮추며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예상과는 다른 결과인데, 최근 청년실업률의 증가와 대졸자 구직난 등이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sup>52)</sup>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실제로 외국인 이주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집단, 즉 저학력·저소득의 위신이 낮은 직업 종사자들이 뚜렷하게 이주자들을 배제하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종·타민족에 대해 보다 포용적인 태도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직업별, 가구소득별 차이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다. 하위요인별 태도를 보면 유럽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생산직 근로자들의 종족적 배제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반면 학생들은 보다 배제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현실경쟁이론’은 한국의 조사결과 분석에서 부분적인 타당성을 보여주긴 하였으나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종족적 배제주의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이주자와 내국인 정주자 간의 경제적 이익의 대립이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고 일자리나 생활공간도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의 대립을 아직 한국인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2) EUMC의 조사에서 유럽의 학생은 종족적 배제주의 점수가 낮고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한국과는 대조적이었다.

&lt;표 VI-5&gt; ‘인지된 위협’이 미치는 영향

|                          |        | 다문화 사회에<br>저항     | 다문화 사회의<br>한계 | 이주자<br>시민권        | 이주자<br>송환정책 |
|--------------------------|--------|-------------------|---------------|-------------------|-------------|
| 성별(참조: 남성)               |        | -.085*            | -.054         | .035              | .047        |
| 연령                       |        | .004              | .064          | .043              | .053        |
| 교육<br>(참조:<br>고졸)        | 중졸 이하  | .063 <sup>†</sup> | -.050         | .047              | -.031       |
|                          | 대졸 이상  | -.047             | .025          | -.068*            | -.019       |
| 직업<br>(참조:<br>사무<br>기술직) | 자영업    | .037              | -.024         | .042              | .020        |
|                          | 판매서비스  | .030              | -.041         | .030              | -.075*      |
|                          | 생산직    | -.048             | -.019         | .025              | -.006       |
|                          | 전문·관리직 | -.033             | .002          | .025              | .034        |
|                          | 전업주부   | .013              | -.068         | .067              | .014        |
|                          | 학생     | .029              | .034          | .044              | .035        |
|                          | 무직     | .009              | .002          | .055 <sup>†</sup> | -.002       |
| 기타(농업)                   |        | .095**            | -.004         | .069*             | .037        |
| 집합적 위협의 인지               |        | .087**            | .124***       | .224***           | .341***     |
| R <sup>2</sup>           |        | .038              | .011          | .083              | .124        |

\*\*\* p&lt;0.001

\*\* p&lt;0.01

\* p&lt;0.05

<sup>†</sup> p<0.1

그러나 ‘현실적 위협’이 아닌 ‘인지된 위협’의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종·타민족을 배제하고 경원시하는 부정적 태도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 <표 VI-5>에서 보듯이 외국인이나 이주자의 증대가 사회에 불이익과 위협을 줄 것이라는 태도 변인은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 요인들에 연령, 직업, 교육수준보다도 더 일관되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현실적으로 내국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저하시키는 ‘실질적 위협’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인지된 위협’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주나 외국인의 존재가 한국인의 일자리나 경제상황, 범죄율 등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나 외국인의 시민권 보장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근로기간이 끝나거나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주자들을 송환시키는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사회적 가치관과 종족적 배제주의

일반적으로 보수-진보 성향과 같은 가치관이 종족적 배제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관적 계층귀속의식, 진보-보수 성향, 성평등 의식, 단일민족 의식이 종족적 배제주의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였다. <표 VI-6>의 모델 1과 모델 6을 비교해보면, 성별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보다는 사회적 가치관 변인들이 응답자의 종족적 배제주의를 훨씬 더 많이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 0.159 > 0.075$ ).

진보-보수 성향은 북한에 대한 진보적 태도와 경제적인 진보성이 다소 구분되는 응답 유형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별도의 변인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진보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종족적 배제주의는 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일민족 의식이 낮은 사람일수록 마찬가지로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VI-6> 사회적 가치관이 종족적 배제주의에 미치는 영향

| 모델             | 1                            | 2                            | 3                  | 4                  | 5                  | 6                           |
|----------------|------------------------------|------------------------------|--------------------|--------------------|--------------------|-----------------------------|
| 성별             | -.095 <sup>†</sup><br>(.056) | -.098 <sup>†</sup><br>(.081) | -.076<br>(.057)    | .076<br>(.057)     | -.171**<br>(.060)  | -.132*<br>(.058)            |
| 연령             | .008**<br>(.003)             | .008**<br>(.003)             | -.008**<br>(.003)  | .007**<br>(.003)   | .005*<br>(.037)    | .004 <sup>†</sup><br>(.003) |
| 중졸 이하          | .313**<br>(.098)             | .305**<br>(.099)             | .277**<br>(.099)   | .291**<br>(.099)   | .279**<br>(.098)   | .255**<br>(.095)            |
| 대졸 이상          | -.260***<br>(.063)           | -.250***<br>(.064)           | -.233***<br>(.064) | -.230***<br>(.064) | -.229***<br>(.063) | -.205***<br>(.061)          |
| 주관적 계층 지위      |                              | -.019<br>(.022)              | -.021<br>(.022)    | -.027<br>(.022)    | -.023<br>(.022)    | -.029<br>(.021)             |
| 북한에 대한 진보성     |                              |                              | -.091***<br>(.029) | -.084**<br>(.029)  | -.085**<br>(.028)  | -.086**<br>(.027)           |
| 경제적 진보성        |                              |                              |                    | -.034**<br>(.013)  | -.033*<br>(.013)   | -.031*<br>(.012)            |
| 젠더평등성          |                              |                              |                    |                    | -.058***<br>(.013) | -.052***<br>(.012)          |
| 단일민족 의식        |                              |                              |                    |                    |                    | .245***<br>(.027)           |
| R <sup>2</sup> | .075                         | .071                         | .079               | .083               | .101               | .159                        |

\*\*\* p<0.001

\*\* p<0.01

\* p<0.05

<sup>†</sup> p<0.1

&lt;표 VI-7&gt; 사회적 가치관이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요소에 미치는 영향

|                | 다문화 저항                       | 다문화 한계                      | 이주자 시민권                     | 이주자 송환                      | 집합적 위협                       |
|----------------|------------------------------|-----------------------------|-----------------------------|-----------------------------|------------------------------|
| 성별             | -.209***<br>(.061)           | -.040<br>(.051)             | -.004<br>(.061)             | .081<br>(.062)              | -.100 <sup>†</sup><br>(.059) |
| 연령             | -.002<br>(.003)              | .002<br>(.002)              | .003<br>(.003)              | .005 <sup>†</sup><br>(.003) | .005 <sup>†</sup><br>(.003)  |
| 중졸 이하          | .201 <sup>†</sup><br>(.100)  | -.076<br>(.083)             | .233 <sup>†</sup><br>(.101) | -.020<br>(.102)             | .189 <sup>†</sup><br>(.097)  |
| 대졸 이상          | -.063<br>(.065)              | .030<br>(.054)              | -.181**<br>(.065)           | -.055<br>(.066)             | -.195**<br>(.062)            |
| 주관적 계층 지위      | -.038 <sup>†</sup><br>(.022) | .036 <sup>†</sup><br>(.018) | -.007<br>(.022)             | -.032<br>(.022)             | -.007<br>(.021)              |
| 북한에 대한 진보성     | -.107***<br>(.029)           | .018<br>(.024)              | -.017<br>(.029)             | -.096***<br>(.029)          | -.022<br>(.028)              |
| 경제적 진보성        | -.035**<br>(.013)            | .006<br>(.011)              | -.047***<br>(.013)          | -.017<br>(.013)             | -.001<br>(.012)              |
| 젠더평등성          | -.041**<br>(.013)            | -.006<br>(.011)             | -.034**<br>(.013)           | -.011<br>(.013)             | -.037**<br>(.012)            |
| 단일민족 의식        | .097***<br>(.028)            | .119***<br>(.024)           | .066 <sup>†</sup><br>(.028) | .109***<br>(.029)           | .263***<br>(.027)            |
| R <sup>2</sup> | .058                         | .021                        | .052                        | .033                        | .125                         |

\*\*\* p&lt;0.001

\*\* p&lt;0.01

\* p&lt;0.05

<sup>†</sup> p<0.1

종족적 배제주의의 다섯 가지 하위 차원에 대해서도 사회적 가치관은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진보적이고 성평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단일민족 의식이 약한 사람일수록 다문화 사회에 대해 뚜렷하게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정체성 이론’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종족적 배제주의에 가장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일민족 의식이였다. 단일민족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사회적 범주(social category)를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가 여부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포용 혹은 거부하는가 여부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진보-보수 성향이나 성평등 의식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도 종족적 배제주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연구에서 진보적인 정치성향의 사람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 관용

적이라는 사실은 밝혀져 있으나, 한국의 현실에서 흥미로운 것은 경제문제에 대한 진보성과 북한에 대한 진보성이 다소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성장보다는 분배를 지향하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주자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누구나 평등한 시민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진보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북한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주자에 대한 시민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이주자 송환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북한 동포나 탈북자(새터민)를 지원하는 태도는 한국으로 유입된 다른 소수 민족을 함께 포용해야 한다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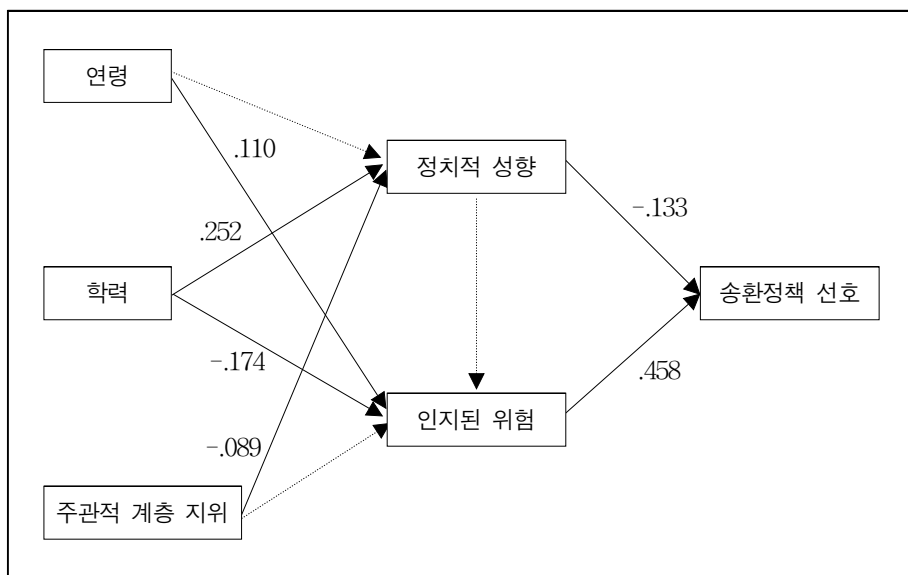
이상으로 한국인의 종족적 배제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 및 가치관 요인에 대해 분석을 해보았다. 이 절에서는 이 모든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부 항목 중 한국인에게서 가장 강한 배제적 태도가 나타나는 ‘송환정책 선호’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실제 현실에서 종족적 배제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서로 완전하게 독립적이라기보다 상호 연관되어 한 사람의 태도를 결정할 것이므로, 각각의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종족적 배제주의를 형성하게 하는지 탐구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경로분석을 사용하여 각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종족적 배제주의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변수로는 앞서 분석에서 가장 안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연령, 학력, 주관적 계층 지위를 포함하였다. 가치관 변인으로는 정치적 성향<sup>53)</sup> 및 인지된 위협을 사용하였다. 한편 개인의 정치적 성

53) ‘정치적 성향’ 변수는 경제적 문제 및 북한문제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종합하여 측정한 변수이다.



향은 그 사람이 이주민들을 얼마나 위협요소로 인지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관 변인에서는 정치적 성향과 인지된 위협 간의 인과관계도 설정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그림 VI-2>와 같다.



- 주 1) '정치적 성향'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임을 의미하고, '인지된 위협'은 점수가 높을수록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를, 실선은 인과관계를 설정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계수를 의미한다(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로 표기되었다).

<그림 VI-2> 송환정책 선호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이 가치관 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 보면 먼저 연령 변수는 인지된 위협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집합적 위협을 높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학력변수는 정치적 성향과 인지된 위협 모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이고 위협도 덜 느끼고 있다. 마지막 주관적 계층 지위 변수는 연령 변수와 반대로 정치적 성향에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신의 계층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치관 요인이 송환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성향과 인지된 위협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수를 통해 두 가지 요인의 효과를 비교해보면, 먼저 정치적 성향의 경우 (-)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진보적인 사람일수록 이주자의 송환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인지된 위협의 경우 (+)로 나타나, 이주자에 대해 위협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송환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회귀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계수의 크기를 보게 되면, 정치적 성향의 .133에 비해 인지된 위협의 계수는 .458로 크게 나타나, 한 사람의 일반적인 정치적 성향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이주민에 대한 위협인지가 더 그 사람의 송환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이 가치관 변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송환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sup>54)</sup>을 보면 학력이 -.112로 가장 높아, 연령 .052, 주관적 계층지위 .006보다 개인의 교육 수준이 가장 이주민 송환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개인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기제임을 생각해볼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다문화 지향적인 사고방식 및 태도를 습득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앞선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종족적 배제주의는 개인의 직업 및 소득수준과 같이 물질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경제적 지위보다 그 사람의 포괄적인 정치적 성향 및 소수자에 대한 관용도 등의 가치관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을 배양하는 매개체로써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다.

54) 경로분석에서 간접효과는 한 변수가 직접적으로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과는 달리 한 변수가 어떤 제 3의 변수를 거쳐서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위의 모형에서 학력변수가 송환정책 선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학력이 정치적 성향에 미치는 효과)×(정치적 성향이 송환정책 선호에 미치는 효과)+(학력이 인지적 위협에 미치는 효과)×(인지적 위협이 송환정책 선호에 미치는 효과)로 구해진다.

### 3. 국제비교 : EU와의 비교

이번 조사는 유럽에서 사용된 종족적 배제주의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원자료 수준에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조사결과와 통합하여 직접 비교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조사의 시점(유럽 자료는 2003년, 한국은 2007년)이 다르고 표본 규모에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문항의 내용 자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적용된 종족적 배제주의 10가지 중 6가지 요소가 이번 조사에 유사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응답의 추세를 서로 비교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비교는 요인의 구성이나 설문문의 문구 표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표 VI-8> 참조).

유사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찬성응답률과 평균값을 각각 비교해 보았다. 비교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은 종족적 배제주의의 수준이 EU 시민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주자의 송환정책 선호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인 점이 눈에 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다양성에 대한 저항,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반대 등이 EU 시민보다 낮은 것은 한국인들이 인종·민족 문제에 대해 유럽인들보다 관용적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지만, 사실 이주자의 증대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문제나 사회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다는 현실적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이주자 시민권 반대, 집합적 위협의 인지 항목에서는 유럽인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인종·문화·종교적 다양성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양성에 대한 저항’은 한국인들이 유럽인보다 확연히 낮은 수준인데, 한국 조사에 포함된 문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과는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럽인들은 소수민족이 사회 전체의 법과 관습을 받아들여 동화 또는 순

응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이주자나 소수민족의 고유한 전통이나 풍습을 유지하는 데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의 배후에는 아마도 이른바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 즉 해외 각국에 흩어져 사는 한인들이 한국어와 한국 풍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감이가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 정주외국인이 아직 소수이기 때문에 한국과 소수민족의 전통이 충돌하는 경험의 많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표 VI-8> 비교대상 설문문항 대조표 : EU - 한국(본 조사)

| 요인            | EU  | 한국 (본 조사)                                    | source              |
|---------------|---|--|---------------------|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 It is a good thing for any society to be made up of people from different races, religions or cultures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 Euro barometer 2003 |
|               | (Country's) diversity in terms of race, religion or culture adds to its strength.   |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                     |
| 다문화 사회의 한계    | There is a limit to how many people of other races, religions or cultures a society can accept.                                       |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
|               | (Our country) has reached its limits; if there were to be more people belonging to these minority groups we would have problems.      |  |                     |
| 이주자의 시민권 반대   | Legally established immigrants from outside the EU should have the same social rights as the (nationality) citizens.                  |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
|               | Legally established immigrants from outside the EU should have the right to bring members of their immediate family in (Our country). |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족을 데려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
|               | Legally established immigrants from outside the EU should be able to become naturalised easily  |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                     |
| 이주자 송환 정책 선호  | Legally established immigrants (from outside EU) should be sent back to their country of origin if they are unemployed.               |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                     |

(계 속)

&lt;표 VI-8&gt; 비교대상 설문문항 비교표 : EU - 한국(본 조사) (계속)

| 요인                     | EU  | 한국 (본 조사)  | source                      |
|------------------------|---|--|-----------------------------|
| 이주자<br>송환<br>정책<br>선호  | Legally established immigrants (from outside EU) should all be sent back to their country of origin   |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은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sup>55)</sup> *                 | Euro barometer 2003         |
| 다양성<br>에 대한<br>저항      | It is better for a country if almost everyone share customs and traditions.<br>It is better for a country if there is a variety of different religions. | (유사문항)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과는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 European Social Survey 2003 |
| 위협에<br>대한<br>집합적<br>인지 | Do immigrants take jobs away in (Country) or create new jobs  |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                             |
|                        | Taxes and services: do immigrants take out more than they put in  |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                             |
|                        | Is immigration bad or good for (Country's) economy  |  |                             |
|                        | Is the (Country's) cultural life undermined or enriched by immigrants   |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                               |                             |
|                        | Do immigrants make (Country) worse or better place to live  | 없음   |                             |
|                        | Do immigrants make (Country's) crime problems worse or better   |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                             |

55)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질문한 것은 합법 이주자(legally established immigrants)의 송환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은 EU의 설문 문항과 차이가 있다. 상세한 설명은 163쪽 각주 58번 참조.

&lt;표 VI-9&gt; 한국과 EU - 조사결과 비교

| data source          | dimension     | 응답률(%) <sup>56)</sup> |           | 평균(mean) |           |
|----------------------|---------------|-----------------------|-----------|----------|-----------|
|                      |               | EU <sup>57)</sup>     | 한국 (2007) | EU       | 한국 (2007) |
| Eurobarometer (2003)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 25.2                  | 11.2      | .366a)   | .3545c)   |
|                      | 다문화 사회의 한계    | 59.9                  | 48.4      | .702a)   | .5991c)   |
|                      | 이주자의 시민권 반대   | 38.7                  | 15.3      | .409b)   | .3540c)   |
|                      | 이주자 송환정책 선호   | 22.1                  | 55.6      | .352b)   | .6394c)   |
| ESS (2003)           | 이주자에 대한 저항    | 50.47                 | -         | .505b)   | -         |
|                      | 난민에 대한 저항     | 29.01                 | -         | .440b)   | -         |
|                      | 다양성에 대한 저항    | 47.69                 | 18.5      | .554c)   | .3751c)   |
|                      | 인종적 거리 선호     | 20.59                 | -         | .296c)   | -         |
|                      | 범죄자 송환정책 선호   | 69.54                 | -         | .695c)   | -         |
|                      | 위협에 대한 집합적 인지 | 58.17                 | 28.9      | .554c)   | .4766c)   |

a) 3점 척도로 조사, 0~1사이의 값으로 recode 함.

b) 4점 척도로 조사, 0~1사이의 값으로 recode 함.

c) 5점 척도로 조사, 0~1사이의 값으로 recode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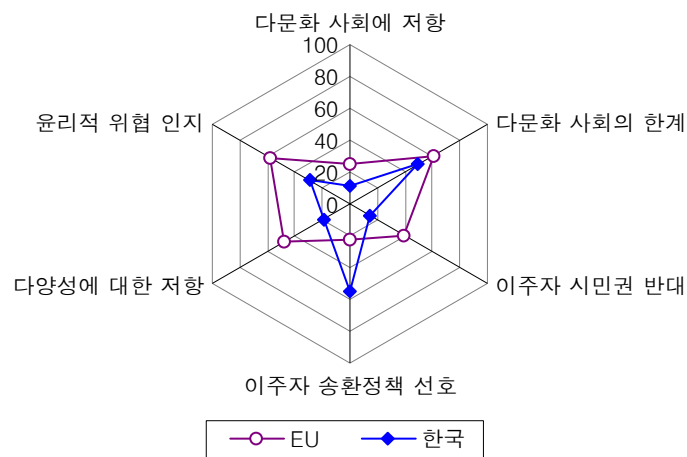
이러한 전반적인 관용성과는 달리 외국인 송환정책에 있어 한국인들의 태도는 유럽인보다 훨씬 단호하고 강경해 보인다.<sup>58)</sup> 정주 외국인이나 귀화자의 비중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이주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달리 표현하면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한국인의 관용성은 이들이 한국에 정주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후 돌아갈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종족적 배제

56) 여기에서 응답률은 종족적 배제주의를 지지하는 응답률을 의미하며,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적 응답을 배제한 지지 응답률을 합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EUMC(2005)의 분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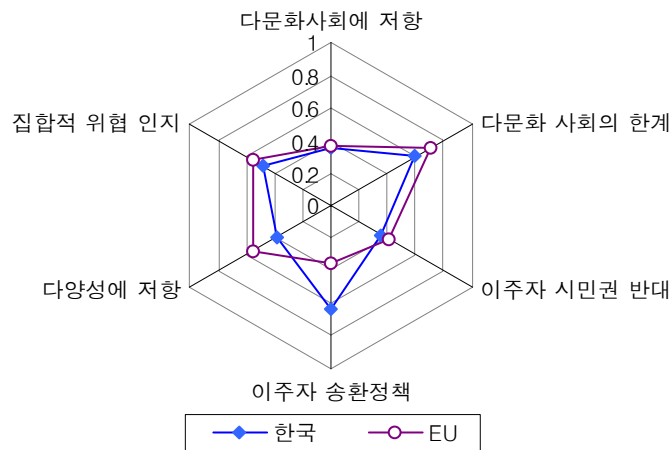
57) EU 평균은 조사대상 국가별 인구 크기나 표본 크기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에 동일한 비중을 두어 계산한 평균값임.

58) 이주자 송환정책에 대한 이번 조사의 문항은 두 가지, 즉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간 종료 후 본국 송환(찬성응답, 58.1%) 그리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즉각 송환(찬성응답 53.1%)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은 EU의 문항(합법적 이주자의 송환문제)과 내용이 달라 설문 문항의 표현 차이가 한국의 부정적 응답률을 더 높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한국 조사에 포함된 두 문항 중 '합법적' 근로자보다 '불법 근로자'의 본국송환에 대한 찬성률이 오히려 더 낮았다. 따라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라는 표현 자체가 송환정책 찬성 응답을 더 높인 것은 아니다.

주의가 아직 잠재된 형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이주민들로 인한 사회적 위협이 사회문제로 부각된다면 종족적 배제주의가 한국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VI-3> 한국-EU 비교(응답률 기준)



<그림 VI-4> 한국-EU 비교(평균값 기준)

#### 4. 소결

국경을 넘는 인간과 자본의 이동이 더욱 빈번해지는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앞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일반적 경향인 것은 분명하다 하더라도, 역사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문화 사회의 모습 그 자체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제발전의 수준, 식민/피식민 경험, 종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인종·민족 간 갈등이 형성되는 과정, 그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방향은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보는 한국인의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지만, 조사 결과 나타난 통계적 수치는 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종족적 배제주의 태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2.8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립적인 입장(3점)에서 ‘약간 반대’(2점) 쪽으로 다소 기울어 있는 수치이다. 즉 한국인들은 종족적 배제주의에 그다지 동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종족적 배제주의 수준이 낮아졌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종사자, 무직자들이 상대적으로 배제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학생층이 예상과는 달리 다른 인종·민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주목된다. 가구 소득 수준은 종족적 배제주의에 큰 영향이 없었으나 대체로 중간소득 계층이 가장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인구·경제적 요인보다 종족적 배제주의에 훨씬 더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은 응답자들의 가치관이었다. 단일민족 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인종·민족을 배제하는 태도가 강해지는 반면, 북한에 대해 개방적이고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응답자일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종족적 배제주의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현실경쟁이론보다는 사회정체성 이론에 의해 한국인의 종족적 배제주의 태도를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보여준다. 우선 한국인들은



일터나 생활공간에서 다른 인종·민족 출신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거나 갈등을 겪은 경험이 많지 않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은 아직 소수이고 집단적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2세대 3세대가 정주하는 외국의 소수민족 문제와 같은 갈등을 한국인들은 체감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인과의 접촉이나 갈등 경험이 아니라, 개인이 내면화하고 있는 평소의 가치관이 종족적 배제주의에 대한 응답에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로부터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라는 낙관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이다. 아직까지는 잠재되어 있는 외국인 이주자와의 갈등이 표면화될 경우 관용적 태도가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외국인 이주자의 증대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종족적 배제주의가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인지된 위협’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다문화 사회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앞으로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드러나고 쟁점화 될 경우 관용적 태도가 계속 지속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EU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한국인들은 종족적 배제주의와 그 하위 요인에서 대체로 유럽인들과 비슷하거나 보다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유독 이주자의 송환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민의 역사가 긴 유럽에서는 인종과 민족이 다르다 해도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의 정주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공존·공생하는 것을 여전히 낯설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인에 비해 한국인들이 매우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 항목은 소수민족이 고유한 관습과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소수민족의 관습을 존중해주는 태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지만, 달리 보면 민족적인 차이를 결코 해소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도 된다. 이런 태도는 민족이나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누구나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공화주의적 사고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난 한국인들의 관용성은 경험과 토론을 통해 사회적

으로 정착된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아직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 문제에 대한 ‘일반적 선의(善意)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선의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관용성과 시민의식으로 정착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볼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VII

결론 및 정책제언

|                                 |     |
|---------------------------------|-----|
| 1. 분석 결과 : 다민족·다문화<br>지향성의 다차원성 | 171 |
| 2. 정책 제언                        | 178 |

## 1. 분석 결과 :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의 다차원성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다민족 지향성’이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임을 전제하고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거리와 감성적 의미론, 국민정체성과 시티즌십, 문화 다양성과 외국에 대한 관심, 종족적 배제주의의 틀에 따라 각각 진행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인은 미국을 가장 가깝게 여기며 그 다음으로 새터민, 조선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아시아인과 몽골인을 가장 멀게 느끼고 있다. 호감도의 차원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조선족과 새터민의 순서였다. 호감도 면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의외로 중국이었다. 또한 외국인을 이웃, 동료, 친구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관대하지만 ‘국민’이나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대함이 급속히 줄어든다. 나이가 젊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요건’ 즉 국민정체성은 전적으로 혈통이나 민족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니며, 혈통적 요인보다는 정치-법적 요인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외국인 이주자 자녀의 국적취득(속지주의)에 찬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본국 송환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혈통중심보다는 공화주의적인 국민정체성에 동조하고 다양한 인종·민족 출신자를 시민(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데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새터민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가 더 배타적인 응답을 하기도 하였다.

셋째, 문화 다양성과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관심은 더욱 확대되는 추

세이며 특히 젊은 세대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미국·일본과 같은 일부 선진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한국으로 유입된 아시아 개도국 출신의 이주자와 연결된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세계화의 추세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데 필요한 문화 자본의 형성, 즉 선진국 언어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런 점에서 로컬 다문화주의(local interculturalism)보다는 글로벌 다문화주의(global interculturalism)에 경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다문화 사회의 가치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종족적 배제주의’ 개념에 입각하여 측정해본 결과, 한국인은 대체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나타내었다.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종·타민족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종사자, 무직자 등이 상대적으로 배제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전문직이나 사무직은 좀 더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유럽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보다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찬성함에 있어서는 한국인들이 더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의 관용적 태도를 확인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따라서 소수민족 문제로 인한 갈등이 부각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 분야의 연구 결과가 반드시 일관된 것은 아니며, 이를 교차시켜보면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된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하나의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보다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의 다차원성을 드러내고 해석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 1)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 제도적 변화의 수용, 정서적 변화의 지체

이주자를 위한 법적 지원, 이주자의 시민권 및 노동권 인정 등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매우 높았으며, 국민정체성에 있어서도 혈통적 요인보다 법적 제도적 요인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종족적 배제주의에 대한 응답에서도 이미 다민족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유럽인보다 한국인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그에 수반하는 법과 제도의 변화를 한국인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차원을 드러내는 사회적 거리 분석에서는 외국의 조사결과에 비교해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거리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9)</sup> 특히 외국인을 이웃이나 친구, 동료로는 흔쾌히 수용하면서도 이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훨씬 더 완고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 즉 이주자에 대해 관용적이면서도 외국인에게 거리감을 많이 느낀다는 분석 결과들은 일견 상호 모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법적 제도적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외국인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은 여전히 지속되는 양상은 사실 한국인에게 그리 낯선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인들은 산업화, 도시화를 서구사회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른바 ‘문화 지체(cultural lag)’ 현상, 즉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산업사회의 가치와 규범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이제 탈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어 저출산·고령화, 이주의 증대 등 새로운 차원의 사회변동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급속한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의 변화에 대체로 순응하여 왔으며, 다문화 사회에 수반되는 정책 지원이나 이주자의 시민권 보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서적 차원에서는 이처럼 급속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59)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 분석은 미국의 자료와 비교하였고, 종족적 배제주의는 유럽과 비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격적인 국제 비교분석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법적 제도적 변화를 별다른 거부감 없이 수용하면서도, 개인의 정서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거리감과 거부감이 남아있는 새로운 ‘문화지체’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러한 정책이 토대하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지체 현상은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의 막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세대별 차이 - 다문화 수용의 불균형성

한국의 대다수 사회조사 분석에서 연령이나 세대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문화 다양성이나 이주에 대한 태도에서 세대별 응답경향의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젊은 세대가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외국문화, 이주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이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20대, 30대의 젊은 연령층은 문화 다양성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서도 연령이 젊을수록 거리감을 덜 느끼며, 외국인 귀화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가 더 수용적이다. 시티즌십 분석에서는 이주자의 기본권 보장 및 투표권 인정에 대해 젊은 세대가 더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시티즌십에 대한 자유주의적 태도와 결부된 관용성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외국 및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 역시 젊은 세대가 훨씬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성과 다양성의 수용이 모든 분야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20, 30대 연령층의 응답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는 적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가 4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소수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즉 새터민 청소년의 대학입학 우대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도 가장 높았다. 기성세대는 새터민이나 조선족, 즉 조상을 같이하는 동포들을 외국인에 비해 더 가깝게 느끼는 반면, 청년 세대들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도 20, 30대는 50대 이상 응답자에 비해 혈통적 요소보다 법-정치적 요소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특징은 두 갈래로 해석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젊은 세대가 다문화 사회에 대해 더 개방적이며 외국의 다양한 문화와 외국인과의 공존을 수용하는데 더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반면 같은 민족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향후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형성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의 차별적 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젊은 세대는 다양한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특정 문화, 특히 선진국 문화에 관심이 치우쳐 있으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서구중심·백인중심주의적 질서를 따라가는 추세를 보인다. 젊은 세대가 세계화의 주역임을 생각한다면, 세계화를 지나치게 서구중심적 태도에서 바라보거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빈국을 함께 조망하는 넓은 시각과 균형 감각이 결핍되어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 될 젊은 세대들에게 다문화 시민의식, 문화 다양성에 대한 균형잡힌 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은 문화 다양성이나 개방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통중심의 민족 정체성을 고수하고 또 외국인 이주자를 사회적 위협 요소로 바라보는 경향도 뚜렷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년층 및 고령층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타민족 타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 경험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은퇴 이후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다문화 이해와 관련된 민간차원의 교류활동은 노년기 자원 활동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일



본의 경우 은퇴 이후 여유시간이 있는 장년 및 노년층들이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이주민 대상 일본어 교육에 자원봉사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sup>60)</sup>

### 3) 이주에 대한 관용성과 계층적 차이

이번 조사결과 교육수준과 직업은 이주자를 관용적으로 바라보고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고 중상 수준의 가구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문직·자유직 종사자, 화이트칼라층들이 문화다양성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런 경향은 외국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결과나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나타난 부분도 있는데, 생산직 종사자들이 의외로 이주자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학생들은 오히려 배타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구소득이 많은 최상층은 중산층에 비해 오히려 더 배타적인 응답을 하였다. 한국에서 이주 문제를 바라보는 여론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계층지위에 따라 일관된 응답경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이주자나 이주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유럽인들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1)</sup> 그러나 이러한 ‘관용성’

60) 이러한 사례는 본 연구자가 2007년 9월 일본 현지방문을 통해 수집한 것이다. 도쿄 신주쿠구,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다문화 관련 정책담당자들을 면담하였는데, 장년층 및 노년층이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일본어 교육 강사,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자로 적극 참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다문화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들이 장년 및 노년층에 치우쳐 있어 이들의 ‘세대교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61)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인은 이민에 대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인이 외국인 이민에 대해 가장 우호적이라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퓨(Pew) 리서치 센터가 4일 발표한 ‘국가별 세계화 수용 태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는 ‘외국인 이민을 지금보다 더 제한하고 통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25%만 “그렇다”고 답해 47개 조사 대상국 중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낮았다. 한국인의 외국인 이민에 대한 거부감은 이 연구소의 지난 2002년 조사(37%)에 비해 서도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국가로는

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와 의식의 형성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연구들은 생활공간에서 외국인 이주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집단, 즉 교육수준이 낮은 생산직·서비스직 종사자나 실업자들이 이주자에 대해 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경쟁 상대 내지 한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할 집단으로 보는 태도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주자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국인 이주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수준, 작업장 수준의 의식 개선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외국인이나 이주자가 사회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문화다양성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주자와 접촉하거나 이주자로 인해 손해를 본 경험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고정관념에 의해 배타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하겠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편견으로 고착될 수도 있다. 한국 사회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면, 근거 없는 고정관념이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접촉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제도개선 못지않게, 다양성을 수용하고 관용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이탈리아(87%), 스페인(77%), 미국(75%), 영국(75%) 등 서구 선진국과 인도네시아(89%), 말레이시아(89%), 남아프리카공화국(88%), 인도(84%) 등 개발도상국이 꼽혔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47%), 중국(52%) 등 동아시아 국가는 대체로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007. 10. 6. 보도 [www.chosun.com](http://www.chosun.com))

## 2. 정책 제언

본 연구는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를 폭넓게 조사하는 작업으로써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전반적 정책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언 및 참고할 만한 외국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 1) 정책 방향 : 포괄적 ‘다문화 사회정책’ 개념의 도입

한국사회 특징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시민과 혈통적 민족을 오랫동안 동일시 해온 한국인의 가치관은 더 이상 견고하게 지속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민족·인종적 배경을 지닌 시민들로 구성된 새로운 사회상이 서서히 등장할 것이다. 그런데 이주민과의 접촉이나 다문화 지향적 가치관의 확산이 우리 사회 전체에서 균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체감도는 교육수준이나 세대, 계층적 지위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이나 다른 한편 이주 정책이나 다른 사회정책에 대한 여론의 분열과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법과 제도는 최근까지 이민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배제주의’에 머물러 있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보다 포괄적인 ‘외국인 정책’ 또는 ‘이민 정책’으로 수렴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고찰하였듯이 이주민의 증대는 단지 인종·민족이 다른 외국인의 입국에 그치지 않으며, 한인 재외동포의 귀환과 권리 인정, 새터민 증대와 향후 예상되는 북한 주민의 이동, 국제결혼의 증대로 인한 혼혈 한국시민의 자연적 증가, 외국인 노동자의 사실상 정주화 경향에 따라 이주 2세대 내지 3세대의 등장 등 매우 폭넓은 파급효과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사회정책 안에 다양성 내지 다문화의 가치를 흡수하여 포괄적인 ‘다문화 사회정책’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정 외국인, 특정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수립을 넘어서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에 적합한 사회정책의 새로운 원리를 확립하는 과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다문화 사회정책은 다원적 민주주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차원에서, 달리 표현하면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와 결합된 ‘심의 다문화주의’(김남국 2005b)의 원칙을 실현하는 정책으로서 설계되어야 한다. 외국인 이주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보다 성숙된 사회통합의 원칙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다른 소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직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재외 교포 및 외국인 이주자의 투표권 자격, 이주자의 사회복지 수급권, 이주자 지원에 대한 특혜 논란, 이중국적 허용문제 등 이주를 먼저 경험한 국가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주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포괄적인 정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사회정책에서는 무엇보다도 ‘참여적 문화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인들은 외국인이나 이주자에 대해 비교적 사회적 거리를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일정한 거리감을 전제한 가운데 이들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은 영어권 등 선진국에 쏠려 있으며, 아시아 지역이나 이주민들의 출신국 문화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이(異)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용에서 불균형과 편향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세대나 교육수준별로 관심의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자나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일종의 문화적 장벽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갖게 한다. 더욱이 같은 한민족이라 해도 성장지역에 따라 문화적 배경이 다르며 이에 따른 차등 의식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커다란 난제로 등장할 것이라 예상된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인지적 차원에 아니라 정서적 차원의 접촉을 필요로 하며, 일단 다른 문화를 접하는 체험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채널의 문화 교류, 특히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 기회를 늘리고, 접촉하는 외국 문화의 범위를 지금보다 다양화·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주자와 한국인이 생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경험을 통해 다양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집단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접촉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사회정책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맞물릴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중앙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현실에 근거하여 새로운 변용과 확대를 시도하며,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각종 네트워크를 활발히 증식시키는 흐름들이 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아동기부터 다양한 통로를 통해 다문화 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시민의식의 고양 없이는 기대할 수 없으며,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민들이 공유해온 가치와 신념을 성찰하고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다문화 시민의 덕목(multicultural civic-virtue)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야 한다. 체계적인 다문화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다문화 사회정책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NGO와 NPO의 양성,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문화 리더십의 강화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2) 정책 제언

### 가. 사회교육에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확대

한국의 현실에 맞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다양한 수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등 일부 단체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외국어나 외국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확장도 필요

하지만 최근의 이주 증대를 고려할 때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사양성, 각급 프로그램에서의 운영 지원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다문화 이해교육이 필요한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50대 이상의 장년 및 노년층들이 다양한 문화에 더 많이 접하면서 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 20-30대의 젊은 층들에게는 서구 편향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세계화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해외 한인들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이해 교육은 공적 지원과 민간의 참여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전문가, NGO와 시민단체 등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특히 외국인 이주자 관련 단체와 연계함으로써 이주자들이 직접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 이해교육은 시민교육, 시민사회의 성숙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 나. 학교 교과과정에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젊은 세대들은 이주의 증대와 다양한 문화의 확산에 대해 개방적 태도와 배타적인 태도를 동시에 갖고 있다. 젊은 세대는 선진국의 대중문화, 취업에 유리한 외국어 습득, 외국 여행이나 연수 등에 관심이 많지만 실제 세계화의 다양한 측면과 사회적 가치로서의 다양성과 관용성의 중요성 등을 깊이 있게 인식할 기회는 의외로 적다. 이들은 ‘소비자’의 시각에서 다양한 외국문화를 접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비자로서의 체험이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성의 함양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다민족·다문화 시대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에게 균형잡힌 국제감각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교육하는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일차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안으로 다문화 이해과정이 흡수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학교장 재량학습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등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도입하고

담당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으로의 수학여행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때에도 다문화 이해교육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과과정에 다문화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며 사회, 도덕, 역사, 외국어 등 관련 교과서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다루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다문화 이해교육은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유아교육부터 초·중등학교,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인권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한 예로써 일본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에서는 초등 및 중등학교의 국제 이해 교육에 외국인 자원활동 단체인 KfV(Kawasaki Foreigner Volunteer)의 회원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외국인으로부터 그 나라 문화를 직접 설명들을 수 있는 생생한 체험의 기회가 되며, 외국인들은 단지 정책적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의 현장성과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민족·인종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sup>62)</sup>

#### 다. 지역사회의 자원활동 확대 및 지자체의 네트워크 활성화

이주민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지역사회이며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다문화 이해를 넓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이주자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어

62) 가와사키시의 사례는 본 연구진이 2007년 7월 일본 가와사키시를 방문하여 KfV의 김희숙 이사장과 인터뷰한 내용임. KfV는 가와사키시 외국인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2002년 2월 창립되었으며 현재 회원은 약 130명에 이룸. 단체의 주요 활동은 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족문화 만남사업”(위탁사업)이며, 주로 초·중등학교 교재에 수록된 외국 관련 내용과 연관하여 각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국제이해 교육 담당 강사로 참여하고 있음. 교육을 담당하는 외국인은 주로 고향력자이며 일본 거주기간이 길고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이어야 가능하다고 함.

교육이나 사회적인 지원 활동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재정 지원 및 공간, 프로그램 기획과 같은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이나 도우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주자 지원 정책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방식은 단지 정책의 비용절감이나 실효성 제고 뿐 아니라, 이주자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풀뿌리 수준으로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의 여성 및 노년층들에게 보람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이나 이주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외국의 정책 사례로서 일본의 동경도 신주쿠구를 소개하면, 신주쿠구는 전체 구민 중 외국인이 약 10%(3만 여명)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외국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은 민관 협력으로 운영되며 특히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자녀교육을 마친 중장년 여성, 정년퇴직한 남성층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신주쿠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sup>63)</sup>

63) 본 연구진이 2007년 7월 신주쿠 다문화공생플라자를 방문하여 후미코 야나기다 과장과 인터뷰한 내용임. 야나기다 과장에 따르면, 신주쿠구 내 모두 8곳에 일본어 교실이 운영 중인데 이중 4곳은 다문화공생플라자에서 관리하며 나머지 4곳은 자원활동가들이 운영하고 있음. 자원활동가들이 운영하는 일본어 교실은 주로 공공 시설(초등학교, 공공센터)을 이용하여 월 8회에 1,000엔 미만의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됨. 초/중급 등 다양한 레벨에 따라 수업이 운영되며, 직장인을 위한 일과 후 클래스도 운영됨. 최근에는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일본어 교실도 운영되고 있음. 자원활동가는 특별한 조건 없이 희망자를 모집하여 10-20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자원활동가들이 점차 노령화되고 있어 플라자에서는 젊은 층을 자원활동으로 끌어들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함. 교사 양성과정에서는 일본어 교육을 위한 skill 뿐 아니라 외국인 이주자와 교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개방적인 시각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



### 라.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대한 의식조사의 지표화 및 연구 활성화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우선 통계청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사회의식조사 등의 조사 항목에 다민족·다문화 사회와 관련한 항목을 추가하여 정기적으로 국민의식의 변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초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연구와 심층 분석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비교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외국의 조사와 연계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주민에 대한 태도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한 사회의 인구 구성이나 역사적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에 맞는 ‘다민족·다문화 지향성’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주와 이주자 지원에 대한 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국민의 태도와 여론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이주자 지원정책이 각 부처에서 확산되는 것은 일견 바람직해 보이지만, 실제 이주자의 정책 수요와 한국인들의 이주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형적인 정책의 도입과 제도 개선을 서두르는 것 못지않게, 한국인들의 인식과 수요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의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조사와 연구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유진. 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4권 2호. 61-80쪽.
- 강휘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제 20권 2호. 24쪽.
- 구건서. 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90호. 29-53쪽.
- 권숙인. 2005. “일본사회의 변화와 민족문제의 새로운 전개”. 김광익 외.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251-284쪽.
- 김광익. 2005. “종족(Ethnicity)의 현대적 발명과 실천”. 김광익 외.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15-84쪽.
- 김남국. 2005b. “심의 다문화주의 -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한국정치학회보』 제 39집 1호. 87-107쪽.
- \_\_\_\_\_. 2005a. “다문화 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한국정치논총』. 제 45집 4호. 97-121쪽.
- 김민정 외.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 39권 1호. 159-193쪽.
-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호. 169-206쪽.
- 김세균 외. 2006. 『유럽의 제노포비아』. 문학과학사.
- 김수행. 2006. “영국의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연구”. 김세균 외. 『유럽의 제노포비아』. 문학과학사. 37-88쪽.
- 김숙자. 1998. “한국 남성과 중국 조선족 여성과의涉外혼인 실태와 그 대책.” 『가족법 연구』 제 12권. 93-137쪽.
- 김이선.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여성개발연구원.
- 김재은. 2004. “한국인의 긍지와 정체성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인의 가치지향: 국제비교 심포지움 자료집』. 57-77쪽.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여름호(제 70호). 10-37쪽.
- 김현선. 2006. “국민, 半국민, 非국민- 한국 국민형성의 원리와 과정”. 『사회연구』 12호. 77-106쪽.

- 김혜숙. 2002. “대학생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사람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에 대한 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제 16권. 35-50쪽.
-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2002. 원전 1997.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한울아카데미.
- 문영석. 2005. “캐나다 이민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 14권 1호. 79-108쪽.
- 박명규. 2004. “한인 디아스포라론의 사회학적 함의”, 최 협 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 박병섭. 2006 “다문화적 소수자 문제에서 한국의 특수성”. 『사회와 철학』 제12호. 99-126쪽.
- 박수미, 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 70호. 5-25쪽.
- 박영태. 2004. “한국사회에서 화교들이 느끼는 차별의 수준”, 최 협 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 설동훈. 2005. “다문화 사회에서의 조화와 공존”. 『국제인적교류 지원을 위한 세미나 발표문』. 법무부. (2005. 5. 25)
- . 2006. “국민 민족 인증: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용역과제 보고서.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미래인력연구원. 보건복지부 용역연구 보고서.
- 설동훈·정태석. 2002.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사상』 54호. 28-52쪽.
- 스미스, 데니스(Dennis Smith). 1994. 문현아 역. 『역사사회학 이론』. 학문과 사상.
- 앤더슨. 1996. 초판 1991. 윤형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사회비평사.
- 양현아. 2007. “1987년 이후 가족법의 변화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법과 사회』 32호. 103-136쪽.
- 엄한진. 2006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한국사회학회. 『동북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45-73쪽.
- 윤인진. 2003. 『코리아 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 윤인진·김상학. 2003.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학생 의식조사”. 『경제와 사회』 58호. 222-248쪽.
- 윤형숙. 2004a.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 김성국 · 정근식 · 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321-349쪽.
- \_\_\_\_\_. 2004b.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움 발표 논문.
- 이복남. 2004. “EU 확대와 시민권의 문화 정책적 실현.” 『유럽연구』 제 19권. 198-225쪽.
- 이용승. 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 연구』 제8권. 177-205쪽.
- 이용일. 2007. “이민과 다문화 사회로의 도전 - 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과 한국적 함의.” 『서양사론』 92호. 219-254쪽
- 이진숙. 2005. “사회통합과 외국인 가족복지정책 - 독일 사민당 정부 하에서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 57권 2호. 231-252쪽.
- 이혜경. 2004. “한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 27권 2호. 121, 153쪽.
- \_\_\_\_\_.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제 28권 1호. 73-100쪽.
- \_\_\_\_\_. 2007. “결혼이민여성과 함께 하는 다문화 사회 조성”, 『차기정부 여성 · 가족정책 10대 과제』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혜경 외. 2002.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식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36권 3호. 47-77쪽.
- 이혜경 외.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40집 5호. 258-298쪽.
- 임종현. 2006. “유럽의 제노포비아 현상: 현황과 유럽연합(EU)의 초국가적 대응”. 김세균 외. 『유럽의 제노포비아』, 문화과학사. 195-231쪽.
- 장태한. 2001. “한국 대학생의 인종 · 민족 선호도에 관하여.” 『당대비평』 14호. 99-113쪽.
- \_\_\_\_\_. 2002. “미국의 인종차별과 대외정책.” 『역사비평』 봄호(통권 58호). 322-334쪽.
- 전영평. 2006. “한국의 소수자 문제와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행정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한국행정학회 동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635-647쪽.
- 정기선. 1996. “국내 외국인 취업자의 사회심리적 적응.” 한국사회학회 1999년

-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 논문. 201-205쪽.
- \_\_\_\_\_. 2004.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국제비교: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불평등지각, 노동지향, 가족가치: 국제사회조사(ISSP)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이용한 국제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학술진흥재단.
- 조기제. 2002. “다문화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 - 심의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 『초등도덕교육』 제 10권. 95-108쪽.
- 최 현. 2005. “한일 시티즌십 비교- 시민의 공적영역 지향성과 능동성을 중심으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심포지엄.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 \_\_\_\_\_. 2006. “한국 시티즌십(Citizenship): 1987년 이후 시민권 제도의 변화와 시민의식”. 『민주주의와 인권』 제 6권 1호. 171-205쪽.
- 최 협 외. 2004.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 터너, 브라이언(Bryan S. Turner). 1997. 『시민권과 자본주의』. 서용석·박철현 역. 일신사.
- 피어슨, 크리스토퍼(Christopher Pierson). 1998. 『근대국가의 이해』. 박형신·이택면 역. 일신사.
- 한국사회학회. 2006.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 위원회용역 과제 보고서.
- 한영혜. 2006. “일본의 다문화공생 담론과 아이덴티티 재구축.” 『사회와 역사』 제 71권. 155-184쪽.
- Babbie, Earl R. 2006.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11 edition: Wadsworth Publishing.
- Banton, Michael. 1996. “The Cultural Determinants of Xenophobia”. *Anthropology Today* 12(2): 8-12.
- Blanc Christina S., Basch, Linda and Schiller, Nina G. 1995. “Transnationalism, Nation-States, and Culture”. *Current Anthropology* 36(4): 683-686.
- Brown, David. 2000, *Contemporary Nationalism: Civic, ethnocultural and multicultural politics*, London: Routledge.
- Brubaker, Rogers. 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gger, Bill, and Stephen Reglar. 1994.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in*

- Contempora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ashdan, Elizabeth. 2001. "Ethnocentrism and Xenophobia: A Cross-Cultural Study". *Current Anthropology* 42(5): 760-765.
- Castle, S. & Miller, M. J. 2003, *The Age of Migration* (Third Edition), New York & London: The Guilford Press.
- Choe, Hyun. 2003. "National Identity and Citizenship in China and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Christie, Clive J. 1998. *Race and Nation: A Reader, Tauris History Readers*. New York: St. Martin's Press.
- Coser, Lewis A. 1977. *Masters of Sociological Thought: Ideas in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Second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Edmunds. June, 2006, "Migration studies: New directions?", *Ethnicities* vol. 6 (4): 555-564, Sage.
- EUMC. 2005. *Majorities' Attitude toward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
- Gans, H. J. 1979. "Symbolic Ethnicities: The Future of Ethnic Groups and Cultures in America", *Ethnic and Racial Studies*, 2 (1), January: 1-20.
- Heise, D. R. 2001. "Project Magellan: Collecting Cross-cultural Affective Meanings Via The Internet." *Electric Journal of Sociology* 5 (3).
- \_\_\_\_\_. 2002. "Understanding social interaction with Affect Control Theory" Chapter 2, Joseph Berger and Morris Zelditch(eds.), *New Directions in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2002*. Boulder CO: Rowman and Littlefield.
- Hyerm, Mikael. 2005, "What the Future May Bring: Xenophobia among Swedish Adolescents", *Acta Sociologica*. Vol. 48 (4): 292-307.
- Jones, F. L. and Philip Smith. 2001, "Individual and Societal Bases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 (2): 103-118.
- Kemper, T. David and Randall Collins. 1990. "Dimensions of Microinter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 32-68.

- Kim, Doo-Sub. 2007. "The Rise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Divorce in Contemporary Korea." *Population and Society* Vol. 3(1): 1-37.
- Kleg, M and Yamamota, K. 1998. "As the World Turns: Ethno-Racial Distances after 70 Years." *Social Science Journal* 35: 183-190.
- Klusmeyer, Douglas. 2001. "Introduction." In *Citizenship Today: Global Perspectives and Practices*, edited by T. A. Aleinikoff and D. B. Klusmeyer.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Kymlicka W. & Wayne N.(eds). 2000. *Citizenship in Diverse Socie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Political Theory. Oxford, New York: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2n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Multicultural States and Intercultural Citizens",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Vol. 1 (2) : 147-169, Sage.
- Kymlicka, Will, and Wayne Norman. 1995. Return of the Citizen: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in *Theorizing Citizenship*, edited by R. Beiner.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acKinnon, Neil J. 1994. *Symbolic Interactionism as Affect Control*.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acKinnon, Neil J. and D. R. Heise. 1993. "Affect control theory: Delineation and Development", Joseph Berger and morris Zelditch(eds.), *Theoretical Research Programs: Studies in the Growth of Theory 1993*.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rshall, T. H. 1964.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Essays*. 1st ed. Garden City, N.Y.: Doubleday.
- Meilczrek, Adam and Malgorzata Silorska. 2000. *Poland Sweden Mutual Perceptions during the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Institute of Public Affair.
- Morrissey, Marietta. 1992. "Exploring Social Distance in Race and Ethnic Relations Courses." *Teaching Sociology*, Vol. 20, No. 2.: 121-124.
- Okin, S. M. 1999.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arrillo, Vincent N. and Christopher Donoghue. 2005. "Updating the Bogardus Social Distance Studies: A New National Survey." *The Social Science Journal* 42: 257-271.
- Smith, A. 1991. *National Identity*, Penguin Books, London.
- . 2000. *The Nation in History: Historiographical Debates About Ethnicity and Nationalism*, The Menahem Stern Jerusalem Lectures.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Smith-Lovin, Lynn. 1987. "Affect control theory: An assessment",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13: 171-192.
- Stolcke, Verena. 1995. "Talking Culture: New Boundaries, New Rhetorics of Exclusion in Europe". *Current Anthropology* 36(1): 1-24.
- Turner, Bryan S. 1993. Contemporary Problems in the Theory of Citizenship. In *Citizenship and Social Theory*, edited by B. S. Turner. London ;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and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Blackwell.
- Verkuyten, M. 2004. "Everyday Ways of Thinking about Multiculturalism", *Ethnicities*, Vol. 4(1): 53-74, Sage.
- Wimmer, Andreas. 1997, "Explaining Xenophobia and Racism: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Research Approaches", *Ethnic and Racial Studies*, 20 (1), January: 17-41.

## 신문기사

- “‘인종주의’ 몸살 앓는 지구촌...‘백인 우월주의’가 뿌리” 세계일보 (2005. 12. 19)
- “한국인, 외국인 이민자에 가장 우호적” 조선일보 (2007. 10. 06)





## 부 록

Ⅰ 설문지

195

ID AI-5

|  |  |  |  |  |
|--|--|--|--|--|
|  |  |  |  |  |
|--|--|--|--|--|

##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한국인들이 민족과 인종이 다른 외국인이나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님의 의견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되오니 평소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불편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황 정 미  
문 의 처 02-3156-7186

2007년 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Q1) 지 역**

6-7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8 **SQ2) 지역 크기**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군(읍/면)

9 **SQ3) 성 별** 1. 남 성 2. 여 성

**SQ4)** 10-11 실례지만, ○○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세 → 만 19세 미만 만점중단

**본 설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1. 질문지는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 앞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겉 표지를 포함해 1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본 조사의 결과는 연구목적의 통계자료로만 이용될 것이며, ○○님의 응답내용이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관련정책을 위한 귀중한 제언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시간 간여가 다소 걸리더라도 해당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님의 평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1) 최근 들어 한국에서 살기 위해 이주해 오는 외국인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님은 앞으로도 외국인 이주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많이<br>늘어날 것이다<br>1 | 약간<br>늘어날 것이다<br>2 | 현 수준에서<br>유지될 것이다<br>3 | 약간<br>줄어든 것이다<br>4 | 많이<br>줄어든 것이다<br>5 |
|--------------------|--------------------|------------------------|--------------------|--------------------|

문 2) 한국에 이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주목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 목적별로 볼 때 ○○님은 다음과 같은 이주자들의 수가 앞으로도 늘어나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줄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다음 ㉠~㉦까지 순서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먼저, ㉠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 생산기능직 외국인 근로자는요?

|                   | 많이<br>늘어야<br>한다 | 약간<br>늘어야<br>한다 | 현재<br>수준 유지 | 약간<br>줄어야<br>한다 | 많이<br>줄어야<br>한다 |
|-------------------|-----------------|-----------------|-------------|-----------------|-----------------|
| ㉠ 국제결혼 이주여성       | 1               | 2               | 3           | 4               | 5               |
| ㉡ 생산기능직 외국인 근로자   | 1               | 2               | 3           | 4               | 5               |
| ㉢ 전문기술직 외국인 근로자   | 1               | 2               | 3           | 4               | 5               |
| ㉣ 북한에서 온 탈북자(새터민) | 1               | 2               | 3           | 4               | 5               |
| ㉤ 외국인 유학생         | 1               | 2               | 3           | 4               | 5               |
| ㉥ 외국인 사업가, 투자자    | 1               | 2               | 3           | 4               | 5               |

문 3) ○○님은 평소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 각 외국인 이주자 국적(출신지역)별로 "A"에 공감하신다면 1점 쪽으로, "B"에 공감하신다면 9점 쪽으로 기값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1점에서 9점 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                             | A                    | 한없이                               | 매우                   | 꽤                                 | 조금 | 그저<br>그런 | 조금 | 꽤 | 매우 | 한없이 | B |
|-----------------------------|----------------------|-----------------------------------|----------------------|-----------------------------------|----|----------|----|---|----|-----|---|
| ㉠ 조선족<br>(중국동포)             | 좋은<br>영향력 있는<br>능동적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나쁜<br>영향력 없는<br>수동적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   |    |     |   |
| ㉡ 중국인                       | 좋은<br>영향력 있는<br>능동적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나쁜<br>영향력 없는<br>수동적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   |    |     |   |
| ㉢ 일본인                       | 좋은<br>영향력 있는<br>능동적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나쁜<br>영향력 없는<br>수동적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   |    |     |   |
| ㉣ 동남아인<br>(베트남, 태국, 필리핀인 등) | 좋은<br>영향력 있는<br>능동적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나쁜<br>영향력 없는<br>수동적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   |    |     |   |
| ㉤ 탈북자<br>(새터민)              | 좋은<br>영향력 있는<br>능동적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나쁜<br>영향력 없는<br>수동적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   |    |     |   |
| ㉥ 미국인                       | 좋은<br>영향력 있는<br>능동적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나쁜<br>영향력 없는<br>수동적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   |    |     |   |
| ㉦ 남아시아인<br>(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 좋은<br>영향력 있는<br>능동적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나쁜<br>영향력 없는<br>수동적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   |    |     |   |
| ㉧ 몽골인                       | 좋은<br>영향력 있는<br>능동적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나쁜<br>영향력 없는<br>수동적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   |    |     |   |

문 4) ○○님은 이주자들과 다음 ㉠~㉨와 같은 형태의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내용들을 읽고 찬성 또는 반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먼저 '조선족(중국동포)'과 아래와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찬성 | 반대 |
|---|------------------|----|----|
| 가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 1  | 2  |
| 나 | 우리나라에 입국을 금지하는 것 | 1  | 2  |
| 다 |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 1  | 2  |
| 라 | 내 직장에서 동료로 자내는 것 | 1  | 2  |
| 마 |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 1  | 2  |
| 바 | 나와 절친한 친구로 자내는 것 | 1  | 2  |
| 사 |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 1  | 2  |
| 아 |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 1  | 2  |

문5) 그럼, '중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찬성 | 반대 |
|---|------------------|----|----|
| 가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 1  | 2  |
| 나 | 우리나라에 입국을 금지하는 것 | 1  | 2  |
| 다 |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 1  | 2  |
| 라 | 내 직장에서 동료로 자내는 것 | 1  | 2  |
| 마 |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 1  | 2  |
| 바 | 나와 절친한 친구로 자내는 것 | 1  | 2  |
| 사 |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 1  | 2  |
| 아 |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 1  | 2  |

문 7) 다음 '일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찬성 | 반대 |
|---|------------------|----|----|
| 가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 1  | 2  |
| 나 | 우리나라에 입국을 금지하는 것 | 1  | 2  |
| 다 |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 1  | 2  |
| 라 | 내 직장에서 동료로 자내는 것 | 1  | 2  |
| 마 |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 1  | 2  |
| 바 | 나와 절친한 친구로 자내는 것 | 1  | 2  |
| 사 |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 1  | 2  |
| 아 |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 1  | 2  |

문 8)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찬성 | 반대 |
|---|------------------|----|----|
| 가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 1  | 2  |
| 나 | 우리나라에 입국을 금지하는 것 | 1  | 2  |
| 다 |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 1  | 2  |
| 라 | 내 직장에서 동료로 자내는 것 | 1  | 2  |
| 마 |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 1  | 2  |
| 바 | 나와 절친한 친구로 자내는 것 | 1  | 2  |
| 사 |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 1  | 2  |
| 아 |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 1  | 2  |

문 9) ‘북한에서 온 탈북자(새터민)’과 아래와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 찬성 | 반대 |
|----|--------------------|----|----|
| 25 |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 1  | 2  |
| 26 | ㉢ 우리나라에 입국을 금지하는 것 | 1  | 2  |
| 27 | ㉣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 1  | 2  |
| 28 | ㉤ 내 직장에서 동료로 자내는 것 | 1  | 2  |
| 29 | ㉥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 1  | 2  |
| 30 | ㉦ 나와 절친한 친구로 자내는 것 | 1  | 2  |
| 31 | ㉧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 1  | 2  |
| 32 | ㉨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 1  | 2  |

문10) 그럼, ‘미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찬성 | 반대 |
|----|--------------------|----|----|
| 33 |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 1  | 2  |
| 34 | ㉢ 우리나라에 입국을 금지하는 것 | 1  | 2  |
| 35 | ㉣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 1  | 2  |
| 36 | ㉤ 내 직장에서 동료로 자내는 것 | 1  | 2  |
| 37 | ㉥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 1  | 2  |
| 38 | ㉦ 나와 절친한 친구로 자내는 것 | 1  | 2  |
| 39 | ㉧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 1  | 2  |
| 40 | ㉨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 1  | 2  |

문11)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 찬성 | 반대 |
|----|--------------------|----|----|
| 41 |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 1  | 2  |
| 42 | ㉢ 우리나라에 입국을 금지하는 것 | 1  | 2  |
| 43 | ㉣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 1  | 2  |
| 44 | ㉤ 내 직장에서 동료로 자내는 것 | 1  | 2  |
| 45 | ㉥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 1  | 2  |
| 46 | ㉦ 나와 절친한 친구로 자내는 것 | 1  | 2  |
| 47 | ㉧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 1  | 2  |
| 48 | ㉨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 1  | 2  |

문12) 마지막으로, ‘몽골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찬성 | 반대 |
|----|--------------------|----|----|
| 49 |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 1  | 2  |
| 50 | ㉢ 우리나라에 입국을 금지하는 것 | 1  | 2  |
| 51 | ㉣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 1  | 2  |
| 52 | ㉤ 내 직장에서 동료로 자내는 것 | 1  | 2  |
| 53 | ㉥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 1  | 2  |
| 54 | ㉦ 나와 절친한 친구로 자내는 것 | 1  | 2  |
| 55 | ㉧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 1  | 2  |
| 56 | ㉨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 1  | 2  |

문 13) 최근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들어오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님은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다음 주장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4점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   | 매우<br>동의한다 | 동의하는<br>편이다 | 동의하지<br>않는<br>편이다 | 전혀<br>동의하지<br>않는다 |    |
|---|------------|-------------|-------------------|-------------------|----|
| ㉠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라면 당연히 한국 요리를 잘 해야 한다             | 1          | 2           | 3                 | 4                 | 20 |
| ㉡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한 한국 남성은 아내의 모국어를 배워야 한다                 | 1          | 2           | 3                 | 4                 | 1  |
|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는 한국어와 더불어 어머니의 모국어도 배워야 한다            | 1          | 2           | 3                 | 4                 | 1  |
| ㉣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한국 명절과 더불어 이주여성(아내쪽) 모국의 명절이나 풍습도 챙겨야 한다 | 1          | 2           | 3                 | 4                 | 1  |
| ㉤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의 가족 뿐 아니라 고향에 있는 부모나 가족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 1          | 2           | 3                 | 4                 | 20 |

문 14)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님은 이 의견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각각에 대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매우<br>그렇다 | 대체로<br>그렇다 | 보통<br>이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 ㉠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1         | 2          | 3        | 4               | 5               | 11 |
| ㉡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족들을 데려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1         | 2          | 3        | 4               | 5               | 12 |
| ㉢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 1         | 2          | 3        | 4               | 5               | 13 |
| ㉣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은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 1         | 2          | 3        | 4               | 5               | 14 |
| ㉤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 1         | 2          | 3        | 4               | 5               | 15 |
| ㉥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 1         | 2          | 3        | 4               | 5               | 16 |
| ㉦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 1         | 2          | 3        | 4               | 5               | 17 |
| ㉧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다                                | 1         | 2          | 3        | 4               | 5               | 18 |
| ㉨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 1         | 2          | 3        | 4               | 5               | 19 |
| ㉩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에 한국과는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 1         | 2          | 3        | 4               | 5               | 20 |

문 15) 평소 ○○님은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 이주여성, 북한에서 온 탈북자(새터민)** 등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매우<br>그렇다 | 대체로<br>그렇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 ㉠ 외국인 근로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 1         | 2          | 3               | 4               | 21 |
| ㉡ 외국인 근로자는 믿고 일을 맡길 수 없다           | 1         | 2          | 3               | 4               | 22 |
| ㉢ 외국인 근로자가 옆자리에 앉는 것은 피하고 싶다       | 1         | 2          | 3               | 4               | 23 |
| ㉣ 외국인 근로자가 길을 물어오면 되도록 모른 척 하고 싶다  | 1         | 2          | 3               | 4               | 24 |
| ㉤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못 배운 사람이라 아는 것이 적다    | 1         | 2          | 3               | 4               | 25 |
| ㉥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쉽게 이혼 한다              | 1         | 2          | 3               | 4               | 26 |
| ㉦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웃에 사는 것은 피하고 싶다      | 1         | 2          | 3               | 4               | 27 |
| ㉧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말을 걸어오면 불편할 것 같다      | 1         | 2          | 3               | 4               | 28 |
| ㉨ 탈북자(새터민)는 책임감이 없다                | 1         | 2          | 3               | 4               | 29 |
| ㉩ 탈북자(새터민)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 1         | 2          | 3               | 4               | 30 |
| ㉪ 탈북자(새터민)가 내 옆자리에 앉는 것은 피하고 싶다    | 1         | 2          | 3               | 4               | 31 |
| ㉫ 탈북자(새터민)가 길을 물어오면 되도록 모른 척 하고 싶다 | 1         | 2          | 3               | 4               | 32 |

다음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에 대한 ○○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문 16) ○○님은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생활여건**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다음 ㉠~㉣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사이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매우<br>그렇다 | 대체로<br>그렇다 | 보통<br>이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 한국인들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편견이 심한 편이다.            | 1         | 2          | 3        | 4               | 5               |
| ㉡ 외국인 이주자도 열심히 일하면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 1         | 2          | 3        | 4               | 5               |
| ㉢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이나 급여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1         | 2          | 3        | 4               | 5               |

문 17) 다음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입니다. ○○님은 다음 주장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항목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  | 매우<br>동의한다 | 동의하는<br>편이다 | 보통<br>이다 | 동의하지<br>않는<br>편이다 | 전혀<br>동의하지<br>않는다 |
|--|------------|-------------|----------|-------------------|-------------------|
| ㉠ 정부는 이주민 정책을 만들 때 외국인 이주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 ㉡ 한국에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 이주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권 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 ㉣ 외국인 이주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 ㉤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 1          | 2           | 3        | 4                 | 5                 |
| ㉥ 부모의 인종·민족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 ㉦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데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         | 1          | 2           | 3        | 4                 | 5                 |
| ㉧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취업을 위해 정부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 ㉨ 탈북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할 때 우대해 주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문 18)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주자들의 국내 정착 및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님은 이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까지 각각을 읽고 찬성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4점사이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매우<br>찬성한다 | 약간<br>찬성한다 | 약간<br>반대한다 | 매우<br>반대한다 | 잘<br>모르겠다 |
|--|------------|------------|------------|------------|-----------|
| ㉠ 외국인 이주자를 위해 시청, 군청 등 관공서에 외국어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것 | 1          | 2          | 3          | 4          | 8         |
|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외국인 학교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       | 1          | 2          | 3          | 4          | 8         |
| ㉢ 외국인이 자기나라 언어(외국어)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것           | 1          | 2          | 3          | 4          | 8         |
| ㉣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외국어 신문이나 방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        | 1          | 2          | 3          | 4          | 8         |
| ㉤ 제2외국어 교육에 베트남어, 태국어 등 아시아 지역 언어를 포함시키는 것   | 1          | 2          | 3          | 4          | 8         |

다음은 문화적 다양성 및 외국과의 문화교류에 대한 ○○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19) ○○님은 **외국인 이주자의 증대와 문화적 다양성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의 의견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사이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매우<br>그렇다 | 대체로<br>그렇다 | 보통<br>이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           | 1         | 2          | 3        | 4               | 5               |
| ㉡ 우리나라의 인종·종교·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 1         | 2          | 3        | 4               | 5               |
| ㉢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            | 1         | 2          | 3        | 4               | 5               |
| ㉤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종교·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1         | 2          | 3        | 4               | 5               |

문 20) 그럼, ○○님은 **외국과의 문화교류**에 관한 아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점에서 5점사이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매우<br>그렇다 | 대체로<br>그렇다 | 보통<br>이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 외국영화, 음악, 책 등이 많이 들어올수록 한국문화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 1         | 2          | 3        | 4               | 5               |
| ㉡ 외국과의 문화교류는 뚜렷한 경제적 이익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좋다     | 1         | 2          | 3        | 4               | 5               |
| ㉢ 우리나라보다 경제발전이 뒤처진 아시아 국가와의 문화교류도 활발하게 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 ㉤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선진국의 것을 배워야 한다          | 1         | 2          | 3        | 4               | 5               |

문 21) 최근 **다른 국가나 지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님은 평소 다음 국가(혹은 지역)의 문화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요? 각 국가(지역)의 세부 항목별로 관심 정도에 따라 1점에서 4점사이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매우<br>관심있다 | 다소<br>관심있다 | 별로<br>관심없다 | 전혀<br>관심없다 |
|--------------------------------|----------------------|------------|------------|------------|------------|
| ㉠ 동남아시아 국가<br>(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 음식과 요리법              | 1          | 2          | 3          | 4          |
|                                | 대중문화 (영화, TV 프로그램 등) | 1          | 2          | 3          | 4          |
|                                | 공연, 전시, 문학 등 예술분야    | 1          | 2          | 3          | 4          |
|                                | 역사와 문화유산             | 1          | 2          | 3          | 4          |
|                                | 언어                   | 1          | 2          | 3          | 4          |
|                                | 자연풍광, 관광명소           | 1          | 2          | 3          | 4          |
|                                | 사회·경제 문제             | 1          | 2          | 3          | 4          |
| ㉡ 중 국                          | 음식과 요리법              | 1          | 2          | 3          | 4          |
|                                | 대중문화 (영화, TV 프로그램 등) | 1          | 2          | 3          | 4          |
|                                | 공연, 전시, 문학 등 예술분야    | 1          | 2          | 3          | 4          |
|                                | 역사와 문화유산             | 1          | 2          | 3          | 4          |
|                                | 언어                   | 1          | 2          | 3          | 4          |
|                                | 자연풍광, 관광명소           | 1          | 2          | 3          | 4          |
|                                | 사회·경제 문제             | 1          | 2          | 3          | 4          |
| ㉢ 일 본                          | 음식과 요리법              | 1          | 2          | 3          | 4          |
|                                | 대중문화 (영화, TV 프로그램 등) | 1          | 2          | 3          | 4          |
|                                | 공연, 전시, 문학 등 예술분야    | 1          | 2          | 3          | 4          |
|                                | 역사와 문화유산             | 1          | 2          | 3          | 4          |
|                                | 언어                   | 1          | 2          | 3          | 4          |
|                                | 자연풍광, 관광명소           | 1          | 2          | 3          | 4          |
|                                | 사회·경제 문제             | 1          | 2          | 3          | 4          |
| ㉤ 미 국                          | 음식과 요리법              | 1          | 2          | 3          | 4          |
|                                | 대중문화 (영화, TV 프로그램 등) | 1          | 2          | 3          | 4          |
|                                | 공연, 전시, 문학 등 예술분야    | 1          | 2          | 3          | 4          |
|                                | 역사와 문화유산             | 1          | 2          | 3          | 4          |
|                                | 언어                   | 1          | 2          | 3          | 4          |
|                                | 자연풍광, 관광명소           | 1          | 2          | 3          | 4          |
|                                | 사회·경제 문제             | 1          | 2          | 3          | 4          |



다음은 평소 ○○님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22) ○○님은 평소 ‘한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α

|             |              |                |                   |                   |
|-------------|--------------|----------------|-------------------|-------------------|
| 매우<br>자랑스럽다 | 대체로<br>자랑스럽다 | 보통이다/<br>그저그렇다 | 별로<br>자랑스럽지<br>않다 | 전혀<br>자랑스럽지<br>않다 |
| 1           | 2            | 3              | 4                 | 5                 |

문 23) ○○님은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 각각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등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먼저 ㉠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은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얼마나 중요한가요? 다음, ㉡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은요?

|                              | 매우<br>중요하다 | 대체로<br>중요하다 | 별로<br>중요하지<br>않다 | 전혀<br>중요하지<br>않다 |    |
|------------------------------|------------|-------------|------------------|------------------|----|
| ㉠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 1          | 2           | 3                | 4                | 7  |
| ㉡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 1          | 2           | 3                | 4                | 8  |
| ㉢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 1          | 2           | 3                | 4                | 9  |
| ㉣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 1          | 2           | 3                | 4                | 10 |
| ㉤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         | 1          | 2           | 3                | 4                | 11 |
| ㉥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 1          | 2           | 3                | 4                | 12 |
| ㉦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 1          | 2           | 3                | 4                | 13 |
| ㉧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 1          | 2           | 3                | 4                | 14 |
| ㉨ 한국 국적을 갖는 것                | 1          | 2           | 3                | 4                | 15 |
| ㉩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 1          | 2           | 3                | 4                | 16 |

문 24) 우리 민족 및 국가에 대한 아래 의견에 대해 ○○님은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각 항목별로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 매우<br>동의한다 | 동의하는<br>편이다 | 동의하지<br>않는<br>편이다 | 전혀<br>동의하지<br>않는다 |    |
|---|------------|-------------|-------------------|-------------------|----|
| ㉠ 한국이 오랫동안 단일민족 혈통을 유지해온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 1          | 2           | 3                 | 4                 | 17 |
| ㉡ 세계화 시대에는 한국인들 간의 협력보다 국적과 인종, 민족을 넘어선<br>협력이 더 중요하다 | 1          | 2           | 3                 | 4                 | 18 |
| ㉢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 1          | 2           | 3                 | 4                 | 19 |
| ㉣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될 것이다                | 1          | 2           | 3                 | 4                 | 20 |

이번에는 ○○님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사회적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문 25) ○○님은 평소 **노숙자나 동성애자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음을 읽고 공감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4점사이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노숙자는 게으르고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25 |
| ㉡ 노숙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 1      | 2       | 3         | 4         | 25 |
| ㉢ 노숙자가 내 옆자리에 앉는 것은 피하고 싶다            | 1      | 2       | 3         | 4         | 25 |
| ㉣ 노숙자가 길을 물어오면 되도록 모른 척 하고 싶다         | 1      | 2       | 3         | 4         | 25 |
| ㉤ 동성애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 1      | 2       | 3         | 4         | 25 |
| ㉥ 동성애자는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다               | 1      | 2       | 3         | 4         | 25 |
| ㉦ 동성애자가 이웃에 사는 것은 피하고 싶다              | 1      | 2       | 3         | 4         | 25 |
| ㉧ 동성애자가 말을 걸어오면 불편할 것 같다              | 1      | 2       | 3         | 4         | 25 |

문 26) ○○님은 우리사회가 **다음과 같은 형태의 공개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는 허용하면 안된다고 보십니까?**

㉠~㉣ 각각에 대해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 '허용하는 것이 좋다', '반반이다/보통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연히 허용하면 안된다' 등으로 구별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 | 허용하는 것이 좋다 | 반반/보통이다 |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당연히 허용하면 안된다 |    |
|------------------------------------|-------------|------------|---------|---------------|--------------|----|
| ㉠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공개집회                 | 1           | 2          | 3       | 4             | 5            | 25 |
| ㉡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개집회 | 1           | 2          | 3       | 4             | 5            | 25 |
| ㉢ 힘으로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개집회       | 1           | 2          | 3       | 4             | 5            | 25 |
| ㉣ 동성애자들의 공개집회                      | 1           | 2          | 3       | 4             | 5            | 25 |

문 27) ○○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대간, 지역간 및 외국인 이주자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별로 심각한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 사이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매우 심각하다 | 다소 심각하다 | 보통이다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 ㉠ 세대간 갈등       | 1       | 2       | 3    | 4          | 5          | 25 |
| ㉡ 지역간 갈등       | 1       | 2       | 3    | 4          | 5          | 25 |
| ㉢ 외국인 이주자와의 갈등 | 1       | 2       | 3    | 4          | 5          | 25 |

문27-1)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십니까? 혹은 완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다음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 다소 심각해질 것이다 |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 다소 완화될 것이다 | 매우 완화될 것이다 |    |
|----------------|-------------|-------------|---------------|------------|------------|----|
| ㉠ 세대간 갈등       | 1           | 2           | 3             | 4          | 5          | 25 |
| ㉡ 지역간 갈등       | 1           | 2           | 3             | 4          | 5          | 25 |
| ㉢ 외국인 이주자와의 갈등 | 1           | 2           | 3             | 4          | 5          | 25 |

다음은 평소 ○○님의 사회의식 및 가치관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 28) ○○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입니까? 혹은 진보적입니까?

|                  |                     |                          |                     |                  |
|------------------|---------------------|--------------------------|---------------------|------------------|
| 매우<br>보수적이다<br>1 | 다소<br>보수적인 편이다<br>2 | 반반이다/보수도<br>진보도 아니다<br>3 | 다소<br>진보적인 편이다<br>4 | 매우<br>진보적이다<br>5 |
|------------------|---------------------|--------------------------|---------------------|------------------|

문 29) 그럼, 평소 ○○님 자신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매우<br>보수적이다<br>1 | 다소<br>보수적인 편이다<br>2 | 반반이다/보수도<br>진보도 아니다<br>3 | 다소<br>진보적인 편이다<br>4 | 매우<br>진보적이다<br>5 |
|------------------|---------------------|--------------------------|---------------------|------------------|

문 30)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정치적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님은 지난 몇 년간 아래와 같은 행동을 취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은 앞으로 취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행동(계획)여부에 따라 1점에서 4점사이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먼 과거에<br>해본 적이<br>있다 | 최근 3년간<br>해본 적이<br>있다 | 이전에 해본<br>적은 없지만<br>앞으로<br>할 수 있다 | 이전에도<br>해본 적이 없고<br>앞으로도<br>절대 안 할<br>것이다 |
|--|----------------------|-----------------------|-----------------------------------|---|
| ㉠ 주변사람들과 정치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하기                                  | 1                    | 2                     | 3                                 | 4   |
| ㉡ 탄원서에 서명하기  | 1                    | 2                     | 3                                 | 4   |
| ㉢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회원가입 또는 후원                                    | 1                    | 2                     | 3                                 | 4   |
| ㉣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기   | 1                    | 2                     | 3                                 | 4   |
| ㉤ 신문이나 방송매체에 내 의견 전달하기(전화, 방문, 인터넷 포함)                     | 1                    | 2                     | 3                                 | 4   |
| ㉥ 시민단체나 정당에 내 의견 전달하기(전화, 방문, 인터넷 포함)                      | 1                    | 2                     | 3                                 | 4   |
| ㉦ 국가기관(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법원, 청와대 등)에 내 의견 전달하기(전화, 방문, 인터넷 포함) | 1                    | 2                     | 3                                 | 4   |

문 31) ○○님은 아래 ㉠~㉦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1점에서 5점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                                    | 매우<br>그렇다 | 대체로<br>그렇다 | 보통<br>이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여야 한다                  | 1         | 2          | 3        | 4               | 5               |
| ㉡ 통일에 대비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   | 1         | 2          | 3        | 4               | 5               |
| ㉢ 정부는 소득 분배보다도 경제성장에 주력하여야 한다      | 1         | 2          | 3        | 4               | 5               |
| ㉣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줄이기 위해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 | 1         | 2          | 3        | 4               | 5               |
| ㉤ 회사 경영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여야 한다          | 1         | 2          | 3        | 4               | 5               |
| ㉥ 사유재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문 32) ○○님은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에 대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 매우<br>그렇다 | 다소<br>그렇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 맞벌이 가정에 육아문제가 생기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직장을 쉬거나 그만두어야 한다 | 1         | 2         | 3               | 4               |
| ㉡ 부부는 결혼 중에 얻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 1         | 2         | 3               | 4               |
| ㉢ 여성은 결단력이 부족하여 중요한 지위를 맡기 어렵다                 | 1         | 2         | 3               | 4               |
| ㉣ 여성은 자신의 외모나 매력을 이용해서 남성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한다    | 1         | 2         | 3               | 4               |
| ㉤ 여성은 평등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남성 이상의 특별대우를 요구한다         | 1         | 2         | 3               |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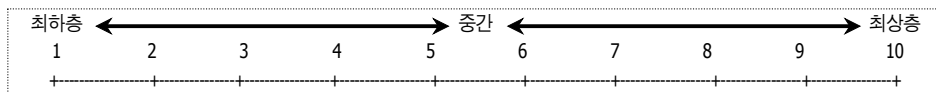
문 33) 우리사회의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님은 아래의 사항들이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한 자질로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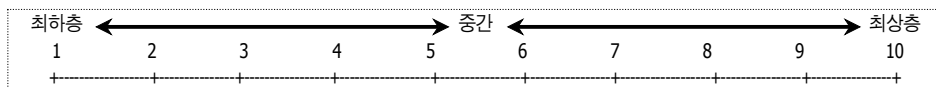
|   | 매우<br>중요하다 | 상당히<br>중요하다 | 약간<br>중요하다 | 보통<br>이다 | 약간<br>중요하지<br>않다 | 상당히<br>중요하지<br>않다 | 전혀<br>중요하지<br>않다 |
|---|------------|-------------|------------|----------|------------------|-------------------|------------------|
| ㉠ 모든 선거에 빠지지 않고 투표하는 것                            | 1          | 2           | 3          | 4        | 5                | 6                 | 7                |
| ㉡ 탈세를 하지 않는 것                                     | 1          | 2           | 3          | 4        | 5                | 6                 | 7                |
| ㉢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 1          | 2           | 3          | 4        | 5                | 6                 | 7                |
| ㉣ 항상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                                 | 1          | 2           | 3          | 4        | 5                | 6                 | 7                |
| ㉤ 사회단체 등에 가입해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                      | 1          | 2           | 3          | 4        | 5                | 6                 | 7                |
| ㉥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견해를 경청하는 것                        | 1          | 2           | 3          | 4        | 5                | 6                 | 7                |
| ㉦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                       | 1          | 2           | 3          | 4        | 5                | 6                 | 7                |
| ㉧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예: 빈곤국 아동지원 등) | 1          | 2           | 3          | 4        | 5                | 6                 | 7                |

문34-1)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 최상층을 ‘10’이라 할 때, **현재** ○○님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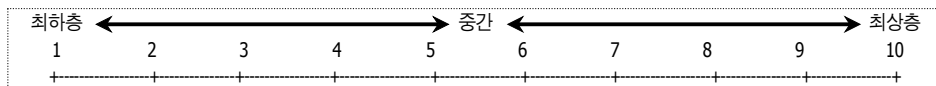
다음을 보시고 1에서 10사이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문34-2) 그럼, **과거 5년 전에는**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1에서 10사이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문34-3) 그럼,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디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6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문 35) ○○님은 평소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 중 ○○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 동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 가급적 하도록 한다 | 굳이 동일할 필요 없다 | 동일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
|---------------|------------|--------------|----------------|
| 1             | 2          | 3            | 4              |
|               |            |              |                |

마지막으로 자료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DQ 1) OO님은 지금까지 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다 → DQ1-1)로 갈 것                      2. 없다 → DQ2)로 갈 것

DQ1-1) (DQ1)에서 1번 응답자만) 그럼, ○○님이 방문하신 국가(혹은 지역)는 어디 어디였습니까? 다음 중 **모두** 골라 주십시오.

1. 중국
2. 일본
3. 동남아시아 지역(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4. 남아시아 지역(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5. 태평양 지역(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태평양지역)
6. 중동 지역(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7. 아프리카 지역
8. 미국, 캐나다
9. 중남미(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10. 러시아, 동유럽
11. 서유럽(독일, 영국, 프랑스 등)
12.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DQ1-2) 그럼, ○○님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국가(혹은 지역)는 어디입니까? 위 DQ1-1)에서 응답하신 방문국가(혹은 지역) 중 하나만 골라 번호 말씀하여 주십시오.

■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국가(지역) : 

|  |  |
|--|--|
|  |  |
|--|--|

DQ1-3) 그럼, 위 DQ1-2)에서 응답하신 국가(혹은 지역)에서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한 달 미만
2. 한 달 이상 ~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 1년 미만
4. 1년 이상 ~ 3년 미만
5. 3년 이상

DQ 2) (전체 응답자) 현재 OO님의 댁 근처에는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까?

1. 살고 있다 → DQ2-1)로 갈 것      2. 살고 있지 않다 → DQ3)으로 갈 것

DQ2-1) (DQ2)에서 1번 응답자만 그럼,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 중국인
2. 조선족
3. 동남아인(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4. 일본인
5. 미국인
6. 몽골인
7. 파키스탄·방글라데시인
8. 중동·아프리카인
9. 유럽인
10.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DQ 3) (전체 응답자) 00님은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나 아는 외국인이 있습니까?

1. 있다 → **DQ3-1)로 갈 것**                      2. 없다 → **DQ4)로 갈 것**

DQ3-1) (DQ3)에서 1번 응답자만) 그럼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다음 중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 주십시오.

1. 중국인  
2. 조선족  
3. 동남아인(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4. 일본인  
5. 미국인  
6. 몽골인  
7.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인  
8. 중동 • 아프리카인  
9. 유럽인  
10.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DQ 4) **(전체 응답자)** 실례지만, ○○님은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럼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1. 천주교  
2. 기독교  
3. 불교
4. 이슬람교  
5.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9. 무교(종교없음)

DQ 5)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면접원: 중퇴, 재학, 수료 모두 졸업에 포함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5. 대학원 졸업 이상

DQ 6) 실례지만, ○○님이 현재 종사하고 계신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종사자 포함)
2.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자)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가전제품 A/S기술자, 숙련공 등)
5. 일반작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파출부, 육체노동 등)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공무원, 교장, 기업체부장 이상의 직위 등)
8.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9. 전업주부
10. 학생
11. 무직
12. 기타 (적어 주십시오 : \_\_\_\_\_)

DQ 7) ○○님 닥의 한 달 총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월평균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 100만원 이하
2. 101 ~ 150만원
3. 151 ~ 200만원
4. 201 ~ 250만원
5. 251 ~ 300만원
6. 301 ~ 400만원
7. 401 ~ 500만원
8. 501 ~ 700만원
9. 701 ~ 1000만원
10. 1001만원 이상

♠장시간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소중히 쓰겠습니다. ♠

| 면접후기록                         |  |         |                        |       |
|-------------------------------|--|---------|------------------------|-------|
| 응답자 주소 <small>100-101</small> | 시·도  | 시·군·구   |                        | 읍·면·동 |
|                               |  |         |                        |       |
| 응답자 이름                        |  | 응답자 연락처 | (    )(    )(    )     |       |
| 협조 정도                         | 1. 상 2. 중 3. 하 <small>112</small>                        | 특이사항    |                        |       |
| 응답 신뢰도                        | 1. 상 2. 중 3. 하 <small>113</small>                        |         |                        |       |
| 면접장소                          | 1. 방 2. 거실/마루 3. 기타 (적을 것: _____) <small>114-115</small> |         |                        |       |
| 면접원 이름                        |  | 면접원 ID  | <small>116-119</small> |       |
| Supervisor                    |  | 검증원     |                        |       |
| <small>120-122</small>        |  |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2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

2007년 12월 26일 인쇄  
2007년 12월 28일 발행

발행인 : 김 경 애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

|                        |            |              |
|------------------------|------------|--------------|
| ISBN 978-89-8491-207-6 | 94330      | <정가 13,000원> |
| 978-89-8491-205-2      | 94330 (세트) |              |